Jeonbuk State Institute

정책연구

2026-15

청년 지원정책의 유기적 연계 실태와 전북형 정착 경로 지원 방안 연구

Building Coherent Youth Support Systems: Pathways to Settlement in Jeonbuk

전희진 최지훈

Jthink 전북연구원

설립목적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및 정책대안의 모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의 연구용역 수탁
-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연구진 소개

전희진

University of Michigan 사회학 박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BK21 사업단 박사후 연구원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지훈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 박사
전북연구원 연구원

Jeonbuk State Institute

정책연구

2026-15

청년 지원정책의 유기적 연계 실태와 전북형 정착 경로 지원 방안 연구

Building Coherent Youth Support Systems: Pathways to Settlement in Jeonbuk

전희진 최지훈

jthink 전북연구원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 구 책 임	전희진 | 책임연구위원	연구총괄
공 동 연 구	최지훈 | 연구원	2장 3절, 3장 3절, 연구지원

자 문 위 원
손헌일 |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수영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로컬창업본부장
임우연 | 충남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위원
양원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
추주희 | 전북대학교 교수
황경란 | 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

연구관리 코드 : 26JU07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 약
SUMMARY

1. 연구목적 및 방법

▌연구의 배경과 목적

○ 국무조정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이 지역 밀착형 정주 여건 강화와 청년 주도의 지역 삶 기획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정부가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으로 청년마을 고도화 및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강조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 정주 모델 정립이 요구됨

○ 전북자치도는 청년공동체·청년마을 조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재정 의존형 지원 방식은 지원 중단 시 청년의 지역 이탈을 야기하는 활동 절벽 현상을 반복시키고 있어, 행정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간 활동을 지속해 온 전북 청년 공동체를 대상으로, 특정 개인의 역량에 귀속되지 않고 정책적으로 재현 가능한 환경적·시스템적 성공 요인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둠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인구감소지역 대응 체계를 청년 지원의 핵심 연계 축으로 설정하여, 청년의 자생적 활동을 법·제도적 근거를 갖춘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직접 연계하는 경로를 제시함

▌연구 방법

○ 문헌 및 정책 분석 — 중앙부처·전북자치도·시군의 청년 지원사업 체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기조를 검토하고, 전북 청년 인구 및 정주 현황을 분석함

○ 심층면접 조사 — 전북 지역 청년마을 및 청년공동체 운영 주체와 정책·중간지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면접을 실시함

○ 사례 교차 분석 — 면접 대상인 청년단체를 정착 방식(스며들기/결합하기), 외부 인구 유입 기제, 자립의 재정의, 관계 자본의 축적 경로라는 횡단 분석 틀로 재구성함

2. 결론 및 정책제언

▌핵심 진단 — 성패를 가른 조건은 청년의 역량 외부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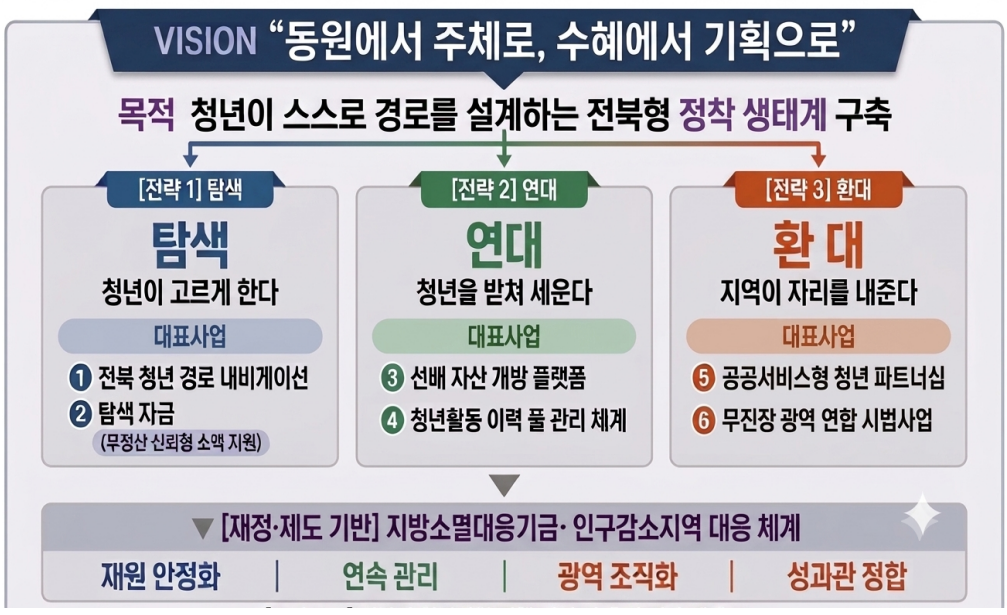
○ 청년단체의 성장은 행정이 상정한 단일 지원 라인(공동체활성화 → 생생아이디어 → 전북형 청년마을 → 행안부 청년마을)을 따르지 않았으며, 청년이 중앙부처·도·시군·민간 재원을 스스로 접촉하며 자기 조건에 맞는 사업을 이어 붙인 결과였음

○ 성공의 공통분모는 자금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 자본과 그것을 매개한 사람이었으며, 선행 관계 자본의 유무, 주거 공급 여부, 재정 운용 방식, 담당자·멘토의 성향 등 청년이 통제할 수 없는 조건이 성패를 갈랐음

○ 정책의 과제는 없던 주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작동하는 주체성이 소수의 역량과 인맥에 의존하지 않도록 조건을 갖추는 데 있음

▌정책 비전과 추진 전략

[전북형 청년지원 정책 비전 및 추진 전략]



차 례
CONTENTS

요약 ····· i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범위 및 연구 내용 ····· 5
3. 연구 방법 및 연구 기대효과 ····· 9

제2장 청년 정주 관련 선행연구와 국내·외 사례 검토

1. 선행연구 고찰 ····· 15
2. 국내·외 사례 ····· 25
3. 선도 사례의 사후 진단 : 경로 분화와 한계 ····· 35

제3장 청년정책 환경과 전북 청년의 실태

1. 청년정책의 흐름과 지역사회 혁신 생태계 진단 ····· 41
2. 전북 청년인구 현황 및 특성 ····· 52

3. 전북 청년 지원정책의 유형별 현황 및 과제 ····· 66

제4장 전북 청년 단체 활동 사례 심층분석

1. 심층면접 개요 ····· 83

2. 청년 활동 사례 분석 ····· 90

3. 시사점 ····· 110

제5장 결론: 전북형 청년 정착 경로와 정책 제언

1. 전북형 청년지원 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 ····· 119

2. 전략별 대표사업과 실행 기반 ····· 131

참고문헌 ····· 143

표 차 례
LIST OF TABLES

[표 2-1] 청년활동 관련 선행 연구 ····· 20
[표 2-2]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개요 및 현황 ····· 25
[표 2-3]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개요 및 현황 ····· 28
[표 2-4] 스페인 '몬드라곤(Mondragon) 모델' 개요 및 특징 ····· 32
[표 2-5] 경북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개요 및 특징 ····· 35
[표 2-6] 전남 목포 '괜찮아마을' 개요 및 특징 ····· 36
[표 2-7] 충남 서천군 한산면 삶기술학교 개요 및 특징 ····· 37
[표 2-8] 청년 활동 유형별 동력과 지속 가능성 ····· 37

[표 3-1]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현황 ····· 46
[표 3-2] 전국 및 전북 청년인구 규모 및 비중 추이(2016~2025) ····· 52
[표 3-3] 전북 연령별 청년인구 성별 비중(2025) ····· 54
[표 3-4] 전북 청년인구 이동 추이(2016~2025) ····· 56
[표 3-5] 전북 청년인구 성별*연령별 이동률(2025) ····· 57
[표 3-6] 전북 청년 전입 사유 현황(2016~2025) ····· 59
[표 3-7] 경제적 자립정도에 따른 정주의지 ····· 61
[표 3-8] 사회적 자본 보유 정도에 따른 정주의지 ····· 64
[표 3-9] [청년 공동체 및 지역 활력]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 66
[표 3-10] [청년 공동체 및 지역 활력]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 67
[표 3-11] [청년 공동체 및 지역 활력] 농생명기반 청년예술인 활동지원사업 ·· 68
[표 3-12] [청년 공동체 및 지역 활력]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축제 ····· 68
[표 3-13] [지역 거점 및 네트워크] 청년 소통공간 활성화 사업 ····· 69
[표 3-14] [맞춤형 활동 및 수당]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 71
[표 3-15] [맞춤형 활동 및 수당]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 72

[표 3-16] [맞춤형 활동 및 수당]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 73
[표 3-17] [정책 참여 및 거버넌스] 전북청년정책참여단 ····· 75
[표 3-18] [정책 참여 및 거버넌스]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 ····· 76
[표 3-19] [정책 참여 및 거버넌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77
[표 3-20] [정책 참여 및 거버넌스] 청년참여예산 운영 ····· 78
[표 3-21] [지역 거점 및 네트워크] 전북청년허브센터 운영 ····· 79

[표 4-1] 청년 활동관련 심층면접자 및 자문위원 리스트 ····· 85
[표 4-2] 전북 청년 사업가/활동가 대상 심층면접 질문지(안) ····· 87
[표 4-3] 전북 청년 단체 성장 유형별 핵심 자본 및 정책 매칭 구조 ····· 96

[표 5-1] 대표사업 ①: 전북 청년 경로 내비게이션 ····· 132
[표 5-2] 대표사업 ②: 탐색 자금 ····· 133
[표 5-3] 대표사업 ③: 선배 자산 개방 플랫폼 ····· 134
[표 5-4] 대표사업 ④: 청년활동 이력 풀(pool) 관리 체계 ····· 135
[표 5-5] 대표사업 ⑤: 공공서비스형 청년 파트너십 ····· 137
[표 5-6] 대표사업 ⑥: 무진장 광역 연합 시범사업 ····· 138

그 림 차 례
LIST OF FIGURES

[그림 3-1] 제2차 청년정책 추진방향 체계 ····· 43
[그림 3-2] 전국 및 전북 청년인구 규모 추이(2016~2025) ····· 53
[그림 3-3] 전북 시군별 청년인구 및 비중(2025) ····· 53
[그림 3-4] 전북 청년인구 성별*연령별 비중(2025) ····· 54
[그림 3-5] 전북 청년 장래인구 추계(2025~2050) ····· 55
[그림 3-6] 전북 청년인구 순이동 현황 ····· 57
[그림 3-7] 전국 시도별 시도간 전출자 중 청년 비중(2025) ····· 58
[그림 3-8] 전북 청년 전입 사유 구성비 추이(2016~2025) ····· 60
[그림 3-9] 전북 청년의 경제적 자립 정도에 따른 계속 거주 의향률 ····· 62
[그림 3-10] 전북 청년의 사회적자본 보유 정도에 따른 계속 거주 의향률 ·····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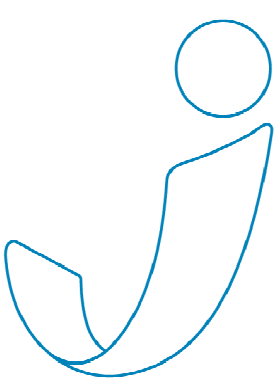
[그림 4-1] 장수 ROCK N RUN 회사 소개서 중 회사 연혁 ····· 94
[그림 4-2] 죽산면 죽산 삶거리 지도 ····· 99

[그림 5-1] 전북형 청년지원 정책 비전 및 추진 전략 체계도 ····· 120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및 연구 기대효과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국무조정실의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은 정책 대상을 일반 청년으로 확장하고, 지역 밀착형 정주 여건 강화를 통해 청년이 주도적으로 지역 삶을 기획하는 모두의 청년정책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함

○ 정부가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으로 청년마을 고도화 및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강조함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의 자생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정주 모델 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함

○ 전북자치도는 그간 청년공동체 및 청년마을 조성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정책적 외연을 확장해 왔으나, 대개 한시적 재정 지원에 편중된 구조로 인해 지원 종료 후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지속됨

○ 이러한 재정 의존형 지원 방식은 지원 중단 시 청년들의 지역 이탈을 야기하는 활동 절벽 현상을 반복시키고 있어, 청년들이 가진 내부적 관계망과 신뢰 자산을 안정적 소득 창출 및 산업적 자립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선순환 구조 설계가 필요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관련 기본계획이 생활인구·관계인구 확충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제도적 기반으로 명문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을 체계화함에 따라, 청년의 자생적 활동을 법·제도적 근거를 갖춘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직접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 경로가 마련됨

○ 행정안전부의 20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기조가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 주체'의 활성화를 통한 정주 인구 삶의 질 향상과 로컬 생태계 구축에 주목하고 있는 현시점은 매우 고무적임. 기금의 체계적인 재정 지원과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호혜적 경

제 주체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청년들이 지역의 결핍을 기회로 삼아 활동 외연을 산업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재원·제도 기반이 됨. 이에 본 연구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인구감소지역 대응 체계를 청년 자립 지원의 핵심 연계 축으로 설정함

○ 최근 정부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로컬 창업가를 집중 발굴하고 창업 리스크를 국가가 함께 분담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발표한 것은, 청년들의 지역 활동을 단순한 소규모 실험을 넘어 시장 경쟁력을 갖춘 '산업 주체'로 재정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정책적 모멘텀을 제공함(관계부처합동, 2026)

○ 전북 내 자생적 공동체들이 가진 신뢰 자산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거점 보육 체계와 결합될 때, 대형 국책 사업 및 지역 펀드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 교육부의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또한 정주형 인재 양성과 성과·자생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청년의 산업적 자립을 지역 대학 지원 거버넌스와 결합할 수 있는 보완적 연계 가능성을 지님

○ 본 연구는 이러한 거시적 정책 변화에 발맞추어 청년들의 자생적 시도가 안정적인 지역 산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정책적 가교 모델을 제안하고자 함

나. 연구 목적

○ 행정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에서 장기간 활동을 지속해 온 전북 청년 공동체 사례를 분석하여, 이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서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안착할 수 있었던 실질적인 생존 비결과 내부적 동인 규명

○ 청년 간의 상호 호혜적 관계망(사회자본)과 신뢰 자산이 어떻게 경제적 불확실성을 보완하고, 나아가 안정적 소득 창출과 산업적 자립의 토대로 전환되는지 그 작동 메커니즘 분석

○ 성공 사례에 국한하지 않고 공공 재원의 단절 이후 활동이 축소되거나 중단된 사례를

함께 분석하여, 특정 청년 개인의 역량에 귀속되지 않고 정책적으로 재현 가능한 환경적·시스템적 성공 요인을 규명함

○ 청년의 성장 단계와 지역 특성에 맞춰,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 체계를 핵심 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분절된 범부처 지원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기반 위에서 청년들이 사회연대경제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전북형 청년 정책 연계·활용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자 함

○ 수혜 중심의 단기적 정책 구조를 지속 가능한 자생적 정주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 제시함

○ 이러한 목적 아래 본 연구는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온 청년 활동 지원 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인구감소지역 대응 체계를 축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틀을 마련하고, 청년의 신뢰 자산과 관계망이 안정적 소득과 산업적 자립으로 전환되는 전북형 청년 정착 경로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함

2. 연구 범위 및 연구 내용

가. 연구 대상의 범위

○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는 청년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 관련 조례가 정하는 연령 범위(18세이상 39세)에 속하는 자 가운데, 개인 단위로 취업이나 주거 지원을 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팀 또는 단체를 이루어 지역에서 활동을 지속해 온 청년 활동 주체임

- 정책의 대상 단위를 청년 개인이 아니라 청년이 구성한 팀과 단체에 두는 까닭은 전북자치도의 청년 지원사업 다수가 단체 단위로 설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착 여부를 가른 관계 자본 역시 개인이 아니라 조직 단위에서 축적되고 이전되기 때문임

○ 청년이 지역과 맺는 관계의 형태에 따라 지역에서 나고 자라 계속 활동해 온 지역청년과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유입청년, 그리고 출향한 뒤 돌아온 귀향청년으로 구분하며, 이 중 유입청년과 귀향청년의 정착 경로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는데, 이는 지역청년의 정주가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연구의 질문이 지역과의 관계가 새로 형성되는 과정에 정책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가에 놓여 있기 때문임

○ 대상 설정에 따라 본 연구가 다루는 정책의 범위도 청년 개인을 향한 지원이 아니라 청년 단체의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되며, 주거와 일자리 정책 등은 이 활동의 지속을 좌우하는 조건으로서 다루어짐

나. 전북 청년 정책의 지속성 저해 요인 진단 및 국내외 사례 분석

▌현행 전북형 청년 지원 사업의 성과와 발전적 한계 분석

○ 전북자치도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생생 아이디어 사업, 전북형 청년마을 등 기존 사업이 거둔 양적·질적 성과(유입 인구, 활동 만족도 등)를 정리하여 정책적 기반으로서의 사업 성과 검토

○ 국가적 차원의 예산 구조상 발생하는 한시적 지원의 특성이 현장 청년들의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적 갭'의 분석

○ 현장 청년 주체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행 정책이 가진 강점을 극대화하고 지원 종료 이후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 수요 파악

▌도내 자생적 정주 생태계 사례 분석 및 모델화

○ 전북자치도 내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작동 중인 주요 청년 정주 사례(주체 협업형, 인프라 활용형, 정서·로컬 브랜딩형 등)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 시행

○ 특히 도내 청년 활동 주체 중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및 전북형 청년마을 사업을 수행한 단체에 조사를 집중하였음

- 연구의 질문이 청년이 어떤 경로를 거쳐 정착에 이르는가에 있으므로 실제로 정착에 이른 경로를 역추적할 수 있는 사례가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하며, 정착의 경로를 밟지 않은 사례로는 그 경로를 복원할 수 없음
- 청년마을 수행 단체는 여러 부처와 행정 층위의 지원사업을 경유한 이력이 축적되어 있어 사업 간 연계와 단절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관찰할 수 있으며, 단일 사업만을 경험한 주체로는 연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움
- 다년간 지원이 이루어지고 종료된 사업이어서 지원이 끝난 이후의 경과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활동 절벽 현상을 규명하려는 연구의 목적에 직접 부합함

○ 이러한 대상 설계는 이미 선정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주체에 편중되는 결과를 낳으므로, 지원사업에 진입하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이탈한 청년의 경험이 누락될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청년사업 관계자들의 자문으로 보완하고자 함

○ 도내 우수 주체들의 생존 경로, 거버넌스 형태, 정착 요인을 분석하여 전북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시사점 도출 (타 지역 사례는 거시적 트렌드 파악을 위한 서면 조사 방식으로 보완)

다. 자립형 정주 생태계 모델 발굴

▌청년 공동체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대안적 방향 모색

○ 단순 활동 지원이나 단편적인 수익 모델 중심의 접근을 넘어, 사회연대경제 주체(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로의 전환과 지역 내 신뢰 자산·상호 호혜적 관계망을 산업적 경쟁력과 결합한 포괄적 형태의 자생적 정주 생태계 비전 제시

○ 청년들의 활동이 지역 내 안정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부처 사업(중기부, 고용부 등)과 연계한 단계별 자립 이행 경로 구상

▌지역 자원 연계형 청년 정주 모델 탐색

○ 지역 내 유휴 자산(공간, 시설 등) 및 로컬 자원과 청년의 크리에이팅 역량을 결합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청년의 정착을 돕는 지산학(지자체·산업·대학) 협력 기반의 정주 모델 탐색

○ 현장 인터뷰 및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청년 조직의 내적 역량과 외적 지원 체계(지방소멸대응기금·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 등)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미래 연계 시나리오 제안

▌관계 자산의 경제적 전환 및 관계인구 관리 전략

○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하여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환대받는 존재임을 체감하게 하는 관계 형성 기반이, 지역 활동에 대한 소속감을 넘어 안정적 정착과 경제적 자립의 토대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 브랜딩 전략 제안

○ 일회성 방문객을 넘어 지역과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관계인구'를 실질적인 정주·경제 인력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계 자산 관리 가이드라인 및 정책적 지원 방향 모색

라. 범부처 자원 연계 및 정책 시너지 창출 전략

▌다층적 정책 자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전북형 통합 모델 방향 제안

○ 부처별로 산재한 청년 지원 자원들을 전북의 지역적 특성에 맞춰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 정책 프레임워크 제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축으로 한 범부처 사업 연계 및 정책 수혜 효율화 방안 구상

○ 행정안전부(지방소멸대응기금·공동체), 중소벤처기업부(창업), 고용노동부(일경험) 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 체계를 중심으로 연계하여, 청년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재정적·공간적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확장할 수 있는 연계 가이드라인 구상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관계인

구 확충 방향을 전북의 지역 맥락에 맞게 구체화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실무 연계 방안 도출(중장기적으로 지역 대학 지원 체계인 앵커와의 연계 가능성도 병행 검토)

▌지산학 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정주 지원 체계 및 제도적 근거 마련

○ 지자체(도·시군), 지역 기업, 대학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전북형 지산학 정착 협력 체계의 운영 모델 제안

○ 제안된 모델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관련 조례 검토,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등) 및 단계별 정책 이행 가이드라인 제시

3. 연구 방법 및 연구 기대효과

가. 연구 방법

1) 정보조사 및 분석 방법

▌국내외 정책 사례 및 유관 사업 지침 분석

○ 범정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 및 전북자치도 청년정책 관련 중장기 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정합성 검토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기본계획 및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지침(투자계획 수립 기준 등), 도내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주요 사업 지침을 분석하여 지원 종료 후 자생력을 가로막는 행정적 병목 구간 및 제도적 사각지대를 진단함

▌청년 실태 분석을 위한 기초 통계 및 청년 활동 지원 사업 분석

○ 통계청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전북 청년인구 추이, 유입·유출 통계 등 전북지역 청년 현황 분석

○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등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북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신뢰 자산)과 정주 의사 간의 상관관계 분석 등으로 정책적 근거 마련

○ 청년공동체 활성화 등 주요 사업의 지침 분석을 통해 사업 참여자, 효과 등에 대한 기초 자료 분석

2) 심층 면접조사 및 전문가 자문

▌도내 청년 주체별 심층 면담 및 FGI 시행

○ **조사대상:** 전북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청년 주체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표적 집단 면접(FGI)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총 12명의 청년 주체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함

- 유형 ① 자생 구조 구축 주체: 행정 지원 종료 후에도 도내에서 자생적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청년 대표
- 유형 ② 한계·정체 주체: 활동 지속 의지가 있으나 재정·인력·규제 장벽에 직면한 청년 대표
- 유형 ③ 전환·제도적 주체: 정책적 요인이나 환경 변화로 활동을 멈추거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 중인 청년 대표
- 이러한 유형 구분은 조직에 고정적으로 부여되는 속성이 아니라 조사 시점의 상태를 기술한 잠정적 분류로서, 청년단체의 위치는 사업의 선정과 종료, 인력의 이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주요내용:** 활동을 멈추게 한 결정적 요인(브레이크 포인트),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에 머물게 하는 회복탄성력의 기제, 실패를 경험한 청년의 재도전을 가능케 하는 최소 안전망 등을 분석하여, 개인 역량과 구분되는 재현 가능한 성공 요건 도출

▌현장 실무자 및 사회적경제·인구대응 전문가 자문

○ **자문 대상**: 연구 전반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 영역의 실무 전문가 그룹으로 자문진 구성

- 도·시군 정책 실무자: 전북자치도 및 도내 시·군 청년정책 담당 팀장 및 주무관, 전북청년허브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실무책임자
- 인구감소 대응 전문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 전문기관·지역 연구원 전문가
- 사회적경제 및 중간 지원 전문가: 지역 내에서 청년들의 사회연대경제 주체(협동조합, 마을기업 등)로의 전환을 다년간 컨설팅해 온 현장 전문가
- 지역 인재양성·산학협력 전문가: 지역 대학 지원 체계(앵커) 관련 실무자 등 중장기 연계 검토를 위한 자문 인력

○ **자문 내용**: 도내 청년들의 활동 외연 확장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과의 연계 가능성 타진(중장기 앵커 연계 포함), 범부처 사업 연계 가이드라인의 현장 수용성 및 실천력을 검증함

3) 서면 전문가 자문을 통한 결론 검증

○ 심층면접과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잠정 결론 및 정책 제언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6년 7월 청년정책과 지역정책, 사회적경제 분야의 연구자와 현장 활동가 8인을 대상으로 서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함

○ 자문지는 연구의 잠정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형식으로 설계하였으며, 동의와 보완뿐 아니라 반박과 기각 의견을 명시적으로 요청함으로써 결론이 지지되는 범위와 쟁점으로 남는 범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함

○ 자문 결과 응답자 전원이 동의한 항목과 찬반이 갈린 항목이 함께 확인되었으며, 본 보고서는 전자를 결론으로 서술하고 후자는 쟁점으로 명시하여 양측의 논거를 함께 제시함

○ 서면자문의 경우는 조사 대상의 확대가 아니라 도출된 결론에 대한 외부 검증에 해당하므로 앞의 전문가 자문과는 구분되며, 자료 수집과 구분되는 별도의 단계로 기술함

나. 연구 기대효과

○ 청년 정책의 지향점을 단순 수혜 중심에서 자생적 정주 생태계 조성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담론을 형성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그 결과는 도내 시·군 청년 정책 수립 및 청년 거점 공간(청년이음전주, 청년뜰 등) 운영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및 기초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활동이 정체되거나 축소된 사례를 함께 포함한 심층면접과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브레이크 포인트와 내부 신뢰 자산의 작동 기제를 규명하였으며, 아울러 행정 독립성과 조직 성숙도를 축으로 삼은 초기 분석틀이 조직의 실제 자율성을 판별하는 데 지니는 한계를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대안적 판단 기준을 제시함

- 단기 지원의 단절에 따른 활동 절벽을 예방하고 실패를 경험한 청년의 재도전을 뒷받침할 안전망을 설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실증적 근거에 해당함

○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 주체 활성화를 주목하는 기조에 발맞추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주요 재원의 집행 방향을 소모적인 하드웨어(H/W) 중심에서 공동체의 자생력을 키우는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현행 청년마을 등 관련 사업 지침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기초 논리로 활용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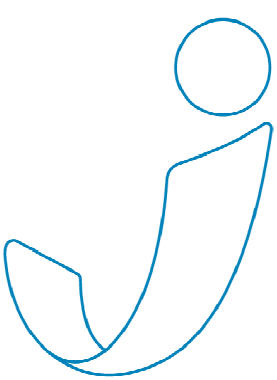
○ 행정안전부(기금), 중소벤처기업부(창업), 고용노동부(일경험) 등 개별 부처별로 분절되어 추진되던 청년 지원 사업들을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 체계를 축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통합 정책 프레임워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전북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실무자용 연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음

○ 기존의 단발성 프로젝트나 소규모 로컬 활동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여 청년 공동체가 사회연대경제 주체(협동조합, 마을기업 등)나 자립형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성장 경로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단기적 생존을 넘어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안착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가적 성장을 지향할 수 있는 스케일업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 논리를 제공함

제2장

청년 정주 관련 선행연구와 국내·외 사례 검토

1. 선행연구 고찰
2. 국내·외 사례
3. 선도 사례의 사후 진단 : 경로 분화와 한계



제2장 청년 정주 관련 선행연구와 국내·외 사례 검토

1. 선행연구 고찰

○ 청년의 지역 정주를 다룬 기존 연구는 크게 청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을 진단한 연구, 정주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관계 자본과 신뢰를 강조한 연구, 활동의 자생적 지속 경로로 사회연대경제를 제시한 연구, 그리고 정주 개념 자체의 확장을 논한 연구 등을 살펴볼 수 있음

○ 아래에서는 각 갈래의 논의를 검토하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공백과 본 연구의 착안점을 제안해 보고자 함

▌청년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 진단

○ 다수의 연구가 현행 청년 정책은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혜가 실질적 정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음

○ 김병국 외(2020)는 1년 단위 단기 예산 집행 원칙에 기인한 활동 절벽 현상에 주목하여, 마을공동체 사업 종료 후 상당수 공동체가 예산 부재로 활동을 중단하는 등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시급한 과제임을 언급함

○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조은정, 2026)에서는 지원 종료 이후의 공백이 사업과 사업 사이의 연계가 끊기는 지점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부서·사업 간 수평적 연계와 광역-기초 간 수직적 연계의 부재를 지적하며 마을공동체 정책을 통합적 정책 추진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주민주도 거버넌스와 상시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분석(안수지 외, 2022)을 통해 지자체와 위탁기관 간 상시적·유기적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효율화, 중도탈락자에 대한 사후관리·환류 프로세스, 인건비 중심에서 역량 지원 중심으로의 전환, 지역노동수요 연계 사업 고도화의 필요성을 지적함

○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개별 사업의 확대보다 통합적 연계와 거버넌스의 설계가 정책의 핵심 과제임을 시사함

○ 지자체의 빈번한 담당자 교체와 조례 등 입법적 근거가 미비한 사업 추진 방식은 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우수 정책이 담당자 이동이나 단체장 교체에 따라 폐지되는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치 시스템의 상설화와 청년 당사자의 집행 결정권 강화가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하기도 함(김상봉·나경태, 2022; 서울연구원, 2022)

▌정주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 관계 자본과 신뢰 형성의 중요성

○ 청년의 지역 안착은 경제적 인센티브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정주 의사를 실질적으로 결정짓는 요인은 지역 내 관계 자본과 신뢰 형성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청년들의 사회활동은 대인 신뢰와 공동체 의식 등 비인지적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며, 이것이 지역 내 촘촘한 관계망으로 축적될 때 비로소 실질적 지역 안착의 토대가 마련됨(김정숙·강영배, 2017)

○ 물리적 공간 제공을 넘어선 공동체 브랜드 경험 설계는 이주 청년의 지역 정착에 결정적 역할을 함. 박재민(2025)은 '리틀파머' 공동체 브랜드 경험이 이주 청년의 지역 정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실증하였으며, 이는 청년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환대받는 경험이 소속감을 넘어 실질적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러한 관계·신뢰 자산은 정서적 만족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자립의 토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음. 호혜적 네트워크 내에서 형성된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자부심은 외부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고 활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내적 동기로 작용하며(권수현, 2024; 장지은·허경진, 2024; 김세연 외, 2022), 일회성 방문을 넘어 지역과 지속적 신뢰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는 잠재적 정주·경제 인력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볼 수 있음

▌활동의 자생적 지속과 사회연대경제로의 연대

○ 관계·신뢰 자산이 실제 지역 활동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자생 기반을 확보해야 하며, 그 경로가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 창업과 매출을 통한 비즈니스형 자립이 하나의 길이라면,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그리고 행정이 감당하지 못하는 돌봄·문화·생활서비스의 공백을 청년이 메우는 공공서비스형 연대 또한 정당한 자생 경로로 인정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2022)는 청년마을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청년이 청년을 돕는' 선배 청년 펠로우십 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정부 사업 수행 이력을 공신력으로 활용하여 후속 성장을 견인하는 스케일업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함

○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복지·생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지역 내 호혜적 경제 주체가 필수적이며,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로의 조직적 전환이 그 유력한 기반이 되고 있음을 제시함(이수행 외, 2015)

○ 다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20)는 이러한 전환이 '언젠가 보조금을 끊어 자립시킨다'는 단선적 전제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렵고, 개인 단위 창업 지원을 넘어 시군 단위 플랫폼 조직화와 다년도 예산 관리, 선정 이후의 성장을 촉진하는 후속 지원·사후관리가 결합될 때 실효를 거둔다고 지적하고 있음

○ 이들 연구는 청년 활동의 지속가능성이 자립의 여부가 아니라 청년과 지역을 잇는 연계 구조의 설계에 달려 있음을 공통적으로 보여줌

▌정주 개념의 확장: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 정주를 주민등록인구 중심으로 좁게 보는 관점을 넘어서려는 연구도 축적되고 있음

○ 김동영(2024)은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인구 유입 방안 연구에서 생활인구 개념을 적용해 도내 14개 시군을 정주·통근통학·방문·외국인 인구 등으로 유형화하고, 체류·방문 인구를 지역 활력의 자원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함

- 청년 정책의 목표를 정주 인구 확보에만 두지 않고 지역과 지속적 관계를 맺는 관계·생활인구의 단계적 관리로 확장해야 함을 시사함

○ 한편 지역 대학의 인프라와 산업 자원을 결합하는 지산학 협력을 청년 인력의 상시 유입·정착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본 연구도 있음

- 김영철 등(2021)과 최예술 외(2023)는 리빙랩 기반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 현장 연계 교육, 학점연계형 인턴십 등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이 결합될 때 대학이 청년 활동의 거점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둔다고 보았음

○ 희망제작소(2023)와 서울연구원(2022)은 정책의 법제화와 데이터 기반 사후관리 시스템이 동반될 때 정치적 환경 변화에도 청년 정책이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함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본 연구의 방향성

○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청년의 지역 안착은 일시적 보조금 투입이나 개별 일자리 제공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지역 내 관계·신뢰 자산과 이를 산업적 자립으로 전환하는 사회연대경제 기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안전망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확인됨

○ 다수 연구가 지원 종료 후 발생하는 '활동 절벽'을 공통 위협 요인으로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적 정책 연계와 다년도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음

○ 기존 연구는 청년 활동의 심리적 만족도나 창업 초기 지원책에 관해서는 풍부한 분석을 제공하나, 관계·신뢰 자산이 실제 안정적 소득과 산업적 자립으로 전환되는 구체적 경로와 부처별로 분절된 지원 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인구감소 대응 체계를 축으로 통합하는 실무적 연계 방식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음

○ 청년 공동체를 사회연대경제 주체로 육성하여 지역 서비스 공백을 메우는 항구적 파트너로 전환하는 관점, 그리고 전북자치도의 특수성에 맞춘 통합적 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한 미래 지향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관계·신뢰 자산의 중요성을 계승하되, 그 초점을 개별 사업의 확대가 아니라 사업과 사업, 청년과 지역을 잇는 '연계의 재설계'에 두어, 위의 공백을 다루고자 함

○ 구체적으로 전북 청년공동체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관계 자본이 성장을 좌우하는 조건과 연계가 끊기는 지점을 규명하고, 부처·시군으로 분절된 지원 사업을 지방소멸 대응기금·인구감소 대응 체계와 연결하는 통합적 방향, 지원의 크기가 아니라 방식(무정산 신뢰형·정산 간소화)의 전환, 그리고 청년을 받치는 매개 시스템의 제도화를 제언하고자 함

○ 나아가 정주 여부만을 성과로 보는 관점을 넘어, 청년이 실험하고 떠나더라도 지역과 관계를 잇는 경험의 자산화를 지향함으로써, 수혜 중심의 단기적 정책 구조를 연계와 환대에 기반한 자생적 정주 생태계로 전환하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함

[표 2-1] 청년활동 관련 선행 연구

대주제	저자 (연도)	연구 제목	연구주제 및 목적	핵심 연구 방법론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방안
구조적 문제 진단	김병국 외 (2020)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역공동체 주도 프로젝트 추진방안 연구	지역 시민사회 주도의 청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실무적인 창업 지원 및 실업 해소 정책 도출	문헌/통계 분석, 정책자료 분석, 사례분석, 전문가 워크숍	플랫폼 조직화로 시군구 단위 협동조합형 청년 플랫폼 형성, 창업 중심 정책 전환 및 다년도 예산 관리 체계 구축
	조은정 (2026)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시민의 행복 증진 및 자치 역량 강화 도모	거시 트렌드 분석,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FGI), 행정자료 및 현장조사	생태계 관점 전환, 단년도 지원 탈피 및 3~5년 단계형 지원, 활동가 역량 사다리 구축, 사회적 경제(마을기업)로의 성장 경로 제도화
	안수지 외 (202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문석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를 도출	문헌 및 제도 분석, 재정·통계 데이터 분석, 실태 및 환경 분석	민관 협력 거버넌스 효율화, 중도탈락자 사후관리 및 환류 체계 구축, 인건비 중심에서 역량 지원 중심으로의 전환 및 지역 노동수요와 연계한 사업 고도화
	조은정 (2026)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시민의 행복 증진 및 자치 역량 강화 도모	거시 트렌드 분석,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FGI), 행정자료 및 현장조사	수평적·수직적 연계 기반 통합적 정책 추진, 주민주도 거버넌스 및 상시적 지원체계 구축, 마을공동체 정책 연계
	정병순, 김태욱 (2016)	청년활동지원사업 운영모델 구축방안	서울시 미취업 청년(NEET)의 사회참여 역량	문헌조사, 통계분석, 설문조사, 집단면접조사(FGI), 사	맞춤형 사후 관리 방안, '활동계획서' 기반의 맞춤형 지원, 청년활동지원컨설

대주제	저자 (연도)	연구 제목	연구주제 및 목적	핵심 연구 방법론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방안
			제고를 위한 합리적 지원 모델 및 운영 체계 도출	례 분석	턴트제 도입을 통한 진로 준비 및 현장 연계 강화
관계자본 및 신뢰	김정숙, 강영배 (2017)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일자리 중심 청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청년 사회활동 실태 파악 및 활성화 방안 도출	문헌연구, 양적 설문조사 (1,200명), 사회활동 참여 집단 심층 면담, 지자체 담당자 FGI	심화 지원 체계(2.0) 마련, 단기 지원 탈피, 코디네이터 채용 및 활동 멘토제 도입
	김세연 외 (2022)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관적 요인에 관한 연구	청년의 사회적 경제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참여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요인(자부심 등)을 규명하여 활성화 방안 제시	대구·경북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 종사 청년 107명 대상 설문조사, 요인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심리적 자본 활용, 청년의 자부심 고취 프로그램 및 타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권수현 (2024)	경상도 비혼여성공동체 WIT 연구	지역 청년 여성의 비혼 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지망 구축 의미 분석	질적 연구 및 문헌 분석	정서적 안전망: 관계 중심의 연대감 강화, 주거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공동체적 생활 모델
	장지은, 허경진 (2024)	청년 예술가들의 공동체 커머닝 실천	예술과 생태적 가치를 결합한 자생적 공동체 형성 과정 분석	질적 사례 연구(대구 팔현습지 사례)	가치 중심 연대, 지역 현안 해결 과정에서의 사회적 자본 축적 및 예술적 실천을 통한 공동체 유지
	박재민 (2025)	'리틀파머' 공동체 브랜드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	정서적 정착 브랜딩, 단순 공간 제공을

대주제	저자 (연도)	연구 제목	연구주제 및 목적	핵심 연구 방법론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방안
		경험이 이주 청년 지역 정착에 미치는 영향	적용하여 공동체 브랜드 경험이 이주 청년의 장소 애착과 정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디자인 에스노그라피(비디오 관찰, 심층 인터뷰), 고객여정지도, 아이디어 워크숍	넘어 '공동체 브랜드' 경험 설계를 통한 유대감 형성
자생 기반·사회연대경제	행정안전부 (2022)	청년마을 성과분석 최종보고서	5년간 진행된 청년마을 사업의 양적·질적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청년 정착 및 지역 활성화 과제 제시	사업체 대표·참여자·지역 관계자 심층 인터뷰(50회), 참여자 의식조사(490명), 국내외 사례·정책 조사	청년마을 2.0 제안, '청년이 청년을 돕는' 자립 구조(펠로우십), 정부 사업 이력을 통한 스케일업
	이수행 외 (2015)	경기도 농촌공동체 발전 사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 농촌공동체의 내발적 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농의 생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 모색	문헌조사, 자문회의, 사례연구, 현장조사	수익모델 중심 관리, 수익모델 발굴 및 체계적 관리, 안정적 판로(직거래시스템) 확보, 입문–성장–정착의 단계적 지원 체계 구축
	박정선 (2019)	인구 감소지역에 청년 공동체 형성해 정착기반 마련	인구감소지역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정착할 수 있는 공동체 형성 지원 체계 연구	전문 연구기관(한국지역진흥재단 등)과의 협업, 현장 중심의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단계 성장 로드맵 제안, 형성→발전→안정화 단계별 지원, 후속 사업 연계를 위한 자금 확보 교육
	유럽 연합(EU) (2019)	Youth for a Just Transition	녹색 전환 과정에서의 청년 참여 보장 및 역할 분석	정책 자료 분석 및 사례 발굴	기술–활동 연계 방안, 리빙랩(Living Lab) 활용 기술 개발 지원 및 정책 결정 과정의 청년 주도권 보장

대주제	저자 (연도)	연구 제목	연구주제 및 목적	핵심 연구 방법론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방안
	김성하, 황선아 (2023)	사라지는 지방, 지역 활력에서 답을 찾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 활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 방안 제시	쟁점 분석 및 정책 사례 검토	로컬 브랜드 창출 방안 마련, 경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및 지원, 지역 고유 브랜드 창출을 통한 정주의식 제고, '지역 활력 지수' 기반의 정책 수립
	한국정치학회 (2023)	청년의 로컬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지역 청년들의 정치 참여와 생활정치의 사회문화적 함의 분석	기초현황 조사, 심층 연구 (FGI)	거버넌스 공식화, 지역별 청년 참여 기구 내실화 및 청년정책청(가칭) 등 전담 기구의 필요성 제시
정주 개념 확장	김동영 (2024)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인구 유입 방안 연구	주민등록인구 중심에서 생활인구로 정부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수립	생활인구 유형화 군집분석 (위계적 군집분석), 정책 분석	체류·방문 인구를 지역 활력 자원으로 관리, 시군 유형별 맞춤형 생활인구 유입 전략
	최예술 외 (2023)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 증진을 위한 청년 로컬창업 지원방안	인구감소 위기 지역 내 청년 로컬창업의 실태를 진단하고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제안	중앙/지자체 지원사업 검토, 경북·충북 중소도시 실태 진단	지산학 연계 강화: 성장단계별 체계적 재정 지원, 유휴공간 활용 인프라 공급, 대학-로컬기업 학점연계형 인턴십 신설
	김영철 등 (2021)	지역사회-대학 상생발전방안 연구용역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사회와 지역 대학의 상생 발전 플랫폼(지역대학협력센터) 구축 및 운	국내외 문헌 고찰(미국, 독일, 일본 등), 통계 분석, 설문조사, 대학 관계자 대상 FGI 및 전문가 인터뷰	대학의 상설 거점화, '지역대학협력센터' 설립을 통한 인프라 공유, LBT(실천수업) 연계

대주제	저자 (연도)	연구 제목	연구주제 및 목적	핵심 연구 방법론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방안
			영 방안 연구		
	전주시/희망제작소 (2023)	전주시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전주 청년의 삶을 심층 진단하고, 역외 유출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개년 종합 청년 정책 로드맵 수립	거시 환경 분석, 청년 종합 실태조사(설문), 집단심층면접(FGI), 청년 관계망 분석, 정책 원탁회의	관계 인구 자산화, 미래인재 DB 구축, 로컬 벤처 창업 및 임팩트 투자 연계 지원
	김상봉, 나경태 (2022)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탐색 연구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사례를 중심으로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활성화 요인 및 방안 모색	국내외 현황 분석, 연구 동향 분석, FGI, 서면 인터뷰	참여 권리 보장으로 청년 당사자의 실질적 집행 결정권 강화, 민관 협치 시스템의 상설화 및 정책 효능감 제고 장치 마련

자료: 저자 정리

2. 국내·외 사례

가. 청년마을 사업의 구조와 정책적 지향

○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청년마을 만들기는 인구감소 지역에 청년인구를 유입시켜 지역 활력을 회복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정주 실험임

○ 전국 51개소 이상의 거점을 확보하고 관계 인구를 형성하는 등 정량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초기 사례에 있어서 3년의 지원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재정적·기능적 단절을 경험하고 있음

[표 2-2]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개요 및 현황

1. 사업 개요

사업명 :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주 관 : 행정안전부
대 상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청년 유입 및 정착을 도모하려는 청년단체 및 기업
지원 내용 : 청년마을 운영을 위한 사업비 지원(마을당 연간 2억 원 내외, 최대 3년), 전문가 컨설팅, 네트워킹 지원 등

2. 사업 목적

지방소멸 위기 대응 :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지역에 청년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 활력 회복
청년 정착 지원 : 도시 청년들에게 지역에서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역 자원을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3. 추진 배경

수도권 집중화 심화 : 청년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가속화됨
청년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 추구 : 경쟁 중심의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대안적인 삶과 창업 기회를 찾으려는 청년 수요 증가
지역 활력 저하: 지역 내 청년인구 부족으로 인한 커뮤니티 붕괴 및 경제 침체 문제 발생

4. 사업 내용

지역 탐색: 지역 살이 프로그램, 워케이션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을 직접 경험하고 탐색할 기회 제공

실험 및 창업 : 지역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실험,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 및 창업 공간 지원
정착 및 확산 : 지역 주민과의 유대감 형성, 주거 및 업무 공간 확보를 통해 최종적인 지역 정주 유도

5. 주요 성과

정성적 성과 : 지역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변화, 원주민과 외지 청년 간의 세대·문화적 갈등 해소 및 융합,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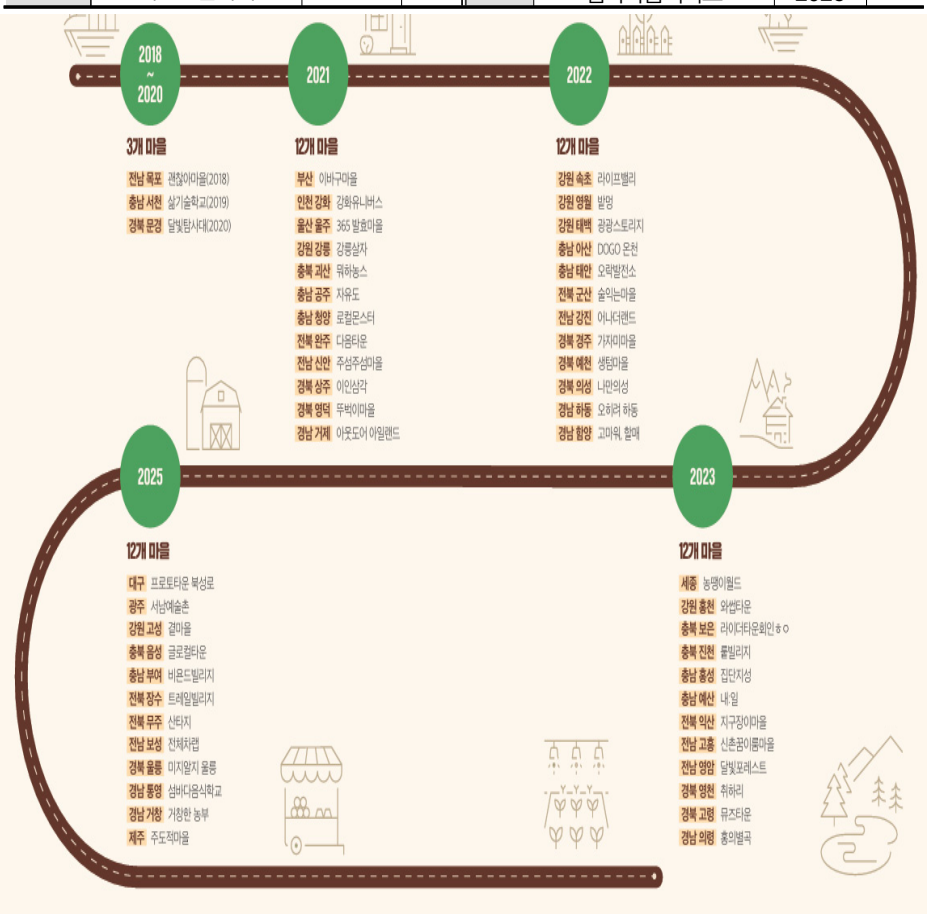
정량적 성과: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약 51개 이상의 청년마을 조성
청년들의 지역 살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상당수가 해당 지역으로 이주 및 정착하였고, 지역 내 유휴 공간(폐교, 빈집 등)을 재생하여 청년 거점 공간으로 변모 (정착인구 260명, 살아보기 참여자수 3,179명, 일거리 실험 참여자 수 2,809명, 유휴 공간 활용 202개소 (2025년 기준))

6. 연혁

2018년 (시범 도입): 전남 목포(괜찮아마을), 충남 서천(삶기술학교) 등 선도 사례 2개소 선정·운영
2019년 ~ 2020년: 시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모델 고도화 및 운영 방식 정립
2021년 (본격 확대): 전국 12개 청년마을 추가 선정, 다년도 지원 체계(최대 3년) 도입
2022년 ~ 2023년: 매년 12개 내외의 신규 마을을 지속적으로 선정하며 전국적인 네트워크 형성.
2024년 ~ 2025년: 기존 마을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사후 관리 강화 및 지역 소멸 대응 기금과의 연계 확대 추진

지역	청년마을명	지정연도	개수	지역	청년마을명	지정연도	개수
부산	이바구 마을	2021	1	전북	다음타운	2021	5
인천	강화유니버스	2021	1		술익는마을	2022	
울산	365발효마을	2021	1		지구장이마을	2023	
세종	농땡이월드	2023	1		산타지	2025	
대구	프로토타운 북성로	2025	1		트레일빌리지	2025	
광주	서남예술촌	2025	1	전남	괜찮아마을	2018	6
제주	주도적마을	2025	1		주섬주섬마을	2021	
강원	강릉 살자	2021	6		어나더랜드	2022	
	라이프밸리	2022			신촌꿈이룸마을	2023	
	광광스토리지	2022			달빛 포레스트	2023	
	밭멍	2022			전체차랩	2025	
	와썹타운	2023		경북	달빛탐사대	2020	9
	곁마을	2025			이인삼각	2021	
충북	뭐하농's	2021	4		뚜벅이마을	2021	
	룹빌리지 진천	2023			가자미마을	2022	
	라이더타운회인	2023			나만의-성	2022	
	글로컬타운	2025			소백산 생텀마을	2022	

충남	삶기술학교	2019	8		뮤즈타운	2023	
	자유도	2021			취하리	2023	
	청.맛.동	2021			미지알지	2025	
	DOGO온천	2022		경남	아웃도어아일랜드	2021	6
	오락발전소	2022			오히려하동	2022	
	집단지성	2023			고마워, 할매	2022	
	내:일	2023			홍의별곡	2023	
	비욘드빌리지	2025			거창한농부	2025	
					섬바다음식학교	2025	



자료: 행정안전부 2025

나.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마을의 성장 사다리 체계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마을 사업은 광역 단위에서 선제적으로 청년단체를 발굴하여 역량을 강화한 뒤, 중앙부처 사업으로 연계하는 단계별 육성 시스템을 구축함

○ 청년마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체활성화 사업, 생생아이디어 사업(1단계) → 전북 청년마을(2단계) → 행안부 청년마을(3단계)로 이어지는 사다리는 정책의 급격한 중단을 막는 1차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함

○ 이에, 익산 사각사각, 무주 파머스에프엔에스 등은 광역 사업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한 후 중앙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정착의 안정성을 높인 대표적 사례임

[표 2-3]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개요 및 현황

1. 사업 개요

사업명: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주관: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시·군 협력)
사업 규모: 매년 5개소 내외 공모 선정
예산 구조: 개소당 1억 원 (총 5억 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50% + 시·군비 50% 매칭

2. 사업 목적

지역 정착 유도: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모델을 통해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안착 도모
지역 활력 제고: 인구감소 지역에 청년들의 활동 에너지를 주입하여 지역 사회의 생동감 회복
성장 사다리 제공: 소규모 청년 공동체가 광역 및 중앙부처 사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 강화

3. 사업 대상 및 조건

대상: 도내 5인 이상의 청년 단체 및 기업
자격 요건: 구성원의 4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된 조직
지역 제한: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을 우선함

4. 사업 내용

로컬 프로그램 운영: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체험,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네트워크 활성화: 청년-주민 간 상생 협력, 타 지역 청년과의 교류 행사 개최
전문성 강화: 사업 실행 계획 보완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5. 주요 성과

구분	주요 사례 및 내용	성과 지표
청년 자립역량	· 김제 오후협동조합 (로컬 재생 창업) · 무주 산골낭만 (농산물 브랜드화)	· 단계별 창업 커리큘럼 구축 · 시제품 제작 및 브랜드 개발
주민 교류·협력	· 장수 사계아트앤컬쳐 (마을 꾸미기) · 남원 나우원플러스 (청년 영화제)	· 세대 간 정서적 장벽 해소 ·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활성화
인구유입 효과	· 고창 청년짓다 (지역탐색) · 익산 사각사각 (제로웨이스트 지역살이)	· 높은 타 지역 청년 참여율 · 관계 인구 형성 및 유입 기대

6. 전북형 성장 사다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단체가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지속성 확보
- 1단계: 청년공동체 (지역 활동의 기초 기반 마련)
- 2단계: 전북 청년마을 (청년단체의 도약과 비즈니스 모델링)
- 3단계: 행안부 청년마을 (전국 단위 사업 선정을 통한 지역 정착 확정)

(성공 예)
- 익산 사각사각: 2022년 전북형 사업 수행 → 2023년 행안부 청년마을 선정
- 무주 파머스에프엔에스: 2023년 전북형 사업 수행 → 2025년 행안부 청년마을 선정
- 장수 락앤런: 초기 공동체 활동 → 2025년 행안부 청년마을 선정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2025 내부자료

다. 해외 사례: 협동조합 기반 사회연대경제형 정주 모델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의 형성 경로

○ 스페인 몬드라곤은 1956년 내전 이후 실업률이 60%에 달했던 바스크 지방의 소도시에서 아리스멘디아리에타 신부와 기술학교 졸업생 500명이 최초의 노동자협동조합 울고(Ulgor)를 설립한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지역 경제의 붕괴 위기에 대해 주민이 스스로 조직한 경제적 응답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인구감소지역 대응 모델로서 참조할 가치가 있음

○ 특히 교육기관이 생태계를 견인한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 복합체가 40여 년에 걸쳐 축적된 뒤에야 대학이 제도화되었다는 순서인데, 1943년 기술전문학교에서 시작된 교육 기능이 1956년 첫 협동조합과 1959년 노동인민금고, 1970년대 라군아로(사회보장)를 거쳐 1997년 몬드라곤 대학교 통합으로 귀결됨(이웅규·김춘광, 2025)

○ 대학이 지역 혁신을 견인하는 산학협력 모델이라기 보다는, 교육·금융·제조·복지의 네 협동조합 네트워크가 상호 보완하며 하나의 사회연대경제 복합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교육이 후계 인력 재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함

▌위험의 사회화

○ 몬드라곤의 청년이 창업과 고용 전환의 위험을 개인 단위로 감당하지 않는 것은 창업 지원금이 풍부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 조달과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노동인민금고(자산 250억 유로)와 의료·연금을 담당하는 라군아로가 조합 간 연대 기구로 먼저 존재하기 때문임

○ 대학 운영 재원 역시 이 연대 구조에 편입되어 2023년 기준 학생 등록금 33%, 정부 지원금 33%, 협동조합 기업의 연구·기술이전 수익 33%로 분산되어 있어, 교육비 부담이 개별 가계에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됨(이웅규·김춘광, 2025)

○ 이 모델은 전북 청년조직이 겪는 어려움이 개별 조직의 역량 부족보다 위험을 함께 흡수할 연대 기구의 부재의 문제가 더 큰 원인일 수 있음을, 개별 조직 단위의 공모 지원을 넘어 조직 간 공동기금과 상호부조 장치를 설계할 필요를 제기함

▌잉여 처분의 규칙화와 지역 재순환

○ 몬드라곤 복합체의 지역 환원은 성과가 좋은 해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배려가 아니라 이익의 처분 방식을 사전에 조직 규범으로 구속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잉여의 일정 비율을 재투자와 지역사회 환원에 각각 배정하도록 정해 둠으로써 환원의 수준이 경영진의 선의나 개별 조합의 재량에 좌우되지 않도록 함(이웅규·김춘광, 2025)

○ 이러한 분배제도의 예는 협동조합 이익의 10%를 교육에 배분하는 규정과 해외 진출

기업 수익의 20%를 지역 내 신규 협동조합 설립 자금으로 적립하는 제도를 들 수 있으며, 특히 후자는 확장의 성과가 외부에 축적되지 않고 지역 내 새로운 조합의 창업 재원으로 되돌아오는 경로를 제도적으로 확보한 사례에 해당함(이웅규·김춘광, 2025)

○ 잉여의 재순환은 화폐 형태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켈란(IKERLAN) 기술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회원 협동조합과 지역 중소기업에 무상 공개하여 2023년 기준 12개 협동조합에서 연간 2,300만 유로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은 연구 성과를 사유화하지 않고 공동 이용의 대상으로 규칙화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이웅규·김춘광, 2025)

▌조합원 소유에 기반한 정책의 안정성

○ 대학 운영 의사결정에서 학생 40%, 교직원 40%, 지역 협동조합 20%가 동등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연 1회 전체 조합원 총회와 학부별 대표자 회의, 일일 운영위원회로 이어지는 3중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함(이웅규·김춘광, 2025)

○ 단순히 청년에게 참여 기회를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조합원으로서 소유권과 의결권을 함께 보유한다는 데 있으며, 그 결과 정권 교체나 담당 부서 개편과 무관하게 정책 방향이 유지되는 제도적 안정성이 확보됨

▌후계 인력의 내부 재생산

○ LEINN 과정은 5~7명의 학생이 하나의 팀기업을 구성해 4년간 해체 없이 유지하면서 연간 최소 3만 유로의 매출 달성을 의무화하고 미달 시 학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청년이 수혜자가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 주체로 성장하도록 설계됨(이웅규·김춘광, 2025)

○ 교수를 지식 전달자가 아닌 팀코치로 재정의하고 연간 100시간 이상의 1:1 멘토링을 제공하며 평가를 팀 성과와 동료 평가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선배 창업가가 후배의 코치가 되는 순환을 통해 지역 내 운영 전문성이 단절 없이 계승됨

○ 청년 조직의 자립을 재정의하는 근거가 되며, 재정적 흑자의 달성이 아니라 조직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내부에서 계속 재생산되는 상태를 자립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함

▌사례 적용의 한계

○ 몬드라곤의 협동조합 모델은 수십 년간 축적된 바스크 지역 특유의 공동체 문화와 연대를 자립의 수단으로 보는 규범적 합의에 기반하고 있어, 단기 성과 중심의 행정 환경에 그대로 이전하기 어려움

○ 대학의 재정 자립은 257개 협동조합과 8만 1천 명 규모의 산업 연합체가 배후에 존재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민간 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산업 연합체를 전제하지 않는 다른 협력 방식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의 수 자체는 크게 늘었으나 조합 간 연대금융과 공동 사회보장 장치가 형성되지 않아 개별 조합이 위험을 홀로 감당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정책의 초점을 개별 조합 지원에서 연대 기구의 설계로 옮길 필요가 있음

○ LEINN과 같은 팀 창업 과정은 높은 자기 주도성을 전제하므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호하는 청년에게는 피로도 높은 실험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어, 참여 경로를 단일화하지 않는 설계가 요구됨

[표 2-4] 스페인 '몬드라곤(Mondragon) 모델' 개요 및 특징

제목: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 기반 사회연대경제형 정주 생태계 **목적:** 내전 이후 붕괴한 지역 경제의 주민 주도 재건, 조합 간 연대를 통한 청년의 자립 기반 확보 **설립역사:** 1943년 기술학교 시작 → 1997년 몬드라곤 대학교로 통합 **운영주체:** 민간 협동조합형 (몬드라곤 대학교 + MCC 그룹) **예산규모:** 재원 33% 분담 법칙 (등록금 33%, 정부 33%, 기업 33% / 연매출 약 6,000만 유로 규모) **핵심특징**: 40:40:20 거버넌스, 실전 매출 중심의 LEINN 교육 과정 **공간인프라:** 바스크 지역 전역에 분포한 대학 캠퍼스, 기술연구소, 협동조합 사업장 **지속기간**: 1943년 ~ 현재 (80년 이상의 생태계) **기대효과:** 청년이 수혜자가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소유권과 의결권을 함께 보유함으로써 담당자 교체나 정권 변동과 무관하게 정책 방향이 유지되고, 조합 간 연대 기구가 창업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

자료: 이웅규·김춘광(2025).

라.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행정] 보조금 지원에서 지역 가치사슬로의 전환

○ 단순한 예산집행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 자산이 청년의 비즈니스 자본이 되는 수익형 로컬 생태계 구축 지향

○ 성과지표의 재정의를 통해 단순 참여 인원이나 예산 집행률에 더하여, 지역 내 재투자율과 보조금 종료 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서천의 사례가 보여준 기술 전수를 넘어, '장수 생담원 청년농(생산) - 전주 파티쉐(가공) - 로컬 카페(유통)'와 같이 시·군 경계를 허무는 전북형 유기적 협업망을 공식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하여, 보조금 상황에서 일정 정도 자유롭게 서로의 협력에 의해 유지되는 진정한 자생력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거버넌스] 정책 가역성 최소화를 위한 '행정 완충지대'와 독립성 확보

○ 서울의 '무중력지대' 사례에서 확인된 정치적 불연속성에 따른 사업 종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의 직접 통제권에서 벗어난 독립적 운영 기반 마련이 시급함

○ 대학(RISE), 지역 재단 등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여 행정과 청년 주체 사이의 행정적 완충지대를 구축함으로써, 정권 교체나 담당자 변경에도 사업의 연속성과 청년 활동가의 신분 지속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행정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원칙을 준수하고, 청년 조직이 지역 자산을 독자적으로 해석하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정책의 가역성을 최소화해야 함

▌[인프라] 대학(RISE)을 지역 비즈니스의 실전 운영체제로 재설계

○ 의성 사례와 같은 막대한 예산 투입 대신, 이미 지역에 존재하는 대학의 연구 인프라와 유휴 공간을 청년들의 실전 생존 기지로 적극 전환할 필요

○ 대학 공간은 단순 교육장을 넘어 청년들이 실제 매출을 일으키며 제품을 테스트하는 리빙랩 기반 비즈니스 실험실이 되어야 하며, 교수는 이들의 생존 난제를 함께 해결하는 전략 파트너 및 실무 코치로 역할 재정의가 필요

○ RISE 체계 내의 연구 장비와 데이터가 청년들의 아이템을 전국구 브랜드로 키우는 기술적 뒷받침이 되도록 설계하여, 대학이 지역 청년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하드웨어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

▌[행정 체계] 유연한 예산 운용과 리스크 분담형 러닝메이트 행정

○ 성공적인 정주 생태계는 단순히 조례를 보유하는 것을 넘어, 행정이 민간과 함께 리스크를 나누는 유연한 행정 체계의 지원이 핵심적으로 작동함

○ 서천 사례와 같이 국비 종료 시점에 지방비를 전격 매칭하거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시설비가 아닌 운영비(사람)로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사업 발굴이 필수적임

○ 행정이 감독자 위치에서 벗어나 민간 운영사와 함께 리스크를 나누는 러닝메이트 역할을 수행할 때, 청년들은 실패의 두려움 없이 지역 비즈니스에 도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심리적 안전망 확보 가능

3. 선도 사례의 사후 진단 : 경로 분화와 한계

▌청년마을 초기 사업의 지속 가능성

○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사업의 도입기(2018-2020년)에 선정 수행된 대표적 사업인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 전남 목포 '괜찮아마을', 경북 의성의 '이웃사촌 마을'은 사업의 주체, 주력사업, 예산지원에서 차이를 보였고, 이후 사업 지속도 기존의 사업 목표와는 달리 상업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기도 하고, 초기의 성공을 지속하는데 실패하기도 함

○ 이와 같이 사업 초기(2018~2020) 선정된 기념비적 사례들은 지원 종료 후 각기 다른 생존 경로를 보여주며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줌

▌대규모 인프라 주도형: 경북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 광역-기초 지자체가 약 1,200억 원 규모의 압도적 자본을 투입하여 주거·의료·일자리를 패키지로 구축함. 행정의 강력한 의지가 인구 흐름을 바꿀 수 있음을 입증했으나, 막대한 유지 비용으로 인해 타 지자체의 보편적 복제가 어려운 특수 사례이나, 2025년 여전히 이웃사촌마을 사업은 수행 중임

[표 2-5] 경북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개요 및 특징

제목: 경북 의성군 안계면 '이웃사촌 시범마을'
목적: 농촌 지역에 도시 수준의 인프라를 패키지로 구축하여 정주 인구 확보
설립역사: 2018년 경상북도-의성군 협력 사업으로 시작
운영주체: 광역-기초 협력형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 전담)
예산규모: 총사업비 약 1,200억 원 이상 (도비·군비 집중 투입)

핵심 특징: 스마트팜 창업 지원, 청년 예술가 유입, 5대 분야(일자리·주거·복지·기초체력·거버넌스) 패키지 지원
공간인프라: 컨테이너 하우스, 스마트팜 단지, 안계행복플랫폼(복합문화시설) 등 신축
지속기간: 2018년 ~ 현재 (성과 확산 단계)
기대효과: 행정의 압도적 자본 투입이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흐름을 바꿀 수 있음을 입증

자료: 행정안전부 2022
프라임 경제 2025. 7. 21, 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696993

▌콘텐츠 자생형: 전남 목포 '괜찮아마을'

○ 대규모 시설 투자 대신 청년의 정서적 회복과 로컬 콘텐츠에 집중하여 팬덤(관계인구)을 형성함

○ 저예산·고효율 모델이나, 민간 운영사의 비즈니스 역량에 정책의 성패가 과도하게 의존하는 운영 주체 편중성의 과제를 안고 있고, 현재는 상업시설로 변모하여 운영 중임

[표 2-6] 전남 목포 '괜찮아마을' 개요 및 특징

제목: 전남 목포시 원도심 '괜찮아마을'
목적: 청년의 정서적 회복과 로컬 콘텐츠 기반의 자생적 정착
설립역사: 2018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운영주체: 민간주도형 (주식회사 공장공장 + 목포시 지원)
예산규모: 초기 국비 약 6.6억 원 → 이후 민간 투자 유치 및 지자체 위탁 사업 위주

핵심특징: 6주 입주 프로그램, 독립 출판 및 영상 콘텐츠 비즈니스
공간인프라: 원도심 내 노후 적산가옥, 여관 등을 리모델링하여 주거·업무 공간화
지속기간: 2018년 ~ 현재 (7년 차)
사업지속방안: 대규모 시설 투자 없이 '콘텐츠와 커뮤니티'만으로 청년을 유입시킨 저예산·고효율 모델

자료: 행정안전부 2022,
https://blog.naver.com/oneul_sudal/224026362728

▌정책적 불연속성형: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

○ 소곡주 등 지역 자산을 브랜딩하여 초기 붐업에 성공했으며, 지원 종료 후 지방비를 투입하여, 사업 종료 후 지원사업을 실험함

○ 지방비 투입에도 불구하고 운영 주체의 피로도와 비즈니스 확장 한계로 인해 활동이 둔화된 사례로, 단순 예산 연장이 자생력을 보장하지 않음을 방증하나, 로컬 브랜딩의 가능성을 열어준 양면적인 평가의 가치가 있음

[표 2-7] 충남 서천군 한산면 삶기술학교 개요 및 특징

제목: 충남 서천군 한산면 '삶기술학교'
목적: 유휴 공간 재생을 통한 청년 창업 및 정주 생태계 구축
설립역사: 2019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운영주체: 민관협력형 (서천군+주식회사 자이엔트)
예산규모: 초기 국비 약 8.25억 원 → 이후 지방비 연간 약 4억 원 매칭
핵심특징: 지역 특산물(소곡주) 브랜드화, 마을 선생님(주민) 기술 전수
공간인프라: 한산면 내 빈집, 폐교 등 19개 유휴 공간 기능 전환
지속기간: 2019년 ~ (이후 활동 중지)
사업지속방안: 보조금 종료 후에도 지방비 매칭을 통해 활동 절벽을 극복한 '가교 예산' 모델

자료: 행정안전부 2022

▌청년 활동 유형별 지속가능성

○ 국내 선도 사례들에 대한 사후 진단 결과, 청년들의 정주 활동은 크게 행정의 자본이 투입된 인프라 주도형(유형 A)과 민간의 기획력이 중심이 된 보조금 기반 콘텐츠형(유형 B)으로 구분

○ 각 유형은 초기 지역 활성화에는 기여했으나, 아래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 지원 종료 시점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가역성과 운영 자생력 확보라는 구조적 한계를 공통적으로 노출하고 있음

[표 2-8] 청년 활동 유형별 동력과 지속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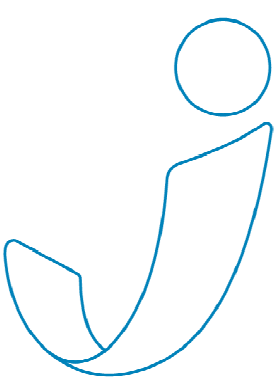
분석 관점	유형 A: 대규모 인프라 주도형 (의성 등)	유형 B: 보조금 기반 콘텐츠형 (서천, 목포 등)
핵심 동력	· 행정의 압도적 자본과 시설 공급	· 민간의 창의적 기획과 커뮤니티 활동
지속성 변수	· 지자체의 장기적 운영 재원 확보 능력	· 보조금 종료 후의 비즈니스 자립 역량
확산 가능성	· 낮음 (막대한 예산으로 인해 타 시·군 복제 어려움)	· 중간 (적은 예산으로 시도가능하나 생존율 낮음)
한계	· 시설은 남지만, 운영 주체의 자생력 보장 어려움	· 사람은 모이지만, 경제적 토대 없이는 지속 담보 어려움

자료: 저자 작성

제3장

청년정책 환경과 전북 청년의 실태

1. 청년정책의 흐름과 지역사회 혁신 생태계 진단
2. 전북 청년인구 현황 및 특성
3. 전북 청년 지원정책의 유형별 현황 및 과제



제 3 장 청년정책 환경과 전북 청년의 실태

1. 청년정책의 흐름과 지역사회 혁신 생태계 진단

가. 중앙부처 정책 기조: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분석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보편적 지원과 당사자성 강화

○ 범정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은 정책 범위를 일반 청년으로 확장하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삶을 기획하는 '청년마을' 모델의 발전과 '청년 친화 도시' 지정을 통한 밀착형 지원을 강조하고 있어, 전북자치도 역시 청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혁신' 생태계 모델을 정립해야 할 근거가 됨

○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로 설정하고, ①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를 보장, ② 청년들의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을 지원, ③ 청년들의 실질적 정책 참여 및 당사자성 강화라는 3대 목표를 수립함

○ 1차 기본계획과 비교해 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여, 대학생·취약청년 중심에서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전 부처 참여를 확대하고, 일경험·주거·자산 핵심정책 중심으로 일반청년에 대한 지원과 온·오프라인 전방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지역 밀착형 정주 여건 강화 및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 비수도권 중소기업 유입을 위해 근속 인센티브(2년간 최대 720만원)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삶을 기획하는 청년마을 모델 고도화

- 매년 3개소씩 지정되는 청년 친화 도시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밀착 지원 체계를 강화

○ 일자리 분야에 있어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하고, 청년들이 비수도권

중소기업으로 유입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알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연계를 강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

-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근속 인센티브 지급

▌지산학 협력 및 안심 창업 생태계 조성

○ 교육부의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교육과 취업의 간극을 메우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청년 재도전 지원 전용 트랙 등을 통해 실패의 리스크를 줄이는 안심 창업 환경 조성

-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실패 원인 분석부터 컨설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고도화된 모델 지향

○ 지산학 협업을 통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청년의 교육, 일자리, 정착 등을 지원 강화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구 RISE)를 활용해 지역 전략 산업에 특화된 청년 인재 양성
-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를 통해 학교 교육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창업 분야에서는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 생태계 구축하기 위해 창업 도전 문턱을 낮추고 재도전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안심 창업 생태계' 조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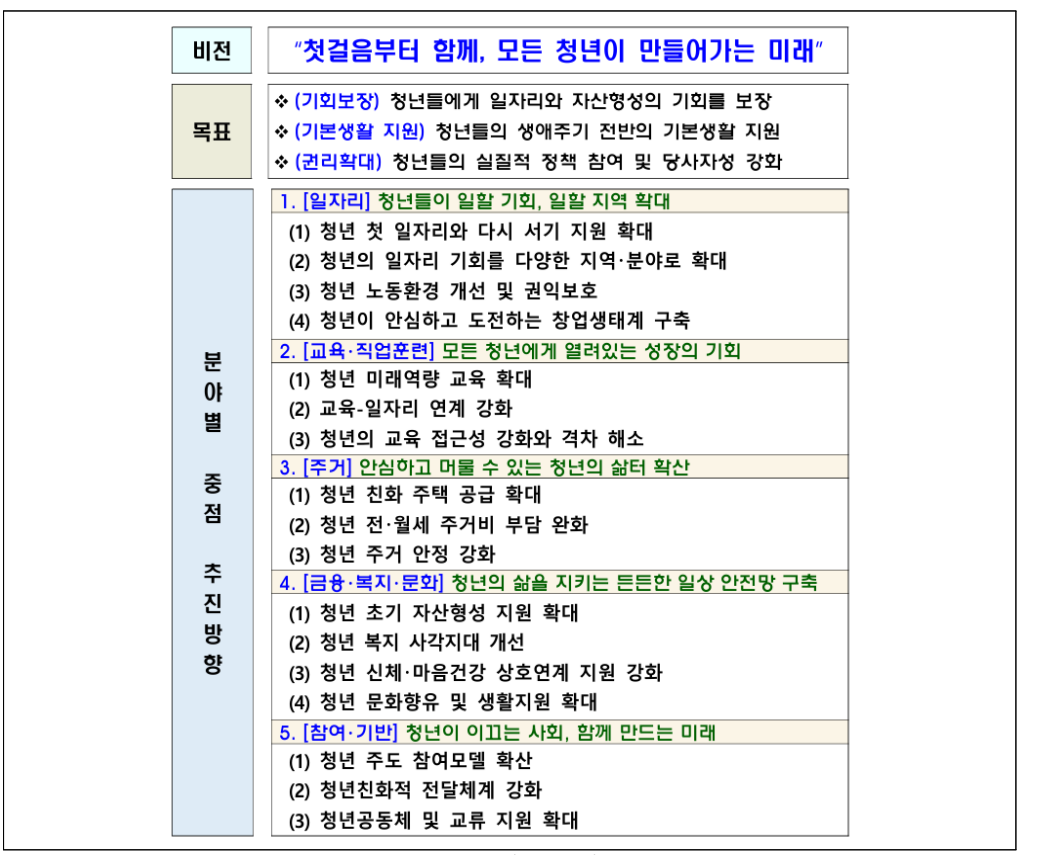
- 청년창업사관학교 18개소 내에 AI·빅데이터 과정을 신설하고,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하는 등 신기술 분야 창업 지원을 강화하여 미래 유망 산업을 이끌 청년 창업가 육성
-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하여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노력 진행
-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도전 환경도 조성하여,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을 위한 '청년 재도전 지원 전용트랙'을 신설하고, 실패 원인 분석부터 재창업 자금, 컨설팅까지 패키지로 지원

○ 청년 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는 5대 중점 추진 방향 중 하나로 설정되어,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삶을 기획하는 '청년마을'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

○ 지역 정주 인프라 강화를 위해 매년 3개씩 '청년 친화 도시'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지역 청년센터(242개소)를 거점기관으로 삼아 청년의 생활·활동 지역에 맞춘 밀착형 프로그램 제공

○ 이러한 중앙의 보편적 청년 정책 기조와 지역 자생력 강화 기조는, 전북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단순히 수혜를 늘리는 것을 넘어 청년이 직접 생태계를 운영하는 자생적 모델을 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함



자료: 국무조정실. 2025.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발표 보도자료

[그림 3-1] 제2차 청년정책 추진방향 체계

나. 인구감소 대응 정책 기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환

○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청년'을 축으로 자생 생태계를 요구한다면, 인구감소 대응 정책은 '지역'을 축으로 동일한 방향을 제시함. 특히, 2026~2027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 대응의 두 핵심 축인 법정 기본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모두 전환기에 진입하면서, 청년의 자생적 활동을 법·제도적 재원 기반과 결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7~2031)으로의 이행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 제1차(2022~2026)를 마무리하고, 2027~2031년을 적용 기간으로 하는 제2차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진입함

- 2026년 현재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가 착수 중이며, 전북 시군 역시 후속 5개년 전략을 준비하고 있음

○ 제1차 기본계획은 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산업 진흥, ②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③ 생활인구 유입·활성화의 3대 전략을 제시하였으며(관계부처 합동, 2023), 제2차 계획에서는 ① 실질적 지역 활력 증대, ②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서비스 고도화, ③ 지역자산 기반 일자리·소득 창출 ④ 단계별 지역특화 미래인재 돌봄·교육 강화를 4가지 핵심 부분별 분야로 제시함

- 실질적 지역 활력 증대: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체류·관계·방문인구를 포함하는 생활인구 확대,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형 기본소득 모델(햇빛소득마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등

-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서비스 고도화: 공공지원형 주거타운 조성, 스마트 기술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DRT) 제공, 필수의료 강화 및 ICT 기반 원격의료 확충, 빈집·유휴시설 활용 로컬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 지역자산 기반 일자리·소득 창출: 로컬 브랜드 상권 재생, 청년·여성·노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로컬푸드 미식 콘텐츠화, 지역특화형 외국인 인구 유입 및 공동체 융합 촉진 등

- 단계별 지역특화 미래인재 돌봄·교육 강화: 인구감소지역 특례 기반 교육, 지방정부-대학-기업 일체형 우수인재 양성(RISE 사업 연계), 온마을 돌봄체계 조성 및 평생직업교육 지원 등

○ 계획 수립 원칙으로 시·군·구 계획을 바탕으로 시·도 및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구조를 들고 있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특징을 보임

- 주민자치회, 이통장협의회 등 마을단위부터 기초·광역에 이르기까지 주민과 민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중요

○ 제2차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신규사업 발굴이나 지역 기반 청년들의 활동 영역의 확대와 연계될 수 있는 점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으며, 기본계획(제도)과 기금(재원)을 연동해 설계하려는 정책 의지가 확인됨. 이는 부처·사업으로 분절된 청년 지원을 인구감소 대응 체계로 통합할 실무적 접점을 제공함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면 개편: '시설(HW)'에서 '사람·프로그램(SW)'으로

○ 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배분체계 전면 개편을 발표함. 매년 약 1조원 규모의 기금이 그간 시설 건립 중심·단년도 집행에 치우쳐 장기 성과와 주민 체감도가 낮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임

○ 기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기반시설 조성뿐 아니라 일자리·주거·돌봄 등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에도 기금 활용 가능(「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해짐

- 청년이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 주체 육성에 직접 활용 가능한 근거

○ 단년도 집행에서 다년도 투자계획 수립으로 전환하고, 집행률 관리 기준도 '연도별 배분액 대비'에서 '사업 계획 대비'로 변경하여, 실험-성장-안착의 다년도 계획 및 관리 가능하도록 기금 운영 방향 설계

○ 시설에서 사람으로, 단년도에서 다년도로, 나눠주기에서 연계·성과로 이동하는 기금의 개편 방향은, 청년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자립 여부'가 아니라 '연계 구조의 설계'에서 찾는 본 연구의 관점과 정확히 부합함. 청년 사회연대경제 주체의 활성화가 향후 기금 활용의 유력한 축으로 부상함(행정안전부, 2026)

○ 정주 개념 자체도 확장되어, 주민등록인구를 넘어 체류·방문 인구를 지역 활력 자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김동영, 2024)은 청년 정책의 목표를 정주 인구 확보에만 두지 않고 관계·생활인구의 단계적 관리로 확장해야 함을 시사함

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추진 현황 및 실태 진단

▌전북 청년정책의 주요 사업 현황

○ 전북자치도는 2025년 현재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팀별 9백만원 지원),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5개소),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 등 청년의 지역 유입과 안착을 도모하는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하며 외연을 확장함

- 청년정책참여단 운영과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거버넌스 참여의 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옴

[표 3-1]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현황

구분	주요 사업명	주요 내용 및 지원 사항
청년 공동체 및 지역 활력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 도내 5인 이상 청년 단체·기업 대상 팀별 9백만 원 과업수행비, 컨설팅 및 네트워크 지원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 지역 자원 기반 청년마을(5개소) 선정,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킹을 통한 외지 청년 유입 유도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	• 귀촌 청년의 마을 활동(홍보·마케팅 등) 인턴십 지원 및 인큐베이팅 공간(공유 오피스 등) 조성
정책 참여 및 거버넌스	전북청년정책참여단	• 청년 당사자가 정책 연구·수립·시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현재 제10기 활동 중)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	• 청년 단체·법인이 제안한 지역 자원 활용 사업의 실제 수행 지원 및 사회 참여 유도
	도내 청년 공익활동 지원	• 대학 학생회 및 청년단체의 공동체 활성화, 농촌 봉사, 기후위기 대응 등 공익 프로그램 지원
지역 거점 및 네트워크	전북청년허브센터	• 전북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온·오프라인 상담, 정책 홍보 및 어울림 컨퍼런스 개최
	시·군별 활동 거점	• (전주) 청년이음전주, (군산) 청년뜰, (익산) 익산청년시청 등 지역별 맞춤형 소통 및 취·창업 지원
맞춤형 활동 및 수당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 미취업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및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원
	직업군별 맞춤형 지원	• 청년 농업인을 위한 '생생동아리 지원' 등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활동 지원 병행

자료: 전북청년허브센터 2025

▌양적 확장과 정주 의사의 간극

○ 양적 확장에도 불구하고, 기존 청년 정책에 대한 높은 사업 만족도가 실제 활동의 지속성이나 지역 안착 의향으로 직결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

- 전주시 청년정책의 경우, 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4.0%로 절반을 상회하지만, 불만족 사유 중 일회성 사업이 많아서(10.6%)라는 응답이 비중 있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음(희망제작소, 2023)

○ 현장의 목소리는 현재의 지원 체계가 일시적인 이벤트나 단기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활동이 곧 생계와 연결되는 직업 경로로 진화하거나 안정적인 정주 생태계로 안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줌

- 청년마을 사업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거의 100%에 가까운 종합 만족도를 보이지만, 이주 의향이 있음에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24.8%)를 핵심 원인으로 꼽고 있음

- 이는 개인적 휴식과 힐링(42.7%)이라는 단기적 동기는 충족시키나, 장기적 생계 대책으로 이어지지 못함을 시사함(행정안전부, 2022)

라. 정책 지침 분석을 통한 구조적 한계 및 현장 괴리 진단

▌재정 지원의 단년도 주의와 예산 집행 지침의 경직성

○ 현재 청년정책은 창업과 취업을 위한 1~3년 단위의 단기 재정 지원에 치중되어 있어, 국고 지원 기간이 끝나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님

- 공동체 지원 사업 종료 후 31%의 공동체가 활동을 중단했으며, 가장 큰 원인은 예산 문제였음(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0)

○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조성 사업'은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 구조는 1년 단위의 단기 공모 및 집행 원칙에 묶여 있어 지원 종료와 동시에 인건비 및 최소 운영비가 단절되는 한계를 보임(행정안전부, 2022; 김병국 외, 2020)

○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요 청년 지원 사업 지침 역시 지방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다년도에 걸친 '실험-성장-안착'의 과정을 분절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전북특별자치도, 2024)

▌정량적 성과지표 중심의 평가 체계와 가치 창출의 단절

○ 매출액, 고용 인원 등 단기적인 정량 지표 중심의 평가는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맺는 정서적 소속감이나 사회적 자본 형성 과정을 정책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에 종사하는 청년들 66.1%가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의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낮은 임금체계는 청년들이 활동을 직업으로 삼기보다 스펙 쌓기 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들며, 지원이 끊길경우 더 낮은 급여를 감수하기보다 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선택이 이루어짐(김세연 외, 2022)

○ 청년마을 사업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지만, 이주를 실행하지 못하는 핵심 이유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24.8%)'를 꼽고 있어 경제적 자립 구조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함(행정안전부, 2022)

○ 청년 지원 정책의 한계는 분절적 지원과 사후 관리 부재로 청년 정착을 위한 정책들이 일자리, 주택, 자산 형성 등으로 파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 이후의 후속 지원이나 관찰이 부재하여 정책 체감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희망제작소, 2023)

- 현재의 지원 체계는 청년들에게 잠시간의 비빌 언덕과 실험적 공간은 제공했으나, 그 경험이 삶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후 관리와 자생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김정숙 외, 2017)

▌행정 편의적 절차와 행정과 청년을 잇는 기능의 부재

○ 복잡한 사후 정산 방식과 증빙서류 요구 등 행정 편의적인 절차는 행정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공동체에게 높은 진입 장벽과 활동 의지 저하를 불러오고 있음(희망제작소, 2023)

- 현행 지침상 청년과 행정을 잇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강조되나, 이들의 전문성을 보장

하거나 장기 고용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예산 편성 지침이 부재하여 매년 담당자가 교체되는 정책의 휘발성이 반복됨(김정숙·강영배, 2017; 조은정, 2026)

- 대부분의 지침에서 청년을 단순히 아이디어 제공을 위한 '자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민관 협치 시스템 구축에 한계를 보임(서울연구원, 2022; 김상봉·나경태, 2022)

▌지산학(地産學) 연계 사업의 지속 방안 구축 필요

○ 대학의 교육 인프라와 지역 산업 자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단기 프로젝트에 머물러 있어, 청년들의 활동이 실제 정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제공에 있어 미흡

- 전북특별자치도의 RISE(현 앵커) 기본계획은 인재양성과 지역 정주를 잇는 거버넌스를 목표로 하나, 세부 시행지침상에서는 리빙랩 종료 후 실제 비즈니스화로 이어지는 구속력 있는 후속 지원 로드맵이 부족(전북특별자치도, 2024)

- 대학 인프라의 상설 거점화와 상시적인 인력 유입 체계를 위해 대학 내 지역대학협력센터 설립과 인프라 공유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김영철 등, 2021)

- 파편화된 대학 지원 사업이 지역 내 청년 활동가들의 로컬 벤처나 기업 승계 모델과 실질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대학, 산업계의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침 수립 요구(최예술 외, 2023)

마. 청년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역 자립형 선순환 생태계 구축 방안

▌지역 자립형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

○ 본 연구는 이러한 단절성을 극복하기 위해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는 단계를 넘어, 정책 참여 경험이 실질적인 창직이나 안정적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 자립 선순환 구조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행정안전부, 2022).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생력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전북 청년 모델을 발굴하고자 함

-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의 전환 모델 설계: 단순 모임을 넘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법인 형태로 전환하여 단체 유지와 회원들의 생존 문제를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검토(김정숙 외, 2017)

- 청년마을 2.0 비전 적용: '청년이 청년을 지원하는 지역 자립 구조'를 확립하여, 선배 청년이 후속 세대의 발전을 돕고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을 활성화하는 선순환 거버넌스 구축 사례 검토(행정안전부, 2022)

- 호혜적 관계망의 안전망 전환: 청년 간 호혜적 관계망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보완하고, 외부 지원 종료 후에도 작동하는 신뢰 자산 기반 안전망 메커니즘으로 전환되는 가능성 발굴

○ 청년들을 단순 수혜자에서 지역 사회의 주체적인 운영자로 위치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로컬 커리어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함(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0)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를 통한 청년 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 경로

○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실효를 거두려면 안정적 재원 기반과의 결합이 전제될 필요

○ 2027년 전면 개편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청년 자생 생태계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청년 활동이 확대되고, 지속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사람·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 범위가 확대

- 단년도에서 다년도 투자계획으로 전환되고 집행률 관리 기준이 '사업 계획 대비'로 변경

- 광역지원계정의 기능이 단순 재배분에서 연계·협력 사업 발굴로 확대됨

- 성과 중심 차등 배분 기조가 강화

○ 이런 변화들이 청년 활동의 '활동 절벽'이나 '회계연도 단절' 같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활동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배경·기회조건으로 작동 가능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4대 분야와의 접합

○ 전북 시군이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4대 분야에 청년 자생 활동을 편입할 때 제도적 안정성을 얻음

○ 상향식(시군→시도→국가) 수립 구조는 청년 당사자의 의견이 계획에 반영될 통로가 되므로, 다음과 같이 청년 활동을 각 분야에 접합할 수 있음

○ 특히 4대 분야의 실질적 지역 활력 증대, 주거환경·생활서비스 고도화, 지역자산 기반 일자리·소득 창출 및 단계별 미래인재 돌봄·교육의 분야에서 지역 청년들의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찾고, 또한 미래 인재 분야에서는 '지방정부-대학-기업 일체형 인재양성(앵커, 구 RISE 연계)' 분야에 청년 공동체를 현장 실행 조직으로 편입 가능

▌지산학 협력 기반의 앵커사업과 중기부 사업의 전략적 결합 모델 탐색

○ 대학의 전문 지식(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구 RISE))과 부처별 청년 지원 인프라(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일회성 수혜를 지양하고, '지역 밀착 교육(LBT) → 로컬 창업 → 안정적 지역 정주'의 선순환을 지원함

○ 대학을 지역 문제 해결의 거점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부처별 창업 사업을 경제적 자립 동력으로 연계하여 청년 중심의 로컬 혁신 기반을 뒷받침할 수 있음

○ 청년의 지역 활동이 일회성 수혜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연계 시나리오 구상 가능

- [1단계] 현장 중심 체계 구축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대학 내 로컬 마이크로 학위 신설 및 PBL 기반의 커뮤니티 리빙랩을 운영으로 청년 주도의 지역 문제 발굴과 지산학 거버넌스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
- [2단계] 로컬 창업 및 비즈니스 고도화 (중소벤처기업부):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및 창업 단계별(예비-초기-도약) 패키지를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지원하여 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을 독려하여 자립 기반을 강화
- [3단계] 정주 생태계 안착 (지자체·유관부처): 행안부 '청년마을' 사업 등과 연계하여 '배움-활동-일'이 융합된 정주 공간을 매개하고 지자체 '지역대학협력센터'를 통해 정책 및 제도적 지속성을 완충

2. 전북 청년인구 현황 및 특성

1) 청년인구 현황

▌청년인구 규모 및 비중

○ 2025년 기준 전국 청년인구는 13,301,308명으로 총인구의 26.0%를 차지하였으며, 매년 큰 폭으로 청년인구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음

- '16년 대비 '25년 청년인구는 -14.8%의 감소율을 기록함

○ 전북 청년인구를 살펴보면, '25년 기준 378,385명으로 총인구의 2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인구 비중은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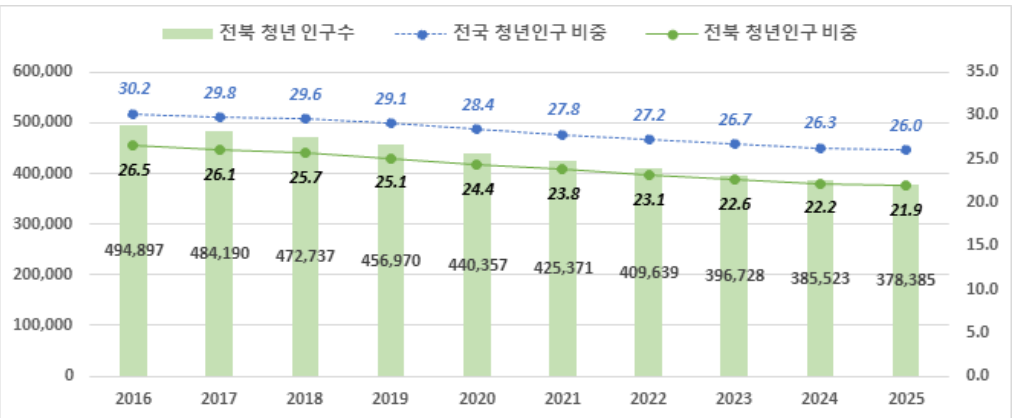
- 전북의 청년인구는 '16년 494,897명에서 '25년 378,385명으로 -116,512명이 감소하여 -23.5%의 감소율을 나타냄. 전국 평균보다 전북의 청년인구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표 3-2] 전국 및 전북 청년인구 규모 및 비중 추이(2016~2025)

(단위: 명, %)

연도	전국			전북		
	총인구	청년인구	비중	총인구	청년인구	비중
2016	51,696,216	15,603,723	30.2	1,864,791	494,897	26.5
2017	51,778,544	15,438,792	29.8	1,854,607	484,190	26.1
2018	51,826,059	15,351,996	29.6	1,836,832	472,737	25.7
2019	51,849,861	15,078,397	29.1	1,818,917	456,970	25.1
2020	51,829,023	14,731,730	28.4	1,804,104	440,357	24.4
2021	51,638,809	14,365,080	27.8	1,786,855	425,371	23.8
2022	51,439,038	13,997,070	27.2	1,769,607	409,639	23.1
2023	51,325,329	13,680,180	26.7	1,754,757	396,728	22.6
2024	51,217,221	13,463,272	26.3	1,738,690	385,523	22.2
2025	51,117,378	13,301,308	26.0	1,724,856	378,385	21.9
증감('16-'25)	*-578,838*	*-2,302,415*	*-4.2*	*-139,935*	*-116,512*	*-4.6*
	-1.1	*-14.8*	-	*-7.5*	*-23.5*	-

주: 18~39세 인구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주민등록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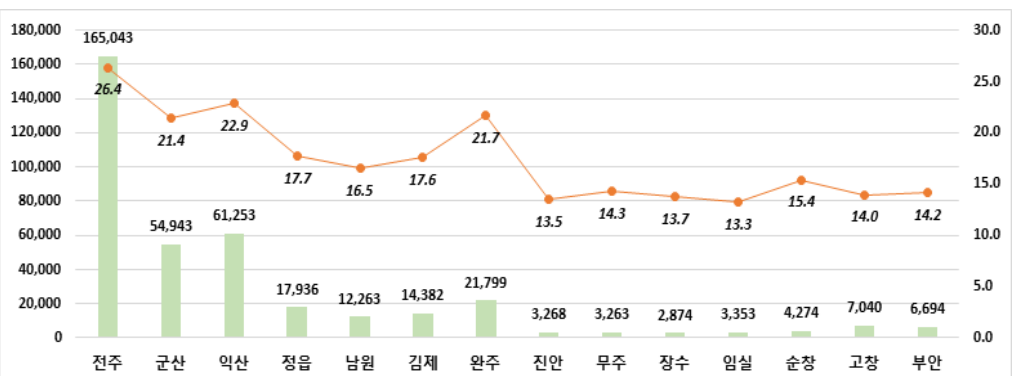


[그림 3-2] 전국 및 전북 청년인구 규모 추이(2016~2025)

▌전북 시군별 청년인구 규모

○ 시군별 청년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전주시 청년인구가 165,043명으로 총인구의 26.4%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익산시(22.9%), 완주군(21.7%), 군산시(21.4%)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 전북 시군별 청년인구 규모를 살펴보면, 전북 청년인구 378,385명 중 전주시에 165,043명(43.6%), 익산시 61,253명(16.2%), 군산시 54,943명(14.5%), 완주군 21,799명(5.8%), 정읍시 17,936명(4.7%) 등의 순임. 전주/군산/익산 등 주요 도시에 전북 청년인구의 74.3%가 집중되어 있음



[그림 3-3] 전북 시군별 청년인구 및 비중(2025)

▌전북 청년인구 성별*연령별 규모

○ 전북 청년인구의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청년인구의 53.3%(201,700명)가 남성, 46.7%(176,685명)가 여성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20대에서 남성 비중이 특히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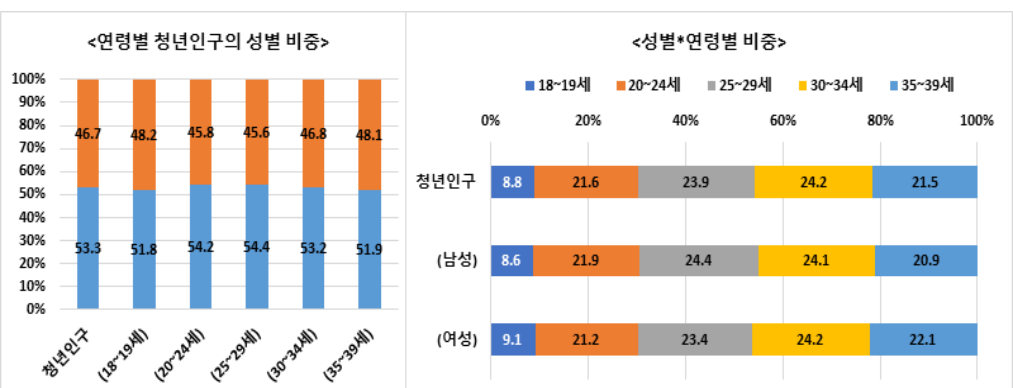
○ 전북 청년인구의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면, 30~34세가 24.2%(91,542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5~29세(23.9%), 20~24세(21.6%), 35~39세(21.5%) 등의 순임

[표 3-3] 전북 연령별 청년인구 성별 비중(2025)

(단위: 명, %, 여성 100명 당 남성)

	청년인구	남성	비율	여성	비율	성비
전체	378,385	201,700	53.3	176,685	46.7	114.2
18~19세	33,277	17,253	51.8	16,024	48.2	107.7
20~24세	81,657	44,232	54.2	37,425	45.8	118.2
25~29세	90,530	49,270	54.4	41,260	45.6	119.4
30~34세	91,542	48,700	53.2	42,842	46.8	113.7
35~39세	81,379	42,245	51.9	39,134	48.1	107.9

*성비: 남성인구/여성인구*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주민등록인구현황」.



[그림 3-4] 전북 청년인구 성별*연령별 비중(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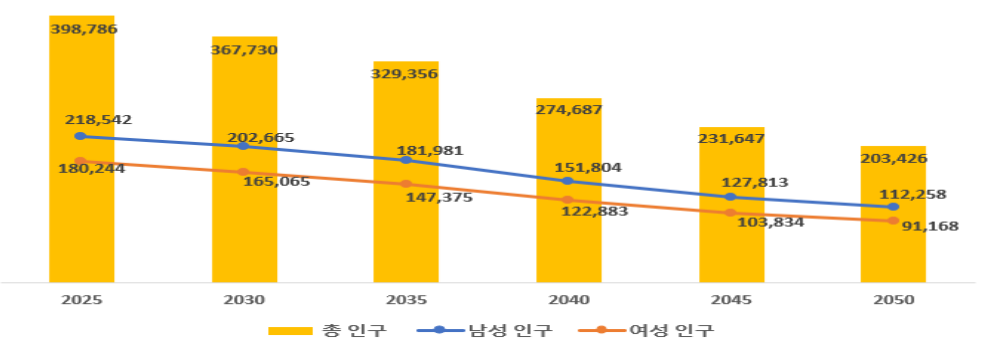
▌전북 청년 장래인구 추계

○ 2050년 전북 청년인구는 203,426명으로 ’24년(405,418명) 대비 약 201,992명(-49.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청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25년 398,786명에서 ’30년 367,730명으로 31,056명(-7.8%) 감소하고, 이후에도 5년마다 약 3~4만명씩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성별로 살펴보면, 청년남성은 ’25년 218,542명에서 ’50년 112,258명으로 106,284명(-48.6%) 감소하고, 청년여성은 ’25년 180,244명에서 ’50년 91,168명으로 89,076명(-49.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단위: 명)



[그림 3-5] 전북 청년 장래인구 추계(2025~2050)

2) 청년인구 유출입 현황

▌전북 청년인구 이동 규모 추이

○ 2025년 기준 전북 청년인구의 총전입은 77,498명, 총전출 83,572명으로 -6,074명 순유출되었으며, 매년 순유출 현상을 기록하고 있음

- 10년 전인 '16년도에 대비해서 순유출은 감소하였지만, 이는 전체적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총전입과 총전출이 감소했기 때문임

○ 성별 청년 순유출 현황을 보면, 남성의 순유출이 -3,334명, 여성 -2,740명으로 남성의 순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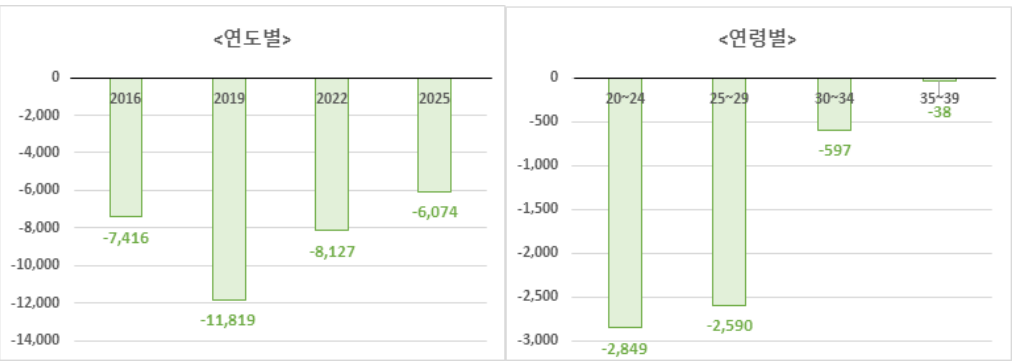
○ 연령대별 청소년 순유출 현황을 보면, 25~29세 청년의 전출입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실제적인 순유출 규모는 20~24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20대의 순유출 규모가 청년인구 순유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 전북 청년인구 이동 추이(2016~2025)

(단위: 명)

구분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시군구 내	시군구 간 전입	시군구 간 전출	시도간 전입	시도간 전출
2016		91,884	99,300	-7,416	40,945	22,316	22,316	28,623	36,039
2019		85,581	97,400	-11,819	39,304	20,705	20,705	25,572	37,391
2022		78,683	86,810	-8,127	35,823	18,194	18,194	24,666	32,793
2025		77,498	83,572	-6,074	32,202	18,724	18,724	26,572	32,646
증감('16대비)		-14,386	-15,728	-1,342	-8,743	-3,592	-3,592	-2,051	-3,393
성별	남성	40,754	44,088	-3,334	16,532	9,646	9,646	14,576	17,910
	여성	36,744	39,484	-2,740	15,670	9,078	9,078	11,996	14,736
연령별	20~24	18,892	21,741	-2,849	5,962	4,432	4,432	8,498	11,347
	25~29	24,234	26,824	-2,590	9,630	5,950	5,950	8,654	11,244
	30~34	20,877	21,474	-597	9,839	5,189	5,189	5,849	6,446
	35~39	13,495	13,533	-38	6,771	3,153	3,153	3,571	3,609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3-6] 전북 청년인구 순이동 현황

○ 한편, 청년인구의 성별 이동률을 연령별로 구분해보면, 20~24세 청년 여성의 시도간 전출률이 1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5~29세 남성 13.2%, 20~24세 남성 12.1%, 25~29세 여성 11.2% 등의 순으로 도외 전출률이 높게 나타남

[표 3-5] 전북 청년인구 성별*연령별 이동률(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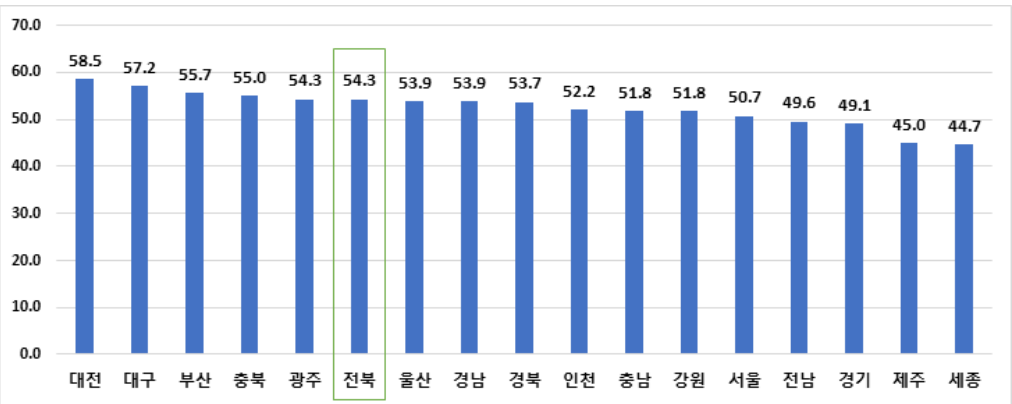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총전입률	총전출률	순이동률	시도간 전입률	시도간 전출률
계	20~24세	22.3	25.6	-3.4	10.0	13.4
	25~29세	26.5	29.3	-2.8	9.5	12.3
	30~34세	23.1	23.8	-0.7	6.5	7.1
	35~39세	16.5	16.5	0.0	4.4	4.4
남성	20~24세	20.4	23.1	-2.7	9.4	12.1
	25~29세	26.0	29.3	-3.3	9.9	13.2
	30~34세	23.4	24.3	-0.9	6.9	7.8
	35~39세	17.0	17.1	-0.1	4.7	4.8
여성	20~24세	24.5	28.7	-4.2	10.7	14.9
	25~29세	27.1	29.3	-2.3	8.9	11.2
	30~34세	22.8	23.2	-0.4	6.0	6.4
	35~39세	15.9	15.9	0.0	4.0	4.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시도별 시도간 전출자 중 청년인구 비중

○ 시도간 전출자 중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총전출자 중 청년인구가 58.5%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세종이 44.7%로 가장 낮게 나타남. 전북의 경우 54.3%를 보여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자치도 가운데서는 충북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그림 3-7] 전국 시도별 시도간 전출자 중 청년 비중(2025)

▌주요 전입사유

○ 최근 10년간 청년들의 전북으로의 주요 전입사유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입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16년 대비 '25년 교육(1,728건→4,881건)으로 인한 전입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직업(15,962건→17,706건), 주거환경(1,046건→2,785건) 순으로 많았음. 반면에 가족 사유는 21,462건에서 20,511건으로 감소함

- 연령대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교육과 직업 사유로 인한 전입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30대의 경우는 주거환경을 제외하고 감소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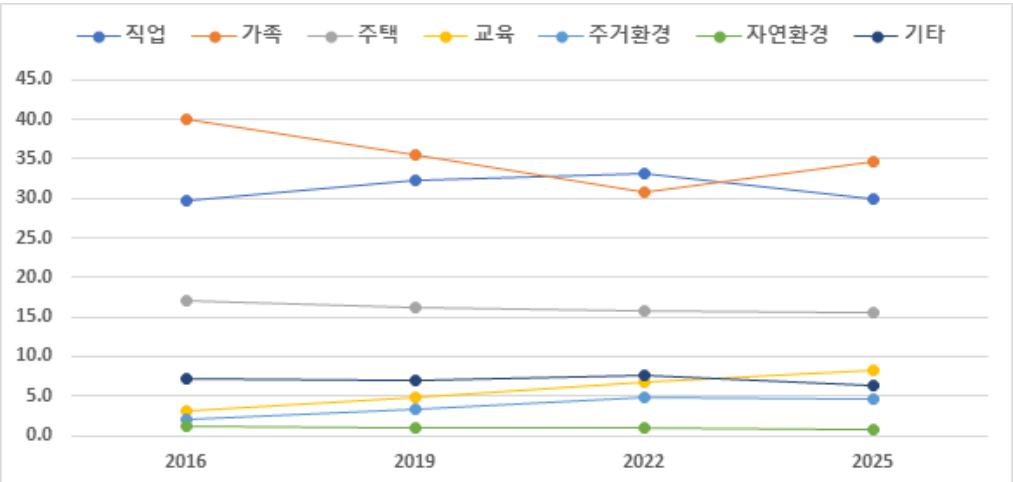
[표 3-6] 전북 청년 전입 사유 현황(2016~2025)

(단위: 전입신고 건수)

구분		2016	2019	2022	2025	'16-'25
계		53,775	54,277	57,204	59,307	*5,532*
직업		15,962	17,526	19,013	17,706	*1,744*
가족		21,462	19,238	17,618	20,511	*-951*
주택		9,116	8,782	9,065	9,263	*147*
교육		1,728	2,665	3,815	4,881	*3,153*
주거환경		1,046	1,842	2,798	2,785	*1,739*
자연환경		586	487	506	464	*-122*
기타		3,875	3,737	4,389	3,697	*-178*
20대	직업	8,657	10,596	12,134	10,729	*2,072*
	가족	11,637	10,871	10,549	12,111	*474*
	주택	3,816	3,976	4,488	4,119	*303*
	교육	1,507	2,464	3,624	4,663	*3,156*
	주거환경	573	1,092	1,717	1,655	*1,082*
	자연환경	294	211	245	223	*-71*
	기타	1,958	1,970	2,529	2,075	*117*
	계	28,442	31,180	35,286	35,575	*7,133*
30대	직업	7,305	6,930	6,879	6,977	*-328*
	가족	9,825	8,367	7,069	8,400	*-1,425*
	주택	5,300	4,806	4,577	5,144	*-156*
	교육	221	201	191	218	*-3*
	주거환경	473	750	1,081	1,130	*657*
	자연환경	292	276	261	241	*-51*
	기타	1,917	1,767	1,860	1,622	*-295*
	계	25,333	23,097	21,918	23,732	*-1,601*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 한편, 연도별 총 전입건수의 구성비 추이를 살펴보면, 가족 사유 구성비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5년에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직업 사유는 증가추세를 보이다 감소하였음. 교육과 주거환경 비중은 증가추세를 보임



[그림 3-8] 전북 청년 전입 사유 구성비 추이(2016~2025)

3) 청년의 정주의지[1)]

▌경제적 자립과 정주의지

○ 청년의 경제적 자립 정도와 정주의지를 살펴본 결과,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75.7%로 나타난 가운데,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 전북 청년의 경제적 자립 정도와 정주의지를 살펴본 결과, 전북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69.0%로 나타남. 전국 평균과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계속 거주 희망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전국과 전북 모두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주를 이루는 무소득 그룹에서는 계속 거주 희망률이 70%대에 육박하였으나, 경제활동에 참가하게 되면서 직접적으로 경제적 자립도를 체감하게 되면서 저소득 구간에서는 계속 거주 희망률이 크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3-7] 경제적 자립정도에 따른 정주의지

경제적 자립정도	전국		전북	
	계속 거주 희망	전출 희망	*계속 거주 희망*	전출 희망
전체	*75.7*	24.3	*69.0*	31.0
무소득	*72.9*	27.1	*73.4*	26.6
100만원 미만	*66.9*	33.1	*46.7*	53.3
100~500만원 미만	*71.5*	28.5	*52.6*	47.4
500~1000만원 미만	*73.1*	26.9	*65.5*	34.5
1000~2000만원 미만	*70.9*	29.1	*55.4*	44.6
2000~3000만원 미만	*73.8*	26.2	*72.0*	28.0
3000~4000만원 미만	*79.8*	20.2	*73.6*	26.4
4000~5000만원 미만	*79.2*	20.8	*79.1*	20.9
5000만원 이상	*77.5*	22.5	*87.9*	12.1

*경제적 자립도 : 청년의 연간 총소득.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1) 청년의 정주의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의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였음. 해당 조사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게 되어있으며, '22년에 이어 두번째 조사임. 목표 표본은 만19~34세 청년을 포함하는 전국 15,000가구였으며, 최종 분석에는 15,098가구, 15,098명의 청년 응답이 활용됨(모든 값은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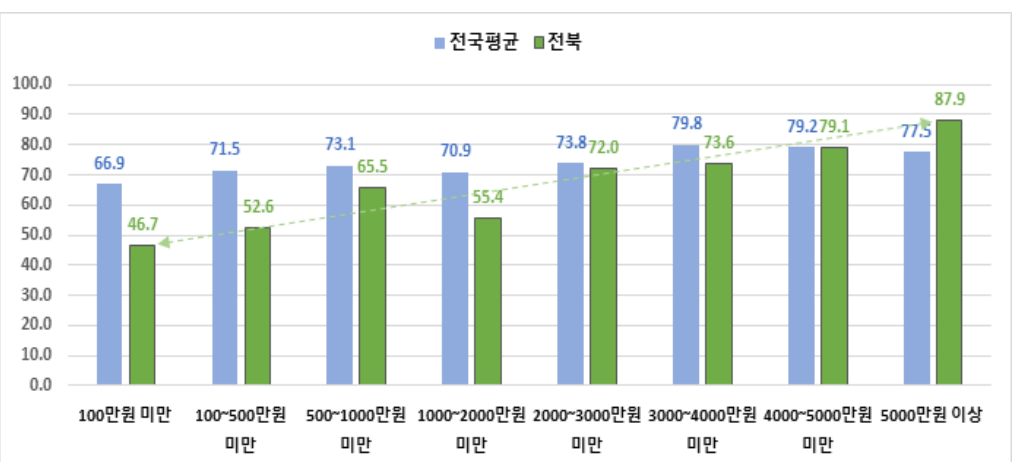
○ 한편, 전국 평균과 전북의 응답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연간 총소득 500만원 미만 그룹에서는 전북 청년의 경우 계속 거주 의향이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음. 즉, 500만원 미만 그룹의 청년들의 절반 이상은 전출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

○ 반면, 2,000만원 이상 그룹부터는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5,000만원 이상 그룹의 경우 계속 거주 의향이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을 보였음

- 다시 말해, 연간 총소득이 5,000만원인 전북 청년 100명 중 약 88명은 타지역으로 전출하지 않고 전북지역에 계속 정주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전북 청년의 계속 거주 의향률은 경제적 자립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전북 전체 평균을 기준(69.0%)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2,000만원 정도임. 2,000만원 미만 그룹에서의 계속 거주 의향률은 평균 58.7%였으나, 2,000만원 이상 그룹에서는 평균 78.2%로 약 20%p 더 높게 나타남

- 다시 말해,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청년 100명 중 약 42명(41.3%)은 전북지역에 계속 정주하지 않고, 타시도로 전출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국 평균(28.9%)보다 크게 높은 수준임



[그림 3-9] 전북 청년의 경제적 자립 정도에 따른 계속 거주 의향률

▌사회적 자본[2]과 정주의지

○ 전국 청년들의 사회적 자본 보유 정도와 정주의지를 살펴보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이 전혀 없는 경우에 지역 거주 의향이 가장 낮았고, 가족이나 혹은 공공/민간기관 등의 사회적 자본이 있는 청년들은 지역 거주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음

○ 전북 청년의 경우는 전국 청년 평균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남. 전북 청년들은 사회적 자본 보유 정도가 높아질수록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의향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청년이 가진 사회 인적·물적 자본이 전혀 없는 경우에 계속 거주 의향이 가장 낮았으며, 가족만 있는 경우와 이에 더해 공공/민간기관 등의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히,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할 때', '아플 때' 등의 상황에서는 사회적 자본 보유 정도가 높을수록 전북지역에 계속 거주 의향이 특히 높게 나타남. 사회적 자본이 전혀 없는 그룹과는 10%p 이상의 차이를 보였음

-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어려움을 겪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나 연계서비스 등의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의 지속 거주 의향이 차이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청년들의 정주 지속을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 외에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관 등의 사회 인적·물적 자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음. 다시 말해, 지역 청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 전북으로 전입하는 청년의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2) '사회적 자본'이란 지인(친구/이웃/직장동료 등), 공공기관(센터/정부 등), 민간기관(종교/복지단체 등)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 관계망 의미함

[표 3-8] 사회적 자본 보유 정도에 따른 정주의지

항목 (상황)	사회적 자본 보유 정도	전국		전북	
		계속 거주 희망	전출 희망	*계속 거주 희망*	전출 희망
1.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전혀 없음	*69.7*	30.3	*60.0*	40.0
	가족	*77.3*	22.7	*70.2*	29.8
	사회적자본+(가족)	*73.6*	26.4	*72.2*	27.8
2.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할 때	전혀 없음	*71.2*	28.8	*53.1*	46.9
	가족	*76.5*	23.5	*70.2*	29.8
	사회적자본+(가족)	*74.5*	25.5	*73.7*	26.3
3. 아플 때	전혀 없음	*70.3*	29.7	*57.5*	42.5
	가족	*77.2*	22.8	*68.7*	31.3
	사회적자본+(가족)	*73.2*	26.8	*73.1*	26.9
4. 우울 또는 스트레스 받을 때	전혀 없음	*70.0*	30.0	*68.6*	31.4
	가족	*77.1*	22.9	*67.8*	32.2
	사회적자본+(가족)	*75.7*	24.3	*69.6*	30.4
5.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전혀 없음	*70.7*	29.3	*61.0*	39.0
	가족	*76.9*	23.1	*69.8*	30.2
	사회적자본+(가족)	*75.7*	24.3	*69.7*	30.3
〈전체 평균〉	전혀 없음	*70.4*	29.6	*60.0*	40.0
	가족	*77.0*	23.0	*69.3*	30.7
	사회적자본+(가족)	*74.5*	25.5	*71.7*	28.3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그림 3-10] 전북 청년의 사회적자본 보유 정도에 따른 계속 거주 의향률

3. 전북 청년 지원정책의 유형별 현황 및 과제[3)]

1) (유형 1) 관계망 및 공동체 활성화 부문

▌주요 사업 및 정량적 추진 현황

○ 도내 초기 청년 조직의 지역 유입과 탐색을 지원하는 마중물 성격의 정책으로,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농생명기반 청년예술인 활동지원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축제 등을 들 수 있고, 이러한 사업들을 연차별로 확대 추진하고 있음

[표 3-9] [청년 공동체 및 지역 활력]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청년 공동체 및 지역 활력]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목적)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공동체를 발굴하고, 지역자원 등을 연계하여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임

(사업개요) 5인이상의 청년단체·법인을 대상으로 팀별 9백만원의 과업수행비를 지원함. '21년도부터 매년 15개팀씩 지원하여 총 73개팀을 지원함('22년 13개팀)

(참여현황) '25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15개팀으로 전주 7개팀, 김제 2개팀, 군산/익산/남원/완주/순창/고창 각 1개팀이 선정되었음

〈2025년 전북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현황〉

지역	청년공동체명	주요 활동
전주시	詩詩한 컴퍼니	- 도서 출판 및 북토크 등 도서관련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	에듀비아(Eduvia)	- 교육 소외지역 아이들에게 교육 프로그램(STEM 융합교실) 제공
전주시	필름.플래닛	- 영화·영상 창작 프로젝트,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	전북청년독서문화진흥회	- 독서문화 활성화 및 창작 및 글쓰기 장려, 문화예술 융합활동, 청년네트워크 구축, 도서관 및 공공기관 협력 등
전주시	협동조합 에이바웃	- 전주 흑석골 지역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매거진, 사진영상촬영, 전시기획)
전주시	0199	- 게릴라 바리스타, 브루잉 대회 등 로컬 컨텐츠 제작 및 로컬 행사 기획·운영
전주시	아크빌	- 전주시 전통 및 역사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코스 및 관광기념품 제작, 로컬 콘텐츠 및 크리에이터 관련 강연 등
군산시	문화예술기획단	- 예술작품을 활용한 아트상품 제작, 청년작가 작품 전시 연계 플

3) 본 내용은 전북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 중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정리함(인구청년정책과 내부자료)

	다온	리마켓
익산시	IKCO(익산에코)	- 지역명소 플로깅, 청년소상공인 플리마켓 운영
남원시	(유)청연	- 청년예술인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교류 활동, 지역민과의 상생을 위한 문화교환 사업
김제시	선암	- 로컬 관계망 형성을 위한 로컬 매거진 운영, 문화행사 진행, 소규모 지역 축제운영
김제시	그로우 앤 고	- 스마트팜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농산물 체험 프로그램, 지역 축제 참여
완주군	완주호사	- 귀촌 생활 소개 및 홍보를 위한 지역 콘텐츠 개발
순창군	순창군4-H연합회	- 귀농 청년들의 농업기술 습득 및 멘토링 등 청년농부들의 기술 발전 및 공동체 네트워킹, 지역사회 공익 사업
고창군	wtte:위트	- 고창형 라이프스타일 탐구 및 로컬컨텐츠 제작

자료: 전북자치도 내부자료

[표 3-10] [청년 공동체 및 지역 활력]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청년 공동체 및 지역 활력]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목적)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청년마을을 조성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 활력 제고

(사업개요) 5인 이상의 청년단체·기업을 대상으로 팀별(5개 단체·기업) 100백만원('25년 기준)의 과업수행비를 지원함. '22년도부터 '25년까지 총 25개팀을 지원함

(사업내용)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청년과 지역민이 상생·협력가능한 청년마을을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행사 및 전문 컨설팅 지원

〈2025년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현황〉

지역	청년단체명	주요 내용
익산	익산청년연대 *춘포면	- **마을명 〈청춘 봄나루〉** - 춘포의 자연과 문화를 배경으로 청년마음치유 마을 형성 - 투어 프로그램 활용한 문화예술 마을 조성 - 지역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 (추진현황) 마을 특산물 활용 식품 개발(5종), 춘포투어프로그램, 주민과 함께하는 피지컬춘포 행사 진행, 청년마을 체험프로그램 쉼표 춘표 운영(1회), 청년마을 컨설팅 진행(3회)
정읍	샘샘 유한회사 *정우면	- **마을명 〈아리송한 마을〉** - 유휴 양곡 창고 리모델링 통한 농촌 문화공간 조성 - 어르신의 삶을 기록하고 전시하는 세대간 아카이빙 콘텐츠 제작 - (추진현황) 마을만들기 홍보(65만뷰), 문화공간 조성(아리송한 연구소), 아카이빙 프로젝트(25명, 50개 콘텐츠) 및 촌스러운 패션쇼,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로컬커피 개발

김제	쌀도시의 청춘연구소 *신풍동	- **마을명 〈오고가 농다〉** - 농업+미디어 콘텐츠 프로그램 '콘텐츠로 농다' - 농업+문화예술프로그램'예술로농다' - 농업+관광체험 프로그램 '기억으로 농다' - (추진현황) 크리에이터 캠프(2회,30명), 브이로그 챌린지(30명), 유휴공간 공공예술프로젝트(4회,40명), 공예워크숍(6회,90명), 로컬푸드워크숍(4회,60명), 쌀 콘텐츠 페스티벌(250명)
고창	원더청년 *고수면	- **마을명 〈청년 고수마을〉** - 옹기 헤리티지: 고창 옹기를 활용한 장 담그기 체험 - 씨유산헤리티지 : 씨간장 발효 과정 체험 - 숲마루헤리티지 : 숲속놀이터에서의 자연체험 - 족보헤리티지 : 가족과 공동체유산기록 - (추진현황) 운월당 농촌휴양마을 사업자 등록, 로고제작, 운월당 공간 조성(씨간장 담그기, 로컬 미식 체험 등), 농가 협약(2회)
부안	다잇다잉 *변산면	- **마을명 〈돌삶마을〉** - 지역에서의 대안적인 삶의 모습을 제시하여 청년 유입 도모 - (생태교육 및 생태체험, 상호돌봄프로그램, 인문강연회) - (추진현황) 반딧불 상담소·씨앗도서관 조성, 손모내기 축제(39명), 안부배달(57회), 생태교육길잡이(8명), 변산여름계절학교(38명), 봔짝멘토링(10명) 등

자료: 전북자치도 내부자료

[표 3-11] [청년 공동체 및 지역 활력] 농생명기반 청년예술인 활동지원사업

[청년 공동체 및 지역 활력] 농생명기반 청년예술인 활동지원사업

(목적) 청년 주도 농업·예술 융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년정착 기반 마련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제18조(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시행주체) 민간단체(공모선정)
(사업내용) 농촌과 청년예술인을 연계한 농가 레지던시, 굿즈개발, 박람회 등 운영

자료: 전북자치도 내부자료

[표 3-12] [청년 공동체 및 지역 활력]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축제

[청년 공동체 및 지역 활력]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축제

(목적)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 및 주도적 기획으로 청년문화축제 개최
(근거) 청년기본법 제7조,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21조(청년의 날)
(시행주체)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전북청년허브센터)

(사업내용) 청년의 날 기념식, 청년 참여 행사 운영, 청년정책 및 활동전시 등

〈2025년 도 및 시·군 청년축제 추진현황〉

	행사명	주요 프로그램
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청년축제	- 청년의날 기념식, 청년정책 및 활동전시, 청년 예술가 공연 등
전주	전주시 청년의 날 행사	- 기념식, 버스킹, 플리마켓, 문화체험 등
군산	청년정책문화한마당	- 청년정책포럼, 무대공연, 체험 등
익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청년축제	- 청년의날 기념식, 청년정책 및 활동전시, 청년 예술가 공연 등
정읍	'백잔마셔도 안취하는 무알콜 페스티벌'	- 무알콜맥주 시음, 문화공연, 이벤트 등
김제	'청년, 시간을 잇다'	- 공연, 버스킹, 마임, 체험프로그램 등
장수	장수 청년 야시장	- 공연, 추첨, 푸드트럭 등
완주	완주 청년맥주축제 'ZOM-BEER'	- 공연, 먹거리와 체험부스 운영, 이벤트 행사 등
진안	진안군 청년의날 행사	- 기념행사, 운동회 등
고창	고창군 청년의 날 행사	- 체험프로그램, 버스킹, 플리마켓 등
부안	부안군 청년축제	- 공연, 맥주, 홍보부스, 공연 등

자료: 전북자치도 내부자료

[표 3-13] [지역 거점 및 네트워크] 청년 소통공간 활성화 사업

[지역 거점 및 네트워크] 청년 소통공간 활성화 사업

(배경) 시군 청년들의 만남과 교류 장소인 청년 소통공간에 지역 청년이 모이고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필요

(사업규모) 20개 * 프로그램당 최대 10백만원 내외 (1개 시군 최대 3개소 이내 지원)

(추진방법) 시군 공모

(사업비) 200백만원(도〈소멸대응기금〉 100, 시 100)

구분	지원규모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소통공간 활성화	1개 프로그램	10	5	5
	2개 프로그램	20	10	10
	3개 프로그램	30	15	15

(사업내용) 시군 특색에 맞는 청년 소통(역량강화 등) 프로그램 운영

〈시군 청년활동 분야 및 프로그램 예시〉

분야	프로그램 (예시)
청년 교육	■ 청년이 참여하여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창업, 영어, 면접, 컴퓨터, 자격증 취득, 원데이클래스 등)
청년 소통(교류)	■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청년단체 간 소통 교류 프로그램 (읍면, 도내, 도외 청년 간담, 행사)
청년문화·예술(축제)	■ 청년이 지역 내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한 창작활동 및 공연 프로그램 등
청년권리·참여	■ 청년정책 포럼, 청년정책 아카데미 운영, 청년협의체 지원, 청년정책 아이디어 발굴, 청년공익활동 등

자료: 전북자치도 내부자료

▌지속 가능한 안착을 위한 성과 및 과제

○ 성장 사다리 관점의 단계적 지원 체계 고안의 성과

- 초기 소모임에서 로컬 비즈니스, 전국 단위 공모로 이어지는 청년 단체의 단계별 '성장 경로' 선제적 설계

- 차별화된 성장 사다리 모델 구축을 통한 정책적 상상력 및 우수성 인정

○ 단년도 회계주의에 따른 활동 연속성 보완 필요

- 단년도 보조금 체계 기반의 공모 추진으로 인한 연말연시(사업 종료 후 이듬해 초 교부 시점 사이) 활동 공백기 발생

- 사업의 단절 없는 연속성 보장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요구

○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자격 요건의 탄력적 운용 고려

- 공동체 결성 시 요구되는 획일적 인원 기준(예: 5인 이상)이 인구감소 지역 청년들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 존재

- 지역별 인구 특수성 및 시·군별 여건을 감안한 자격 요건의 유연화 필요

○ 사업 간 유기적 연계성 보완을 통한 진입 병목 해소

- 개별 사업의 고정된 지원 자격·규모로 인해 전 단계 우수 단체가 상위 단계로 매끄럽게 진입하지 못하는 단절 현상 발생
- 역량 검증 단체 대상 심사 우대 및 '패스트트랙' 등 연속적 성장을 돕는 징검다리 장치 도입 요구

2) [유형 2] 경제적 자립 및 자산 형성 부문 (활력수당, 두배적금, 정착지원 등)

▌주요 사업 및 정량적 추진 현황

○ 정착 기반이 취약한 취업 초기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활력수당', '전북형 청년후계농 육성', '지역정착 지원사업' 및 '청년 두배적금' 등을 다각도로 시행 중임

○ 참여 청년 대상 성과 조사 결과, 청년활력수당의 경우 전반적인 정책 만족도가 93.2%에 달하고 실제 재직유지 도움 효과가 91.7%로 나타나는 등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일차적인 사회적 안전망 기능 수행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기록함

[표 3-14] [맞춤형 활동 및 수당]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맞춤형 활동 및 수당]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목적)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수당 지원을 통해 사회활동촉진 및 청년생활기반 지원
(사업개요) 도내 거주 구직청년을 대상으로 6개월 간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구직역량강화 교육 운영
- **수당지원** : 학원수강료, 교재 구입비, 자격증 접수비, 면접활동비
- **역량교육** : 취창업 특강, 면접 교육 ※ 참여자 1회 참여 의무(선정 후 2주 이내)

(참여현황)

- 총괄

계		취업 이력이 없는자 (4대보험 미가입)		30시간 미만 근무자 (평균급여 1,253,960원 이하)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폐업 신고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0	100	1,846	92.3	125	6.3	29	1.5

- 성별

계		남		여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0	100	756	37.8	1,244	62.2

- 연령

계		18~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0	100	478	23.9	715	35.8	458	22.9	349	17.5

- 미취업기간

계		1년미만		1년 ~2년미만		2년 ~2.5년 미만		2년 6개월 ~3년 미만		3년 이상 ~3.5년미만		3년 6개월~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0	100	835	41.7	385	19.3	129	6.5	105	5.3	72	3.6	474	23.7

자료: 전북자치도 내부자료

[표 3-15] [맞춤형 활동 및 수당]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맞춤형 활동 및 수당]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목적) 자산형성 및 금융·컨설팅 지원으로 생활안정 기반 조성
(사업비) 3,329백만원(도비 53%(1,769), 시군비 47%(1,560)
적금 : 3,120백만원(도 50%, 시군 50%) = 100천원×12개월×2,300명
교육 : 209백만원(도비) = 온·오프라인 교육 4시간, 컨설팅 1시간 *미이수시 해지
(사업대상) 도내 거주 근로 청년 2,600명(18~39세, 중위소득 140% 이하)
'25년 선정자 : 1,300명, '26년 신규 선정자 : 1,300명
(주요내용) 본인 납입금 적립 시 동일금액 지방비 매칭(2년 만기)지원 및 금융교육·컨설팅 지원
[본인적립금(10만원)+지자체 매칭지원금(10만원)]×2년+이자(α)= 약 500만원

〈광역도 유사사업 추진현황〉

지역	사업명	연령	금액	기간	최대수령 금 액	지자체 월 지원액
경기	청년노동자통장	18~34세	10만원	24개월	480만원	월 10만원+만기축하금 지역화폐 100만원
강원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18~45세	10만원	36개월	720만원	월 10만원
전북	청년두배적금	18~39세	10만원	24개월	480만원	월 10만원

전남	청년희망 디딤돌통장	18~45세	10만원	36개월	720만원	월 10만원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19~39세	20만원	24개월	960만원	월 20만원+결혼축하금 120만원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18~39세	20만원	24개월	960만원	월 20만원
제주	희망사다리 일자리 재형저축	15~39세	10만원	60개월	3,000만원	월 25만원+업체 15만원

※ 충북, 충남 미시행

자료: 전북자치도 내부자료

[표 3-16] [맞춤형 활동 및 수당]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맞춤형 활동 및 수당]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목적) 정착기반이 약한 취업 초기 청년들의 생활보조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과 지역정착 지원을 통한 전북 활력 제고

(대상) 전북도 내 거주하는 근로청년(18~39세)을 대상으로 6개 분야(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도내 합산 6개월 이상 종사
('19~'20년) 431명 → ('21년) 1,000명 → ('22년) 2,410명 →
('23~'26년) 매년 3,000명 선발

(사업내용) 월 30만원씩 최대 1년 지급

(지원항목) 건강관리, 자기개발, 문화레저, 일반소비, 생활소비

(참여결과) '25년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만족도

- 만족도

재직유지 도움	지역정착 도움	지역만족도 높음	추천의사 있음
93.2%	91.7	90.5%	98.7%

- 기타응답 및 건의사항

참여경로	지원항목	강화필요	보완필요
·지인추천(63.1%)	·복지몰(34.7%)	·복지몰(28.4%)	·콘텐츠 및 상품부족(67.4%)
·홈페이지(25.5%)	·생활소비(26.5%)	·생활소비(20.2%)	·기타(18.9%)
·인터넷(6.5%)	·교통비(10.0%)	·여행레저(13.6%)	·지원금 사용 어려움(12.0%)

- 분석결과

- 청년수당 만족도 높음 → 지속적인 지원 필요
- 복지몰 상품의 다양성 부족 → 현대이지웰 논의, 입점 상품 점진적 확대
- 참여경로 지인추천 높음 → 다양한 홍보방안 모색

자료: 전북자치도 내부자료

▌지속 가능한 안착을 위한 성과 및 과제

○ 지원의 외연 확대와 일차적 사회 안전망 구축 성과

- 청년 삶의 경제적 영역 내 지원 체계의 안정적 안착 유도
- 기반이 취약한 지역 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정주체감 제고를 위한 일차적 안전망 구축

○ 정량적 만족도를 넘어선 질적 출구 전략 중심의 지표 관리 필요

- 현금성·포인트성 복지 정책의 높은 만족도 대비 단순 수혜 인원 확대 중심의 투입 관리 치중
- 지원 종료 이후 지역 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연계를 위한 출구 전략 중심의 성과 관리 시점 도래

○ 활동 중심에서 자립·정착 중심으로의 전환기 컨설팅 강화 요청

- 초기 '교류 중심 활동'에서 '지역 비즈니스 창출 및 경제적 자립' 단계로의 이행기 진입
- 청년의 기획 역량과 실질적 경영·시장 안착 역량 간 간극 해소를 위한 전문 멘토링 프로그램 고도화 병행

3) [유형 3] 정책 참여 및 거버넌스 부문 (참여단, 생생아이디어 등)

▌주요 사업 및 정량적 추진 현황

○ 청년 당사자 중심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 청년정책참여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직접 수렴하는 '생생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추진하고 있음

[표 3-17] [정책 참여 및 거버넌스] 전북청년정책참여단

[정책 참여 및 거버넌스] 전북청년정책참여단

(목적) 도내 청년참여 활성화, 청년 정책발굴·제안

(사업개요) 「청년기본법」 제15조,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5개 분과(일자리/교육/주거/복자·문화/참여·권리)의 활동(1년 단위로 운영)

(주요내용) 청년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제시 및 참여, 지역 현안 청년 문제 도출 및 시책 반영 건의, 자문 등

〈2025년도 정책 제안 현황〉

분과	사업명	제안 내용
일자리	5인 미만 사업장 내 육아 환경 조성 지원	· (필요성) 5인 미만 사업장 청년 일 가정 양립 · (주요내용) 사업장 내 육아 환경 조성 지원 - 보육교사 인건비, 육아 공간 지원
일자리	구직 청년 스타트업 실무경험 인증 및 취업 연계 사업	· (필요성) 스타트업 실무 경험을 '경력 크레딧' 인정하여 이후 창업 지원사업 등 가점 부여 · (주요내용) 창업 경력 크레딧 및 경험 인증, 취업 가점 부여
주거	집 구할 땐 같이 가자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서비스	· (필요성) 부동산 피해 사례 사전 예방 · (주요내용) 전문가(주거복지사, 공인중개사) 매칭 및 현장 동행으로 집보기~계약까지 지원
주거	전북형 여성청년 사회주택 시범 사업	· (필요성) 여성 청년 주거 불안정 심화 · (주요내용) 여성 청년들을 위한 소규모 사회주택 시범사업 추진
교육	미혼청년 연애의 정석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 (필요성) 혼인율 급감, 데이트폭력 등 피해 심각 · (주요내용) '전북 청년 연애의 시작' 교육 프로그램(심리학, 소통 등) 운영, 데이트 비용 지원
교육	전북형 집단청년 마음정신건강 서비스	· (필요성) 1:1 개인 상담보다는 집단 기반 심리 돌봄 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일상적 정서 공유가 필요 · (주요내용) 정기적 일상 감정 나눔 모임, 또래 리더가 진행하는 마음 공유회, 예술 활동 소모임 구성
복지·문화	희귀난치성질환 청년 등 교통비 지원	· (필요성)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 · (주요내용)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KTX, 버스비 지원
복지·문화	경계선지능인 청년정책 수립 조사 및 기반 구축 연구	· (필요성)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구체적 사업 부족 · (주요내용) 경계선 지능 청년정책 연구
참여·권리	청년 체감 온라인 플랫폼	· (필요성) 플랫폼 기능 강화 의견 제출 및 정책 단계별 공유 활성화 · (주요내용) 정책 제안 플랫폼 기능 강화 및 단계별 공유 세분화
참여·권리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 (필요성) 체계적 모니터링을 통해 청년 목소리 반영 · (주요내용) 오프라인 모니터링단(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 운영,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자료: 전북자치도 내부자료

[표 3-18] [정책 참여 및 거버넌스]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

[정책 참여 및 거버넌스]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

(목적) 청년단체의 특성에 맞는 우수 아이디어 발굴·지원 및 청년이 구상·제안한 사업을 지원

(사업개요) 5인 이상의 청년단체·법인을 대상으로 단체별(12개 단체·법인) 최대 50백만원('25년 기준)의 과업수행비를 지원함. (2년 단위로 지원)

(사업내용) 청년 및 청년단체가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청년 특성에 적합한 우수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제안한 사업 지원

〈2025~2026년 전북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 사업 참여현황〉

지역	청년단체명	사업명	주요 내용
전주	살롱드국악 선율모리	결혼 장려 프로젝트	· 전주지역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교류를 유도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전통문화 기반 참여형 맞선 프로그램 운영
	주식회사 엑솔	전북 청년 상생 아이디어	· 지역 자원과 연계한 플리마켓, 청년 창작 제품 판매, 판로개척 전략 및 브랜딩 교육 등
	화	청년의 물결, 전북을 물들이다	· 플래시 몹을 통한 청년 문화 창작과 향유 지원으로 활력 증진 및 인구유입 도모
군산	브랜더스	군산 창업 런케이션	· 청년 창업 교육과 지역 관광을 결합한 '군산 창업 런케이션'(Learning+Vacation) 프로그램 운영
	유레카 군산 협동조합	군산 청년들의 축제 객주야장	· 청년 응원을 위한 야시장
익산	여의주 협의체	솔로 이리와	· 커플 매칭 프로그램 운영, 솔로 이리와 소규모 행사 개최, 익산 관광지를 기반으로 한 데이트 코스 개발
	익산청년 드림협동조합	이리어게인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젝트 운영, 농촌지역 지역변화 프로젝트, 도농 페스티벌 개최
	익산광역시 청년모임	익스텝(IKSTEP) 프로젝트	· 익산시내 공원에서 스탭박스 함께하는 운동, 홈트레이닝 영상 제작, 우울증 타파를 위한 캠페인 진행
남원	치움	받침 : 문화재를 지키는 작은 혁신	· 청년단체에서 주도하는 문화재 보호, 소방안전 강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공공시설, 문화재와 조화롭게 어울리는 디자인의 소화기 받침대 도입
완주	씨앗(C.art)	전북 청년 예술 창작 레지던시 & 글로벌 연계 플랫폼 개발	· 청년 창작공간 레지던시 운영
부안	문화예술 공장 한량	촌며드는 날	· 청년과 마을간의 협업을 통해 '오늘'을 함께 기억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창작 프로젝트
	부안청년 협동조합	扶(부)안바다 +HYPE ON	· 부안 및 전북을 글로벌로 알려주는 컨텐츠 제작 · 청년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육성 및 플렛폼 구성

자료: 전북자치도 내부자료

[표 3-19] [정책 참여 및 거버넌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책 참여 및 거버넌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목적)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기본·시행계획 등) 심의·조정 등을 위한 의결기구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도지사 및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으로 두고, 도의회 의원 및 청년기업인 및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위촉직 1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
(기능)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자문·심의·조정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참여기구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2025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회의명	참석자	주요내용
1	'25년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행정부지사 등 16명	· '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심의·의결
2	'25년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기획조정실장 등 11명	· 전북자치도 청년참여위원회 추가 지정
3	도 청조위-완주군 청년 간담회	기획조정실장 등 25명	· '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설명 및 지역현황 관련 소통간담 등
4	도-시군 청조위 권역별 소통 간담회(1권역)	인구청년정책과장 등 19명	· '25년 청년 유출입 대응 추진상황 설명 및 지역 청년정책 관련 소통간담 등
5	도-시군 청조위 권역별 소통 간담회(2권역)	인구청년정책과장 등 23명	· 시군 대표 청년정책 관련 소통간담 및 청년정책위원 의견수렴 등
6	'25년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인구청년정책과장 등 15명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안건상정을 위한 청년참여예산 제안사업 보고 및 의견수렴
7	도-시군 청조위 권역별 소통 간담회(3권역)	인구청년정책과장 등 22명	· 시군 대표 청년정책 관련 소통간담 및 청년정책위원 의견수렴 등
8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네트워크 워크숍	민간위원장 등 19명	· 청년정책 추진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군산시 청년 공간 탐방 등

자료: 전북자치도 내부자료

[표 3-20] [정책 참여 및 거버넌스] 청년참여예산 운영

[정책 참여 및 거버넌스] 청년참여예산 운영

(내용) '청년참여예산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통해 청년이 직접 제안하고, 많은 청년이 원하는 곳에 예산을 직접 사용

(사업개요) 전북 청년(18~39세)을 대상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자문화,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을 청년이 제안하고, 사업부서 검토와 효과성/타당성 등 검토를 거쳐 청년정책 예산에 반영

청년제안 접수 '청년참여예산 플랫폼'	➡	사업부서 검토 (15명 이상 공감)	➡	청년정책조정 위원회 의견수렴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의견수렴	➡	예산편성 반영
사업 신청 (청년→도)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법령 검토		효과성, 타당성 등 검토		최종 의견수렴		편성 및 의회 제출

2025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제안 제목	제안자	소요예산 (백만원)	공감	소관부서	정책 반영
계	6건	참여단(3) 청년(3)	-	-	-	청년참여예산(3) 자체사업비(2) 일반예산(1)
1	농생명기반 청년예술인 활동지원	청년	130	17	인구청년 정책과	여 (청년참여예산)
2	청년 1인가구 식생활 개선 요리교실 운영	청년	36	15	인구청년 정책과	여 (청년참여예산)
3	청년 미래 동반 사업 (예비·신혼부부 및 자립 준비 청년 지원)	청년	35	15	여성가족과	여 (청년참여예산)
4	청년 체감 온라인 플랫폼	참여단	40	17	인구청년 정책과	여 (허브센터 자체사업비)
5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참여단	0.5	16	인구청년 정책과	여 (허브센터 자체사업비)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참여단	50	18	교육협력과	여 (일반예산,연구용역비)

자료: 전북자치도 내부자료

[표 3-21] [지역 거점 및 네트워크] 전북청년허브센터 운영

[지역 거점 및 네트워크] 전북청년허브센터 운영

(목적)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상담, 청년참여 확대, 중앙-시군센터 협력사업 수행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24조(청년센터 설치·운영)
(기능) ①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③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
④청년의 자립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⑤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
⑥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운영)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최초위탁 : '20.5월)
(주요사업)

〈전북 청년허브센터 주요 사업 현황(2026)〉

사 업 명	예산	사 업 명	예산
자체사업 : 12개 사업 293백만원		위탁사업 : 5개 사업 565백만원	
청년정책참여단 운영	50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교육·컨설팅	209
청년협력 네트워크	20		
찾아가는 청년정책 상담창구	15	청년1인가구 식생활 개선 요리교실 운영 (청년참여예산)	36
청년 멘토링 원스톱 서비스	5		
청년 글로벌 체험단	36		
미리청년캠프	18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150
청년정책 정보제공 홈페이지 활성화	36.5		
청년정책 홍보	15	전북특별자치도청년축제	120
청년정책 가이드북 제작	20		
허브센터 성과물 제작	14		
찾아가는 청년참여예산학교	13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50
청년취업지원패키지	50		

자료: 전북자치도 내부자료

▌지속 가능한 안착을 위한 성과 및 과제

○ 다변화된 청년 욕구에 대응하는 다각적 사업 추진의 성과

- 일자리·주거·복지·거버넌스 등 다부서 및 시·군 유관기관 중심의 다각적 사업 추진

- 지역 청년의 다변화된 욕구 및 이행기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적 기반 확대

○ 부서 간 칸막이 완화를 통한 '정책 경로' 연계성 확보 요청

- 거버넌스 사업 제안 아이디어의 단발성 종료 방지 및 실제 집행 부서 본 사업으로의 연계·확장 필요

- 부서 간 정책 조율 기능 강화 및 전북형 성장 사다리 구축 필요

○ 전달체계 통합을 통한 수요자 편의성 제고

- 유사·연관 사업의 부서별 분절 추진에 따른 청년들의 정보 파악 애로 발생

- 시·군 청년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거점의 수요자 중심 통합 정보 전달체계 및 기능적 연계 강화

○ 중간지원조직의 역량 강화 및 행정 효율화 유도

- 현장 청년센터의 단순 행정 대행·정산 창구 기능 탈피 및 성장 종합 컨설팅 거점화 필요

- 다부서 합동 협의체 운영 및 현장 매니저의 행정 부담 완화 조치 병행 필요

○ 공모 유치를 넘어선 자생적 생태계 구축 중심의 성과 관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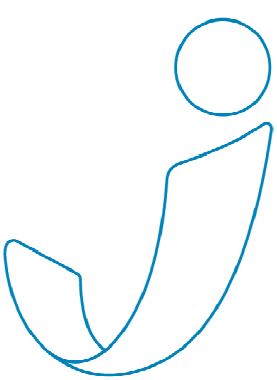
- 정부 공모 유치 및 단기 사업비 집행 등 단순 정량적 성과 관리 방식에서 탈피 필요

- 공공 지원 종료 후 독립적 자립을 위한 민관 협력 비즈니스 모델 인큐베이팅 강화

제4장

전북 청년 단체 활동 사례 심층분석

1. 심층면접 개요
2. 청년 활동 사례 분석
3. 시사점



제4장 전북 청년 단체 활동 사례 심층분석

1. 심층면접 개요

가. 조사 배경 및 목적

▌사례조사: 청년마을(전북형 청년마을 및 행안부 청년마을) 사업 수행 단체 중심

○ 전북 청년들의 자생적 생존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청년마을 사업 수행 단체로 집중하고, 이들에 대한 심층면접에 정책·중간조직·전문가 자문을 결합하여 다각적으로 접근함

○ 청년단체 다수 단체를 폭넓게 접촉하기보다 집중성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조사 대상을 전북형 청년마을 사업 및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사업을 수행 중인 단체로 집중함

- 청년마을 사업은 여타 청년지원 사업 대비 사업비 규모가 크고, 수행 단체가 이미 다년간 다양한 지원사업을 경험한 주체인 경우가 많아, 단일 사업의 성과를 넘어 여러 정책을 거쳐온 성장 과정 전반을 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생 경로 추적에 적합

○ 단순히 성공담을 수집하는 것을 넘어, 청년들의 정주 의지가 어떤 지점에서 굴절되거나 멈추는지를 실증함. 이를 통해 전북이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 좋은 지역이 되기 위해 필요하거나 혹은 수정되어야 할 환경 요인을 발굴 목표로 함

○ 청년마을 주체를 자립·지향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단체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질의함

- 생존주체: 자체 매출을 토대로 자생적 구조를 확보하고 영향력을 확장 중인 단체
- 과도기·미래지향형 주체: 행정의존을 낮추며 자립 구조로 전환 중인 단체
- 한계주체: 활동 지속 의지는 높으나 재정·인력·규제 등의 장벽으로 활동의 유지·축소 기

로에 있는 단체(자원 소진으로 규모 축소·방향 전환을 겪었거나, 지원 종료 시 유지가 어려운 단체를 포함)

▌정책·중간조직·전문가 자문의 병행: 현장 진단의 검증과 격상

○ (대상) 현장 단체 면접에서 반복 확인된 정성적 진단을 정책 설계·중간지원·실증 분석의 시각에서 교차 검증하기 위해, 도(道) 청년정책 담당자, 중간지원조직 관리자, 정책 자문, 인구감소 대응 연구 전문가 등 정책·중간조직·전문가 자문을 병행함

○ (목적) 개별 단체의 경험을 인구감소지역 전반의 구조적 맥락과 연결하고, 현장 진단을 실증 분석으로 검증·격상하여 정책 제언의 근거를 보강

나. 조사방법 및 주요 질문

▌조사방법

○ 조사 방식: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대면 심층면접 중심(필요시 FGI 인터뷰 병행)

○ 면접 기간: 2026년 5월 21일 ~ 2026년 7월 1일

○ 면접 시간: 1인당 90분 ~ 120분 내외

○ 조사 대상[4)]

- 심층면접 및 FGI: 9명
- 분야별 자문회의: 6명
- 본 보고서의 심층면접자 코드는 연구의 분석 맥락을 명확히 하기 위해 A(Activist, 현장 활동가 및 행위자), E(Expert, 자문전문가), EA(Expert Activist, 전문가 겸 행위자)로 구분하여 부여함

4) 심층면접 및 자문 대상의 개별 신원은 연구윤리에 따라 익명 처리하며, 본문에서는 유형 부호(생존/과도기/한계주체)와 직위·소속 유형으로만 표기함

[표 4-1] 청년 활동관련 심층면접자 및 자문위원 리스트

연번	이름	성별	거주지역	분야	주요내용
1	A-1	남성	전주	도시재생/ 공간기획	· 거점 공간 규제 완화(전대 허용) 제언 · 보조금 사업의 인력 소진(번아웃) 한계 지적 · 주민과의 거창한 활동보다 일상적인 느슨한 유대 강조
2	A-2	남성	익산	목공기반 제조/ 시공	· 보조금 사업이 본업 매출을 감소시키는 구축 효과 지적 · 선배 팀의 실전 인프라를 신생팀에 전수하는 '공동 입찰 컨소시엄' 제안
3	A-3	여성	익산	로컬 매거진/ 축제 기획	· B2B/B2G 대상 용역 수주 중심의 자립 구조 확립 경험 공유 · 예산은 관이, 기획·집행은 청년 앵커가 전담하는 민간 위탁형 거버넌스 제안
4	A-4	여성	고창	문화예술 기획 /복합문화	· 모든 정책이 '귀농' 중심이라 귀촌·문화예술 청년이 고립됨 · 친구 3명이 없어 군 동아리 지원(100만 원)도 포기했던 인적 고사 경험 · 기성세대 예술 단체 중심의 행정 구조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함 · 향후 개인 사업자 컨소시엄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으로 발전 희망 · 서점을 매개로 대안적 삶을 꿈꾸는 청년 대상 '지역 서점 창업 캠프(5박 6일)' 운영
5	A-5	여성	고창	문화예술 기획 /복합문화	· 총 6억(연 2억) 중 마지막 예산은 청년 사비(약 4,000만 원) 선지출 후지급 구조라 가혹하다고 평가 · 인건비 인정 기간(5~11월)과 실제 활동 기간의 불일치 모순 지적 · 정책의 나이 분절로 40~50대 지역 기성세대의 역차별 질시(이중고) 유발 · 행정 현물 지원 및 민간 직접 지원의 다양화 요구 · 외부 디자이너를 유입시켜 고창 세계유산·특산물을 재감각한 '로컬 굿즈 개발 및 유통망 구축'사업 수행

연번	이름	성별	거주지역	분야	주요내용
6	A-6	여성	고창	문화예술 기획 /복합문화	· 고창 내 청년 네트워크가 공무원 및 대규모 후계농 중심으로 편중됨 · 지역 내 외지 청년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텃세가 존재함을 체감 · 가치 중심 활동에서 자립을 위한 비즈니스 마인드로 체질 개선 중 · 외지인과 주민을 잇는 연결 다리 역할을 자처하며, 세계유산 연계형 '해찰여행사 콘텐츠' 개발
7	A-7	여성	김제	로컬 F&B/ 비즈니스 상권	· 사적 이익 보장형의 '느슨한 비즈니스 연합체' 생존 모델 제시 · 연초 보조금 공백기 문제, 농촌형 젠트리피케이션 및 교육 인프라 부재 지적
8	A-8	여성	무주	농업 6차 산업 /아웃도어	· 인적 자본 고사 및 열악한 농촌 정주 인프라의 한계 체감 · 행정의 장비 구입 사유화 프레임을 타파하고 로컬 앵커 기업 육성 제안
9	A-9	남성	장수	스포츠 비즈니스 (트레일)	· 보조금 거부 및 행정 현물 지원(MOU) 중심의 100% 비즈니스 자율성 확보 · 1차 농산물 소비 촉진 생태계 구축 경험 및 청년 주거 절벽 문제 해결 촉구
10	EA-1	남성	전주	정책 컨설팅	· 서류 중심 행정이 만든 '지원금 헌터' 양산 비판 · 공공 공간 개방 및 텃세를 막아줄 '마을 어른' 역할 강조
11	EA-2	여성	전주	정책 거버넌스/ 의회	· 청년 정책의 직접 참여자로 활동하다가, 그 경험을 살려 지금은 정책 보좌관으로 활동 중임 · 청년정책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필요를 강조
12	EA-3	남성	완주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	· 창업 만능주의 탈피 및 공공 서비스 공급자 트랙 신설 제안 · 초기 정산 없는 소액 활동비(시간 자본) 지급 필요성 강조
13	E-1	남성	전주	도청 실무/ 행정	· 단년도 회계주의 타파를 위한 다년도 통합 기금 조례 신설 제언 ·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한 거점 공간 수익권한 패키지 부여 강조
14	E-2	여성	전주	광역 중간지원조직/ 창업	· 시·군 청년센터 도비 매칭을 통한 광역 컨트롤타워(HR/데이터) 기능 확립 요구 · 악덕 브로커(블랙 엔젤)로부터 청년 기업을 보호할 공공 엑셀러레이팅 방어막 제안

연번	이름	성별	거주지역	분야	주요내용
15	E-3	남성	원주	청년정책/ 인구감소대응	· 인구감소지역 89곳이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되는 등 청년정책의 효과는 실증 · 목표를 '인구 유입'이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활력 증진'으로 재설정하고 지역 유형에 맞게 성과지표 차등 설정 필요 · 지원의 다음 단계는 인프라에서 '사람·주체 양성'으로 옮겨가야 하며, 현금성 지원은 전입의 트리거로 작동 가능

출처: 저자 작성

▌주요 질문 영역

○ ① [자기 진단] 전북형 자생 생태계 매트릭스 맵핑으로 비즈니스 강도 및 행정 독립정도에 따른 스스로의 위치 점검

○ ② 진입 모멘텀 및 정착 동기: 결정 경로 및 기대와 현실의 차이

○ ③ 경제적 자생력과 밸류체인: 수익모델, 민간 연계 등

○ ④ 사회적 자본과 지역 결속력: 지역과의 관계 및 정서적 방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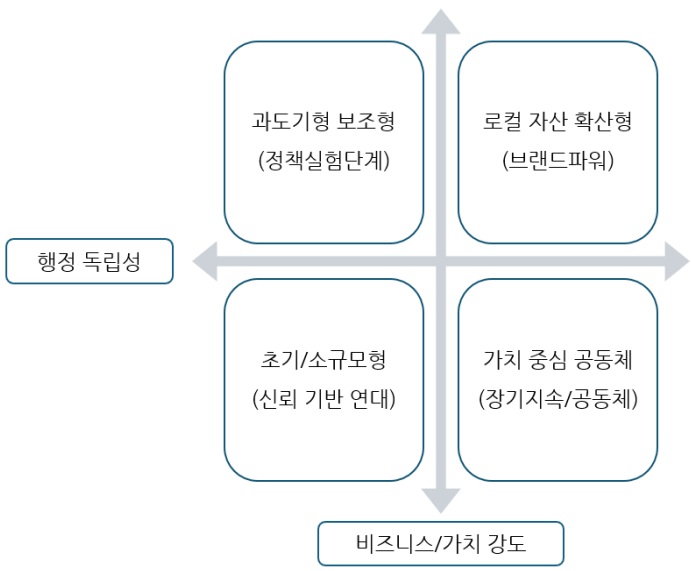
○ ⑤ 행정 체계 및 정책적 불연속성: 중앙부처, 도, 시군 담당부서와의 관계 및 지원 경험

○ ⑥ 회복탄성력 및 지속 가능성: 위기 극복 경험 및 지속 가능성

○ ⑦ 전북의 가능성과 제언: 전북 청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언

[표 4-2] 전북 청년 사업가/활동가 대상 심층면접 질문지(안)

구분	내용
기본정보	- 조직명/대표자 성함: - 운영 기간: ( ) 3년 미만 ( ) 3~7년 ( ) 10~20년 ( ) 20년 이상 - 조직 규모: 상근 인력 ( )명 / 4대 보험 가입 인원 ( )명 - 재원 구조: 보조금 비중 ( )% / 자체 매출 비중 ( )% / 기타(기부, 투자 등) ( )% - 정착 유형: ( ) 지역 연고 청년(U턴) ( ) 비연고 외지 청년(I턴) - 공간 자산: ( ) 행정 무상/저가 임대 ( ) 민간 임대 ( ) 자가 소유(공동체 자산화)

구분	내용
[자기 진단] 전북형 자생 생태계 매트릭스 맵핑	- 아래 매트릭스에서 귀하의 조직은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직의 현재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분면 안에 자유롭게 점을 찍어주세요. 점의 크기로 조직의 규모를 표현해 주셔도 좋습니다. 
진입 모멘텀 및 정착 동기	- [결정 경로] 수도권이나 타 지역이 아닌 전북에서, 그리고 지금의 아이템으로 사업/활동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입니까? - [기대와 현실] 시작 당시 기대했던 전북의 자원(지원금, 인프라 등)과 실제 정착 후 체감한 현실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었나요?
경제적 자생력과 밸류체인	- [수익모델] 보조금 지원이 완전히 종료된다고 가정할 때, 내일 아침 즉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하만의 핵심 비즈니스는 무엇입니까? - [민간 연대] (장수-전주 모델 등) 행정의 매칭 없이 민간 주체들과 협력(구매, 가공, 유통 등)하게 된 과정이 있습니까?
사회적 자본과 지역 결속력	- [지역 융합] 청년들만의 고립된 섬이 되지 않기 위해 지역 주민이나 소상공인과 맺고 있는 구체적인 관계(행사, 기부, 고용 등)가 있습니까? - [정서적 방어선]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행정 공무원이 아닌 "나를 도와줄 지역 사람 3명"을 즉시 떠올릴 수 있습니까? 그들과는 어떤 계기로 가까워졌나요?

구분	내용
행정 체계 및 정책적 불연속성	- [브레이크 포인트] 행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귀하의 사업 본질이나 조직의 자율성을 가장 심하게 훼손했던 불합리한 절차나 규제는 무엇이었나요? - [거리두기] 행정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지원을 받지 않거나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던 전략적 선택의 경험이 있습니까? - [러닝메이트] 행정이 감독자가 아닌 리스크를 나누는 동반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어야 할 행정 관행은 무엇입니까?
회복탄성력 및 지속 가능성	- [위기 극복] 예산이 끊기거나 핵심 멤버가 떠나는 등 조직이 해체될 뻔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그때 살아남은 유전자는 무엇입니까? - [세대교체] (20년 이상 공동체 등) 리더 1인의 헌신이 아닌, 후배 세대나 시스템에 의해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된 장치가 있습니까? - 지원제도를 개선한다면 한 가지 우선 정책은 무엇일까요?
전북의 가능성과 제언	- [전북의 강점] 귀하가 경험한 전북은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 좋은 지역"입니까? 그렇게 느끼게(혹은 느끼지 못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은 무엇인가요? - [최종 의견] 전북에 새로 진입하려는 청년들에게 '자생력'에 대해 조언해 준다면?

자료: 저자작성

2. 청년 활동 사례 분석

가. 분석 방향

○ 심층면접을 수행한 청년 활동가 주체와 정책·중간조직·전문가 시각을 재구성해 도내 청년단체의 활동 이력과 생존 경로를 입체적으로 진단하고자 함

○ 청년단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하는지, 자생적 성공의 토대는 무엇으로 유형화되는지, 그 과정에서 정책 연계가 끊기는 지점은 어디인지를 차례로 분석하여, 이를 전북형 청년지원 연계방안과 정책 비전의 기초 근거로 삼고자 함

○ 청년정책의 실제적 과제는 개별 사업의 파편적 집행이 아니라 사업과 사업 사이의 유기적 연결에 있고 보고, 전북의 청년단체와 전북자치도에서 설계된 사업 라인과의 조우 혹은 다른 변형을 추적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진입 장벽, 후속 지원 공백, 정주 기반 부재 등으로 요약되는 연계 단절 지점에서 청년들이 경험하는 구조적 좌절을 분석하고자 함

○ 단발성 사업의 양적 확장을 지양하고, 청년 주체가 단계의 연속성을 직접 기획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매개자(연결 기획자) 및 정주 인프라를 동시에 투입하는 통합적 접근을 제안하고자 함

나. 청년단체의 성장 경로와 단계별 정책 연계

1) 전북자치도의 '단계적 지원 라인'과 현장의 실제

○ 전북자치도 청년정책 구조상 청년단체 지원사업은 표면적으로 정합적인 단계적 라인을 형성하고 있음

- ① 청년공동체 활성화(조직화 단계): 초기 관계 형성을 위한 소액 지원 (단체당 약 500만 원)
- ② 생생아이디어(도약 단계):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 및 발굴하는 과정

- ③ 청년마을(정착 단계): 지역 정착을 목적으로 기존 단체가 신규 유입 청년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

○ 최근 농생명 기반의 '산업화 단계' 보조사업이 추가되며 행정은 이 라인을 마중물 삼아 궁극적으로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모에 진입시키는 선순환 성장을 상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도내 행안부 청년마을 상당수가 이 경로를 거친 것으로 파악됨

> "저희 그림은 단계적으로 구분돼 있어요. 공동체 활성화는 조직화, 생생은 비즈니스 모델 발굴, 청년마을은 지역 정착에 목적을 두는 거죠." (자문회의 E-1)

○ 그러나 현장 활동가들의 실증적 경험은 이 연계사업의 기획이 사전에 정교하게 설계된 유기적 연속체가 아니었음을 방증함

○ 다년간 청년마을 심사에 참여해 온 선배 활동가 및 전문가들은 행정이 상정한 순차적 라인이 현장에서는 상호 분절된 별개의 트랙으로 인지되어 왔으며, 연계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극히 최근에야 시작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음

○ 명확한 연속성 설계에서 시작했다기보다는 다양한 규모 사업들이 병존함에 따라, 청년단체가 단선적 성장을 계획하고 지향하기보다 각 사업을 쇼핑하듯 단발적으로 선택해 수혜받는 재정 의존형 부작용이 관찰됨

> 생생 아이디어와 전북형 청년 마을은 좀 다른 트랙이었어요. 전북 청년 마을 다음에서도 행안부 청년 마을로 가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 생활권 로컬 브랜딩이든 또 다른 트랙을 찾아가는 팀들이 있고 아니면 자립 자생을 하는 팀이 있고, 그리고 생생 아이디어 같은 경우도 이다음에는 지역에는 청년 단체로 성장해 가는 이 트랙이라서 사실 청년 공동체와 그다음에 생생 아이디어와 전북 청년 마을은 다른 트랙이에요. (자문회의 EA-3)

> 그냥 쇼핑하듯이 이거 받았다 이거 받았다, 올해는 이거 받았다, 내년에는 이거 받았다. 같은 단체가 조금 다른 사고로 이런 경우들도 생기고 또 이 사업도 사업 공고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두 개의 차별성이 뭐지 그리고 이게 두 개가 연속적인 트랙이라는 걸 전혀 확인할 수 없었고 담당자도 달랐기 때문에 서로가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문회의 EA-3)

2) 네 갈래 성장 경로 — 설계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연결고리'

○ 개별 조직의 이력을 면담한 결과, 청년단체의 성장은 행정이 구축한 선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주체가 자기 조건에 맞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이어붙인 결과에 가까우며, 크게 네 가지 경로로 분류할 수 있음

▌1. 모범적 단계 연계형

○ 중앙부처와 광역·기초 지자체의 정책 자금을 다각적으로 결합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음. 청년창업농으로 출발해 귀농창업 지원자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식품 가공 육성지원을 통해 HACCP 인증을 확보하여 납품 구조를 만든 후,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농업 사업으로 지역 커뮤니티 기반을 다지고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 청년마을로 연계함

- 필요한 시기에 정책적 수단들을 층위별로 쌓아 올린 주체적 정책 활용 사례임

> 2022년도에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도 다행히도 청년 마을 사업이 선정돼서 계속해서 연계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올해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갖고 예비 사회적 기업 선정되고 이제 사회적 농장도 지정되고 (심층면접 A-8)

> (청년 농부 커뮤니티 사업이) 사실 수익 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 사업에 조금 힘을 빌렸었고 근데 그 지원 사업에 힘을 빌려서 저희가 지역에 좀 정착할 수 있었던 그런 밑거름이 됐던 것 같아요. (심층면접 A-8)

▌2. 소액 디딤돌 누적형

○ 초기 소규모 실험을 통해 기초 역량과 신뢰 자산을 누적해 온 사례도 존재함

○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1,000만 원 규모)을 마중물 삼아 시·군 단위 로컬크리에이터 및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1,000~4,000만 원 규모)으로 도약했던 이들은 공공 재원을 단순 자금이 아닌 조직 역량 스케일업과 지자체 신뢰 관계 형성의 디딤돌로 인식함

저희는 시작할 때 네 연차별로 작게는 천만원, 많이는 4천만 원 규모 계속 받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첫해 2022년도에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천만 원짜리를 먼저 받고 저희가 사진전도 열고 처음에 와서 이제 지역 자원 조사할 때 활동비로 그걸 썼고요....두 번째 해였을 때 저희가 ○○시 ○○형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원받았었고 한 3천만 원 규모였던 것 같아요 (심층면접 A-3)

▌3. 주무부처 선택형

○ 기초 지자체 단위의 과도한 경쟁률과 지역 내 소모적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전략적 선택을 취한 사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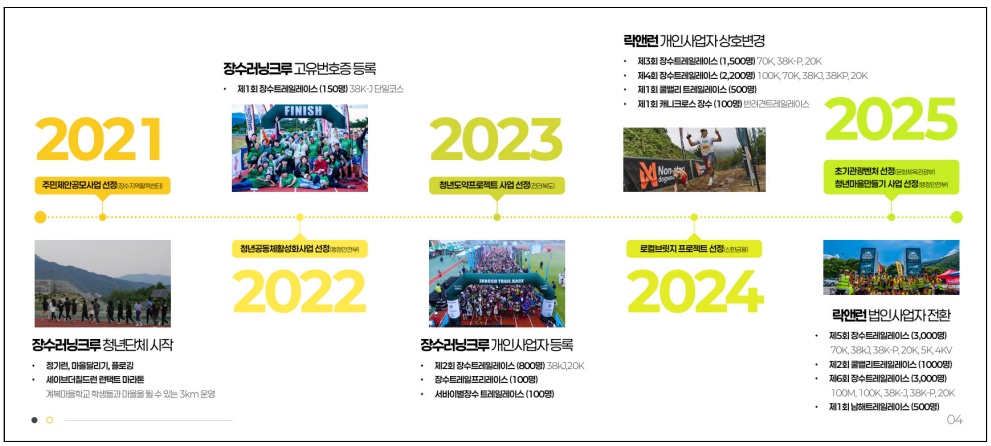
○ 시·군 예산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으나, 사업 스케일이 큰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및 도 단위 직할 사업을 우선적으로 공략하여 자생 기반을 확보함

저는 이제 제가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는 또 ○○시 청년들이 많이 지원을 하니까 굳이 제가... (심층면접 A-2)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시 예산을 받는 게 더 쉽잖아요. 주무부처에서 받는 것보다 경쟁률이 훨씬 낮으니까 ... (그렇지만) 저희는 저만 계획서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이제는 다 오래돼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막 쓰면은 다른 청년들하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심층면접 A-2)

○ 시군의 주민제안공모사업, 행정안전부의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전북 청년도약프로젝트 사업, 사기업의 로컬브릿지 프로젝트, 문화체육관광부의 초기관광벤처사업,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기관을 연계해서 사업을 만들어 나가기도 함(심층면접 A-9)

- 지원과정을 거치면서 동아리에서 개인사업자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자신들의 활동의 변화에 따라 법인체를 변경하기도 함



자료: 장수 ROCK N RUN 회사 소개서

[그림 4-1] 장수 ROCK N RUN 회사 소개서 중 회사 연혁

▌4. 외부 진입형

○ 행정의 사전 단계별 라인을 거치지 않고 외부에서 독자적 기반을 다진 후 대형 공모사업으로 직행한 사례도 볼 수 있었음

○ 인구감소지역 청년 모임을 진행해 오다가, 이 활동이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사업과 연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해서 청년마을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경우도 볼 수 있었음

> (저희는) 개인 사업자 3인의 컨소시엄 구조.... 21년도에 제가 고창에 이주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코로나 시기였기도 하고 그래서 이주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주를 하니까 이제 그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은 관심 있는 이제 문화 예술 관계 네트워크들이 저희집에 많이 놀러 오셨어요....그래서 저희가 뭔가 계속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 청년 마을 사업이 우리가 더 좀 다양한 방식으로 묶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는데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뭉친 건 아니고 원래 활동을 하고 있었던 멤버들이 이걸로 인해서 새롭게 한 번 더 이렇게 된 거죠.(심층면접 A-4)

○ 요컨대 행정의 관점에서 '단계적 라인'은 정합적이지만, 현장 청년단체들의 실제 생존

경로는 사전에 연결된 궤도를 달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연결고리를 발굴해 낸 과정에 가까움

○ 사업들이 자연스럽게 연계되기보다 주체가 직접 컨텍해 연결했다는 현장의 진술은 이를 증명하며, 이 '연계의 비설계성(분절성)'은 연계를 촘촘히 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더 필요함을 보여줌

다. 성공 사례의 유형 구분 — 무엇이 연계를 성공시켰는가

1) 두 개의 유형화 축

○ 청년 거점의 생존과 안착 메커니즘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자립도·지향성'과 '연계 성공의 토대'라는 두 가지 거시적 축을 설정하여 분석을 시도함

○ **자립도·지향상 축**(조직 성숙도 및 재정 독립성 축):

- 생존주체: 자체 매출 비중을 극대화하여 공공 보조금 없이도 비즈니스 자립에 안착한 유형
- 과도기·미래지향형 주체: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추진하며 행정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삭감 중인 유형
- 한계주체: 공공 재원 단절 시 활동 지속이 불가능하며, 최소한의 자원으로 조직 유지에 국한된 유형

○ **연계 성공의 토대 축:** 공공 재정의 기여에 따른 평가만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한 로컬 핵심 자산과의 관계에 주목하며, 현장 인터뷰를 기반으로 아래의 세 가지 구체적 유형을 도출함

2) 유형별 핵심 자본 및 정책 매칭 매트릭스

○ 청년 단체의 성장 유형과 안착 요인, 그리고 각각의 경로에서 발생하는 한계 지점과 정책적 처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이 구성해볼 수 있음

[표 4-3] 전북 청년 단체 성장 유형별 핵심 자본 및 정책 매칭 구조

성장 유형	핵심 안착 요인 (기반 자본)	현재 직면한 구조적 임계점 (브레이크 포인트)	전북형 유기적 연계 처방 (정책 제언)
지역자원 결합형	- 지역의 고유 환경·농산물 자산을 시장 콘텐츠 및 비즈니스로 번역하는 역량	- 대형 보조금(5억 원 규모) 종료 후 비즈니스 스케일업을 위한 로컬 금융 및 융자 투자 공백	- 일반회계 중심의 재정 지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특용 특례 보증 및 로컬 펀드 구조로 전환
기존 커뮤니티 토대형	- 기성세대 공동체가 이미 축적한 공간·토지 인프라 및 '배타성 없는 환대 자본'	- 선행 사회적 자본이 부재한 '무주공산' 지역으로의 모델 이식 불가능성 (시계열적 토대 한계)	- 신규 청년 진입 시 기초-광역 단위의 선배 주체 자산 개방 공유 플랫폼 (바우처 제도) 구축 지원
자생적 상권·관계형	- 독립적 비즈니스 단체들이 개별 생존하며 공간적 밀집을 이루는 '느슨한 협업 연대'	- 상권 활성화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상승(젠트리피케이션) 리스크 및 원주민 상권 갈등	- 공동체 자산화(지역 자산 매입) 지원 재원 매칭 및 민관합동 로컬 상권 갈등 중재 거버넌스 투입

출처: 저자작성

3) 유형별 메커니즘 심층 분석

▌지역자원 결합형 — 로컬 가치의 비즈니스 번역

○ 청년단체 중 하나는 산악지형이 대부분인 지역의 환경적 제약을 트레일러닝 스포츠 콘텐츠로 변역하여, 단발성 이벤트를 수천 명 규모의 지역축제로 스케일업함

○ 이 이벤트의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방문했다가 떠나는 것을 넘어 지역의 농가와의 협업을 유도하여 관계 자본을 형성함

> (저희 프로그램의) 강점 중에 하나는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응원해 준다는 건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예요. 다른 지역이랑 차별화되는게 가장 큰 강점이었던 것 같고... (심층면접 A-9)
>
> 마을 부녀회 분들이 이제 주먹밥을 만들어 주시고 한 번은 저희가 겨울에 한 번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공간에서 죽도 드리고 김치도 이렇게 좀 마을 주민분들이 얻어가지고 드렸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주민분들이 주먹밥만 주시는 게 아니고 김치도 드리고 국도 드리고 이렇게 정 있게 해 주시니까 참가자분들도 좋아하시고 주민분들도 그거 할 때마다 이제 뭔가 모이고 활력이 생기니까 (심층면접 A-9)
>
> 나와서 응원 좀 해달라고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같이 해 주시고 ... 이장님이나 거기 계신 분

> 들이 오미자 하시면 저희가 오미자 사서 선수분들 나눠드리고, 사과 농사 짓는 분 계시면 사과 좀 사가지고 사과도 드리고, 사과즙도 드리고,... 또 토마토 농장하시는 분과 같이 콜라보를 해서 대회가 끝나도 그 토마토즙을 선수분들이 계속 마시면서 맛있으니까 장소도 기억해 주시고 또 이제 이거 토마토도 잘 팔리고 대회도 홍보되고 토마토 집도 홍보되고 같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심층면접 A-9)

○ 다른 청년단체의 경우 고정비 부담이 가장 큰 주거·숙박 인프라를 초기 단계별 도약 사업(건축 워크숍 등)을 통해 분산 확보함으로써 초기 고정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연 매출 10억 원 대의 자생력을 확보

> 우선 사회적 농업 관련해 갖고 시설 개선비라고 하는 항목이 좀 있는데 그걸로 해서 처음에 이동식 숙소를 조금 어느 정도 좀 만들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생생 아이디어 사업으로 저희가 그런 집을 짓는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크지는 않아도 어쨌든 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숙소가 생기게 됐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 계속해서 나아가는 상황이 됐고 이제 그러면서 사회적 가치 연구원이라고 하는 네 이제 거기서는 SPC 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받고 있고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정박형 카라반을 2동을 더 갖다 놨어요. (심층면접 A-8)

▌기존 커뮤니티 토대형- 선행 사회적 자본과의 결합

○ 새롭게 활동을 시작했으나 기대를 받고 있는 한 청년단체의 경우 지역 내 선배 세대(은퇴·중장년 인문학 커뮤니티)들이 먼저 정착시켜 둔 문화적 토대 위에 진입함에 따라 안착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한 경우임. 텃세가 없는 기성세대의 환대와 실질적인 토지·공간 인프라의 개방이 결합의 핵심 요인으로 작동함

- 이는 역으로 청년 정착 모델이 아무런 사회적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단기 재정 투입만으로 복제·이식될 수 없음을 시사

○ 다른 청년단체의 경우에도 지역 내의 사회적 경제 커뮤니티의 비즈니스의 토대, 지역 내의 에너지, 그리고 지억 안의 협력 가능성 등이 청년 단체의 활동이 확대되는 계기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기존단체와 청년들간의)교집합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을을 꿈꾸다가 여기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뭔가에 비빌 언덕이 없으면 할 수 여기 내려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 ○○면에 고향이시고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멤버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또 형성될 수 있는 거지 무주공산에서 그게 형성 안 되는 거잖아요.(심층면접 A-5)

사회적 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토대 위에 청년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 온 과정이나 이걸 토대로 청년들이 지역에 올 수 있는 거점을 만들겠다라는 것들을 또 이렇게 금방 파악하시는 분들은 또 이해를 잘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청년 마을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첫 번째 질문하셨던 이제 ○○라는 지역과의 연결은 저희의 모델이 저는 모든 지역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 특히 △△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쌓아 올렸던 그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저희는 거기에 정말 되게 식상한 표현이지만 숟가락 하나 얹은 그 기반이 있어서 저희는 뭐 누가 했더라도 가능할 정도의 지역 안에서 에너지가 있었고 다만 그걸 토대로 청년이라는 것을 청년이라는 아젠다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그냥 먼저 말을 꺼낸 것이다.(자문회의 E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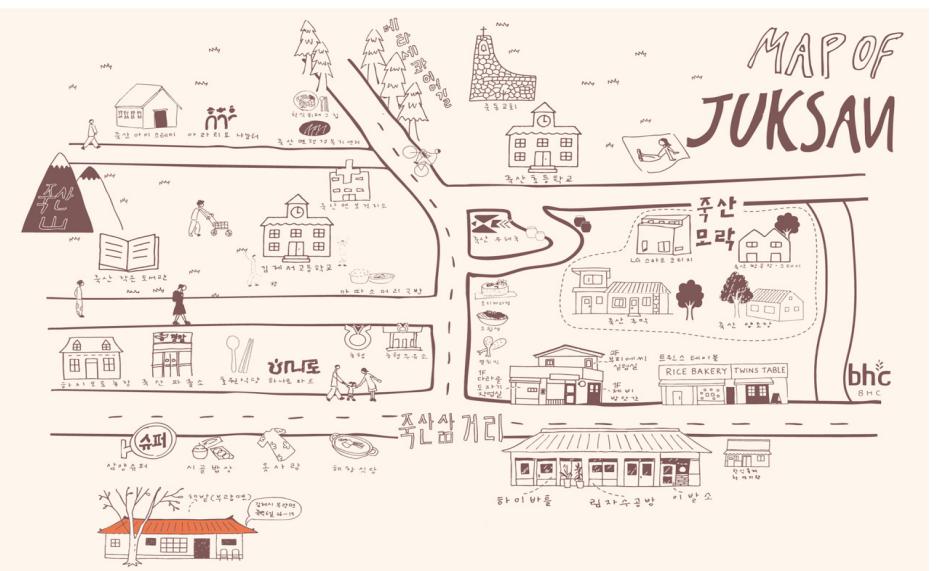
▌자생적 상권·관계형 — 가게가 '하나씩' 늘어 거리가 되다

○ 농촌의 작은 마을에 자리잡은 청년단체의 경우, 행정의 개입 없이 자발적 청년 소상공인들이 한 거리에 연쇄적으로 가게를 오픈하며 자생적 상권을 형성한 특이 모델임

- 협동조합 구조를 취하되 자금 구조를 통합하여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각자의 비즈니스가 각자 살아남되 거리를 공유하며 시너지를 낸다"는 개별성 기반의 느슨한 네트워크 체계를 통해 생존 확률을 극대화함
- 카페를 시작으로 공방·와인숍·소품샵이 자생적으로 들어서며 손님이 거리를 찾게되었고, 협동조합은 공동 수익을 나누지 않음
- 각각의 비즈니스의 역량과 노력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였고, 특히 이 지역 내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던 F&B 매장이 문을 닫는 과정은 개인의 노력의 중요성을 더 극명하게 보여줌

우리는 각자 잘 살면 된다. 저희 협동조합은 그래요. 각자 가게들이 잘 버텨주시면 된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역할은 ....각자가 각자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가져가니까 그래서 더 각자가 자기 가게에 목숨 걸고 열심히 하는 거지 이게 모두 공동체의 것이었다고 하면.... (심층면접 A-7)

근데 안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 리모델링 지원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온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창업을 지원할 때 그런 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만 지원을 해줘도 그 사람들한테는 초기 창업자한테는 진짜 큰 도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폐양조장이랑 구옥이 있어.... 리모델링을 해주고 무상 임대 10년 해주는 조건으로 너네 들어오겠냐라고 해서 그분들도 이제 OK 하신 거예요....방송프로그램 ○○○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방송 막 나가고 초반에 한 달 정도는 거기 진짜 매출이 6천만원 이런 식으로 엄청 잘 됐거든요. 근데 운영을 잘 못하신 거죠....그래서 항상 드는 생각이 아 운영하는 주체가 정말 중요하구나 운영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해주고 하는 거가.... (심층면접 A-6)



자료: 죽산면 죽산 삶거리 지도

[그림 4-2] 죽산면 죽산 삶거리 지도

○ 세 유형 모두 성공의 핵심은 자금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 자본(주민·시니어·동료 기업과의 연결)과 그것을 매개한 사람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음

○ 한 청년마을 대표는 '청년은 돈 때문에 오지 않는다, 정착의 제일 큰 요소는 네트워크였다'고 결론짓고, 다른 대표자 역시 '작은 사업이라도 같이 해 본 사람이 더 잘 정착한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음

> 저희는 그 모집 자체가 약간 활동하는 청년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는 청년들을 모집하는 게 콘셉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청년 마을과 조금 다르게 쉼 이런 자리를 저희는 다 뺐었어요. 쉬려면 이리 오지 마라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여기서 자리 잡는 제일 요소 중에 하나는 네트워크였습니다.(심층면접 A-2)
>
> (정착의 가능성은) 그렇게 뭔가 작은 사업이라도 같이 해 본 사람들이 인연을 맺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 좀 더 잘 정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심층면접 A-6).

4) 유형을 가로지르는 두 가지 관점 — 입지와 외부 유입

○ 앞의 세 유형이 성공 조건을 정태적으로 구분했다면, 개별 사례를 겹쳐 보면 전북형 지원 설계에 직접 활용 가능한 두 가지 다른 관점을 확인해 볼 수 있음

○ 첫째는 청년 활동가의 '입지 방식', 둘째는 지역 밖 인구를 끌어들이는 '외부 인구 유입'의 접점이며, 둘 다 성패 평가가 아니라 병렬 실험 가치가 있는 정책 선택지로 읽는 데 목적이 있음

▌두 갈래 입지 방식 — 노후 마을에 스며들기 vs 새 마을에 결합하기

○ 상업공간을 만드는 것에서는 유사하지만, 두 지역의 청년단체는 진입 공간의 성격과 지역민과의 화합 방식에서 뚜렷이 갈림

- 하나의 청년 단체는 ○○ △△면의 노후한 기존 마을로 진입해, 카페를 시작으로 공방·와인숍·소품샵이 하나씩 늘며 영역을 넓혀간 '스며들기' 방식임

> 가게가 이렇게 이 하나 하나 둘 셋 자꾸 생겼어요.... 마침 부부 두 분이 서울에서 계시다가 귀촌하셔서 동남쪽에 샵을 좀 차려서 하셨는데 그때 딱 재계약 기한이었기도 하고 여기에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해볼래 해서 이게 좀 하나 둘씩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손님들이 카페 오면 카페도 갔다가 공방도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너무 좋더라고요. (심층면접 A-6)

- 다른 하나의 경우는 은퇴·중장년 인문학 커뮤니티가 새로 조성한 □□ '서점마을'이라는 신생 공간에 청년 활동가가 하나의 행위자로 '결합'하는 방식임

> 여기 서점 마을에 있는 어른들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되게 좋은 어른들이 있고 어떤 이런 클러스터화된 문화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뭔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게 외롭지 않고 좀 나도 이렇게 너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출발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심층면접 A-4)

○ 두 방식의 장단점은 대칭적으로 나타남

- 스며들기 방식은 주변에 주유소·편의점·식당 등 기초 생활 인프라와 가깝다는 강점이 있으나, 임대료 인상·텃세 등 기존 주민과의 마찰 비용을 치름
- 결합하기 방식은 간섭하지 않고 곁을 내주는 환대 속에서 활동의 자율성을 누리나, 기반 산업·생활 인프라 부재로 외딴 관광지로 고립될 위험을 안음

○ 따라서 전북형 청년마을 설계는 두 유형을 단일 표준으로 수렴시키기보다, 지역 조건에 맞춰 차별적 지원 조합을 처방하는 입지 맞춤형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스며들기형에는 관계 완충·상권 연계를, 결합형에는 기반시설·산업 연계를 처방

▌외부 인구를 끌어들이는 두 접점 — 해외 청년 교류와 계절형 체류 프로그램

○ 산악지역에 위치한 두 개의 청년 거점은 지역 밖(해외·타지) 인구를 끌어들이는 서로 다른 경로를 보여줌

○ 한 단체의 대표는 개인적 인연(독일 보훔대학교 한국학 전공자)을 실마리로, 지방 접근 루트가 없던 해외 청년을 지역과 잇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천

- 한국 방문 중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을 벗어나, 소규모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외국인 청년이 주로 서구권에 몰려 있다는 관찰 위에서, 보훔대와의 초기 연계를 서구권 대상 로컬 체험 프로그램으로 확장 중임

> 그래서 그 학교에서도 너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근데 지방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지방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없으니까 그 학교에 있는 교수님과 연결해서... 서구권에 있는 그런 외국인 청년들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만 네 기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오셨고 근데 지방으로 눈을 돌리시는 문화권의 분들은 거의 서구권이 많으시더라고요. (심층면접 A-8)

○ 다른 단체의 경우는 단체의 메인 활동과 연계하여 계절형 체류 프로그램이라는 다른 접점을 펼침

- 2025년 청년마을 사업으로 연계·운영한 계절학기의 반응이 좋아, 올해는 ○○군이 이를 '썸머 캠퍼스'로 사업화해 여러 팀이 학생을 받으려고 계획 중임

- 대학생이 여름 동안 워킹홀리데이처럼 지역에 머물며 워크숍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단발성 이벤트를 넘어 일정 기간 살아보는 체류 인구를 창출하고, 이후 타 대학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확장 가능

>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인력 충원하는 거 (힘들어요),,, 작년에 계절 학기를 청년마을 통해서 어떻게 연계가 돼서 운영을 했는데 너무 좋아서 올해 또 학생들 2명 장수군에서 사업을 올해 이제 받아요....작년에 이제 시범적으로 했던 거를 했던 거를 사업화를 해서 저희 팀 말고도 총 4팀이 받는다고 들었었고 학생들 워크숍 여름에 워킹 홀리데이처럼 오는 프로그램으로 (심층면접 A-9)

○ 유사한 산악지형에 위치해 있지만, 메인 프로그램의 지향이 다른 두 주체가 지리적으로 인접해,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자원을 주고받는 협업의 모습을 보임

- 트레일러닝으로 체류 인구를 모으는 청년 단체와 백패킹·로컬푸드를 지향하는 단체는 각각 달리기와 백패킹을 맡는 방식으로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기 시작함

- 자신의 활동지역을 넘어서 타 지역에 가서 한쪽은 트레일러닝을 다른 팀은 백패킹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방식임

○ 다만, 이러한 계절형 체류 프로그램의 확대는 유입 청년들의 살 거주지(집) 부족 문제로 나타남

- 여름 프로그램으로 온 청년이 더 머물며 정착하려 해도 ○○군에서는 내어줄 집이 없어, 체류가 정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살다 떠나는 구조가 반복됨

- 이러한 상황은 백패킹 청년팀이나 로컬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청년 단체에서도 공통으로 지적한 주거 난관과 같은 줄기로, 체류 인구를 정주로 전환하려면 주거를 포함한 정주 기반이 함께 내려와야 함을 시사

○ 국내·외를 넘나들며 외부 인구를 지역으로 불러오는 데까지는 성공하나, 그 인구를 머무르게 하는 조건은 여전히 부족해서, 이후 정주 기반 설계 과제로 남음

> 근데 이 사람 이 친구들이 여기 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장수가 집이 없어요. (심층면접 A-9)
>
> 우리는 일터와 삶의 터전을 같이 하고 싶은데... 그냥 우리는 어쨌든 여기에 사람이 살아야 이 마을이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하는데 (심층면접 A-7)

라. 연계 과정의 애로사항과 구조적 한계

○ 현장 활동가와 청년 정책 전문가들이 지적한 애로사항은 단순한 주체별 민원이 아니라, 정책 재원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모순과 연결됨

○ 이를 '제도·행정', '연계 구조', '정주 기반'의 3대 층위로 심층 분석함

1) 제도·행정 층위 — '단년도 회계주의'와 '청년 관리주의' 정산 행정

○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단년도 폐쇄주의 원칙은 청년 조직의 연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인 제도적 장벽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됨

- 1년 단위로 재정 교부와 정산이 반복됨에 따라, 매년 1~3월 공백기(Dead Zone)에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주체가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함
- 이는 청년 단체들을 단기 재정 수혜를 노리는 보조금 체리피커로 전락시키거나 중장기 기획력을 고갈시키는 주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

○ 공모사업의 법적 계약 형식(예: 용역 계약 등)과 무관하게, 실제 행정 전달체계는 청년 주체를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전락시키는 경직된 보조금 정산 지침을 요구하고 있음

- 영세 청년 기획자들은 영리·비영리의 유연한 비즈니스 믹스를 시도하지 못하고 서류 정산에 행정력을 전량 소진하는 번아웃 현상을 겪음
- 지자체가 기성 농촌 조직이나 취약계층 공동체 대비 청년층에게만 유독 가혹한 정산 증빙을 요구한다는 현장의 신뢰 결핍이 심각한 실정임

> 근데 이런 것들이 뭐 그냥 많이 따지자면은 굳이 그걸 비교하자면은 경로당에 월에 한 70만 원씩 지원금 나가거든요. 전부 무정산이에요. 그런 거 생각보다 많아요.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 해서 지금 이런 거를 꼬치꼬치 하는데....무정산을 하는데 특히 어르신들 관련된 거는 대부분 무정산이에요... (반면 청년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죠.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자문회의 EA-1)

○ 형식적 법인격 카테고리의 진입 장벽을 볼 수 있음. 행정은 인큐베이팅 능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단순 재정 교부 후 관리 편의성을 위해 초기 청년 소모임에게도 비영리민간단체나 임의단체 등 공식 법인격을 급조하도록 강제함

> 행정에 그냥 카테고리 법인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들어와야지만 하다못해 모임 하나 하려고 해도 임의 단체 만들어야 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장벽이라고 보거든요., 반대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 애들만 돈을 버는 그쵸 말 그대로 청년 관련해서 창업 사업들 엄청 많은 거 아실 거예요. (자문회의 EA-1)

○ 인구감소지역 현장에서 인적 관계망 자체의 결핍으로 인해 기초 3인 공동체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해 진입 단계에서 탈락하는 제도와 현장 간의 극심한 미스매치가 관찰되기도 함

> 저도 예전에 군에서 동아리 사업 청년 3인 이상 하면 100만 원 그거 지원하려고 했는데 저는 진짜 좀 그때 현타가 왔던 게 친구 3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21년도에 내려왔으면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친구가 없거든요. 친구 만들고 싶어 친구 만들고 싶고 그리고 왜냐면 찾고 싶어서 친구를 찾고 싶고 또 초대하고 싶어서
>
> ○○에 제가 내려왔을 때 저는 귀촌인데 모든 정책 세팅이 귀농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제가 막 4H 이런 데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또래는 비슷하지만 뭔가 가면 거기서 오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안 하지만 저를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 ○○에 왠지 나는 친구를 만나고 나는 사실 농부 농도 다른 거 같아 저는 농부 친구 만들고 싶거든요.....친구를 만난다 또래 세대를 만난다 하는 거는 되게 어려웠어요. (심층면접 A-4)

○ 더 근본적으로 '목표 부재'를 지적하기도 함. 청년사업이 명확한 목표의식 없이 타 시도 우수사례를 복제하다 '보조사업'으로 전락해 매번 축제·플리마켓만 반복된다는 지적을 들을 수 있음

> 그러니까 공동체 사업이나 협동조합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내가 수익을 창출하거나 일을 만들기 위한 단계를 만들어 간다면 청년들의 사업들은 대부분 청년들이 참여해요.
> '너네들 여기서 뭔가 해봐요'로 끝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목표가 최종적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문회의 EA-2)

2) 연계 구조 층위 — 트랙 단절, 후속 지원 공백, 파편화

○ 공모 단계의 심사는 극도로 촘촘하게 진행되나, 선정 이후 청년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할 '성장 촉진(컨설팅·경영 자문)' 예산은 부족한 것이 현실임

○ 고도의 역량을 가진 청년 단체라 할지라도 2~3년의 대형 공모 보조금(예: 청년마을 6억 원 규모)이 종료되는 순간, 시장 생존력을 갖추지 못한 채 조직이 공중분해되는 로컬 데스밸리(Death Valley) 구간에 무방비로 방치되는 것이 현실임

> 지금은 일부 보완이 됐지만, 이게 많은 사업이 그런데 사업을 주 선정하는 과정까지는 되게 꼼꼼하게 따지는데 그다음에는 정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막말로 해서 중간에 어떤 어려움들 애로를 해소를 해 줘야 되고 어떤 성장을 좀 촉진해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컨설팅 우리가 추천해 줄 테니까 붙여서 여기 좀 성장 지원해 주세요 했는데 이제 그 예산은... 컨설팅 성장 지원에 대한 예산은 없다 보니 사업이 끝나고 났을 때 이 팀이 과연 얼마나 성장했냐 결국은 사업기간동안 사업을 한 거 말고 성장이 없으니 또 다른 비슷한 단계의 사업들을 찾아 다닐 수밖에 없는 거인 거죠. (자문회의 EA-3)

> 왜냐하면 청년마을 친구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먹고살아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정책 보조금이 끝나면 다 그냥 와해되는 거예요. 그 지속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서... 청년 마을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기업도 똑같았는데, 그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고민하려면 사실은 이게 지금 되게 딥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기 고객 자기 시장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딥하게 컨설팅 됐어야 되는데 그게 컨설팅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돈만 받아가지고 그냥 커뮤니티 활동만 하는 거예요. (자문회의 E-2)

○ 2027년 계획에서는 변화하고 있으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타 부처 거대 재원(국고보조 규정 등)은 청년 정주 인프라라는 명목 하에 건물 신축 및 시설 하드웨어(H/W)에 비대하게 편중되어 집행되는 반면, 구축된 시설을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콘텐츠를 유통할 인재 양성 및 소프트웨어(S/W) 재원은 단년도 소모성 보조금으로 묶여 있어 양자 간의 재정적 연계가 원천 단절되어 있음

- 공간은 마련되었지만 정작 그 시설을 '운영할 사람'을 기르지 못해, 구조적 공백으로 공간은 비어 가고 사람은 임금 공백으로 떠나는 정책적 공동화의 메커니즘이 반복되는 실정임

이제 앞으로의 5년은 이제 어느 정도는 지역 안에서의 순환 구조로 가기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응이 필요하고 이게 사회연대경제랑 맞다아 있는 부분인거죠. 인구 감소 지역에 이제 그런 이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 기금 사업으로 의료나 복지나 이런 인프라를 구축을 했는데 실제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서비스 방법이 되는 거니까요. (자문회의 E-3)

- 또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을 통해 지역의 유입된 인구가 기존의 법에 막혀서 사용할 수 없었던 기반 시설에 대한 사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특례 활용 방안 발굴 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5년 동안의 인프라가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의미가 있었고 사실 인구 감소 지역에 뭔가를 사업을 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제 국고 보조 사업을 받으면 그 용도로만 쓰게 하고 이제 처분도 못하게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하려면은 계속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기존시설 못 쓰고, 심지어 놀고 있어도 못 쓰게.... 남해군이 그 특례를 활용해서 (사용 방안을 마련) (자문회의 E-3)

○ 도에서 운영하는 광역 청년센터와 기초 지자체 청년중간조직 간의 수직적·수평적 역할 분담 체계가 부재하여 유사한 공모사업이 난립하는 등 전달체계의 파편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남

광역과 기초 사이에서 청년 정책이 역할 분담 없이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광역은 큰 방향과 광역 단위의 연계 구조를 만들고, 기초는 생활권에 가까운 실행과 현장 관리를 맡는 식의 역할 구분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아이디어 공모사업, 네트워크 사업, 공간 사업 등이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비단 광역과 기초 뿐 아니라 중앙 단위의 사업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아이디어 공모사업, 네트워크 사업, 공간 사업 등이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비단 광역과 기초 뿐 아니라 중앙 단위의 사업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청년 입장에서는 비슷한 신청서와 결과보고서를 반복해서 쓰게 되고, 행정입장에서는 사업은 많지만 정책 효과는 없고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문회의 EA-2)

그래서 그러니까 청년 창업 정책이나 아니면 청년 활동 지능 지원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 있다기보다는 막 파편적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이제 어떤 지역마다의 청년센터랄지 그런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점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뭔가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현재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데가 있고 청년센터가 주도하는 데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자문회의 E-2)

○ 지역 생태계 전체가 담당 공무원 개인의 성향이나 민간 핵심 리더 1인의 역량에 과도하게 종속되는 개인의 역량에 의존의 취약성을 보이며 구조적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인사이동이나 핵심 인력 이탈 시 그동안 축적된 관계 자본이 즉각 증발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특정 로컬 기업의 도산이 지역 커뮤니티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로컬 생태계 특유의 고위험 구조를 형성하는 원인이 됨

> 기업이 망할 때 테크 기업이 망할 때랑 로컬 기업이 망할 때 다르더라. 테크 기업은 솔직히 얘기해서 테크 기업은 그 기업만 망해요. 왜냐하면 그 테크 기업은 그 이해관계자들이 사실은 이제 그 연구 베이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만 본인들이 망하고 있지. 근데 로컬 기업은 그 지역이 망하더라는 거야. 지역의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거야. 붕괴돼요. (자문회의 E-2)

3) 정주 기반 층위 — 주거 공급 절벽과 성과주의 평가지표의 역설

○ 체류 인구나 관계 인구를 실질적인 정주 인구로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거주할 수 있는 집의 부재가 가장 큰 병목 지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농촌 지역 내 빈집 비율은 통계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사회의 폐쇄성과 재산권 처분 기피 경향으로 인해 외지 청년이 임대·매매할 수 있는 양질의 주거 자원이 시장에 공급되지 못하는 원천적 차단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근데 외지 사람들이 정말 정착할 때는 사는 곳이 없는 거 그게 제일 힘들겠구나. 이거 여기에서 살려고 하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시내에만 나가도 집 구하기 쉽지만 여기 ○○면에서 집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빈집이 많은데 그냥 어디 시골에 가든 다 똑같아요. 빈집을 내주시지 않아서 그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심층면접 A-7)

○ 농촌유학 등 정주 유입 전술이 일정 부분 작동하더라도 청년 학부모가 지역 내에서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직장이나 자립 비즈니스가 세트로 결합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종료와 동시에 도시로 재이탈하는 구조가 확인됨

- 주거와 일자리, 보육이 결합된 통합적 생활 인프라 패키지의 결핍이 청년들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됨

> 농촌 체험 유학 하는 청년 학부모가 청년이에요. 그 청년과 아이들이 3명이 들어가서 엄마랑 아이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저희가 고용을 해서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시스템화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 지역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직장도 필요한 거고, 이게 조금 뭔가 패키지화돼서 내려왔으면 (좋을 거 같아요) 아이들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부모들이 지역에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그리고 지역에 또 사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근데 이게 없으면 나가시더라고요. 딱 그 기간 끝나면 네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직장이라도 있으면 거기 안에서 또 사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소개도 받고, 그게 아니면은 그 사람들한테 지치고 또 어쨌든 간에 시골에 계신 분들은 외부분들이 오시면은 굉장히 뭔가를 많이 요구하시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거의 열정 페이 로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심층면접 A-8)

○ 정주율이나 유입팀 수 같은 단기 실적 중심의 정량 평가지표는 청년들이 지역 주민과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고 깊이 안착해 나가는 장기적인 시계열적 과정을 왜곡하기도 함

- 공공 지원사업 자문단의 성향에 따라 초기에는 공익적 커뮤니티 활동을 강요하다가 후반기에는 자생적 매출 증빙을 다그치는 등 행정의 일관성 없는 요구가 청년 조직의 장기적 방향성을 파괴하는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음

> 원래 1 2년 차 때는 안 들어왔었는데 그렇게 그게 이제 처음에 저희가 행안부 선정됐을 때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내렸던 멘토들이 했던 거는 너네 일 하지 마라 그게 이제 목공인데 목공을 최소화해라 그래서 거의 목공을 안 했습니다. 그때는 목궁을 못 했죠. 그러다가 이제 3년 차 때 행안부 멘토들이 바뀌면서 멘토들이 갑자기 왜 너네 목공을 안 하냐 (심층면접 A-2)
>
>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줬어 그러면 너희가 정착률 얼마 나와야 돼 생활인구 얼마 늘려야 돼 무슨 공간 조성해야 돼 자꾸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방향이 조금 맞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진짜 청년이 지역에 와서 이 지역과 관계를 맺고, 타지역 사람이 여기 와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런 경험이라든지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성과 면에서 자꾸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자문회의 E-1)

○ 지역 청년단체 활동 지원 담당자는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주요 구성원이 일부 다르면 규정상 다른 단체로 판단하여 중복 심사 및 수혜를 거를 수 없는 보조금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하고 있음

- 도·시·군 사업을 중복 수령하는 이른바 '보조사업 헌터'들의 행태가 신규 청년 조직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자생력 확보 의지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예를 들어 규정상에는 대표는 같지만 주요 구성원들이 일부 다르면 이거는 그냥 다른 단체로 봐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서류로 말을 하니까 두 군데 들어오면 그냥 어차피 심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심사위원이 봤을 때 이거 괜찮다 그러면 그냥 선정되는 거죠. (자문회의 E-1)

○ 심층면접에 참여한 청년단체 중 한 명은 이러한 보조금 의존증과 편법 수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정산 절차를 한층 더 까다롭게 설계하고 엄격하게 강화해야만' 불필요한 보조금 의존과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자립을 유도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제언을 내놓고 있음

> 대표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돈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야 보조금 사업에서 편법이라는 걸 안 배우고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보조금 사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은 더 쓰기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산이 어려워야 보조금을 안 받죠. 근데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심층면접 A-2)

3. 시사점

○ 본 장은 청년 활동가 9명에 대한 심층면접과 정책·중간조직·전문가 6명의 자문을 통해, 도내 청년단체의 성장 경로와 그 과정에서 정책 연계가 끊기는 지점을 분석하였음

○ 앞 절의 세 갈래 진단 “비설계적 성장(나항), 관계 자본(다항), 세 층위(라항)”로부터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경로 지정형 연계’에서 ‘사업 간 환승 구조’로

○ 행정의 관점에서 청년공동체 활성화에서 생생아이디어를 거쳐 전북 청년마을로 이어지는 단계적 지원 라인은 정합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 청년단체의 실제 성장 경로는 이 선로를 순차적으로 이동한 결과가 아니라 주체가 자기 조건에 맞는 사업을 스스로 탐색하고 이어붙인 결과에 가까웠으며, 이는 네 갈래 성장 경로(모범적 단계 연계형·소액 디딤돌 누적형·주무부처 선택형·외부 진입형)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됨

○ 특히 주무부처 선택형과 외부 진입형은 행정이 상정한 라인을 의도적으로 우회하거나 아예 거치지 않은 경우로서, 이는 청년단체가 행정의 설계를 따르지 못한 실패가 아니라 자신의 조건에 맞지 않는 경로를 배제한 주체적 판단의 결과로 해석되어야 함

○ 이러한 관찰이 사업 간 연계 설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재검토가 요구되는 대상은 연계 일반이 아니라 행정이 청년의 경로를 미리 지정해 두고 그 순서대로 이동할 것을 전제하는 방식의 연계라고 할 수 있음

○ 정책의 과제는 단선적 성장 궤도를 더 정교하게 다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지금 자신의 단계에서 다음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인하고 필요할 때 갈아탈 수 있도록 사업 간 환승 구조를 갖추는 데 있으며, 이때 연계의 기본 틀은 유지되면서도 그 안에서 경로를 결정할 권한은 청년에게 남게 됨

○ 환승이 가능해지려면 도 사업만이 아니라 중앙부처와 시군, 민간 재원까지 하나의 지도 위에 놓여야 하며, 실제로 성장한 사례들이 예외 없이 여러 부처의 사업을 가로질러 이동하였다는 점은 연계의 단위가 도의 사업 계열을 넘어서야 함을 보여줌

○ 환승 구조는 정보 탐색 역량과 기획서 작성 능력을 갖춘 소수의 청년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할 위험을 내포하므로, 접근성의 제고는 정보와 관계 자본을 갖추지 못한 청년을 선제적으로 찾아 나서는 발굴 체계 및 역량 격차를 보정하는 매개 장치와 반드시 함께 설계되어야 함

○ 인적 관계망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일정한 역량을 요구한다는 점은 현장에서도 확인되나, 이는 진입하지 못한 청년의 역량 부족으로 귀속시킬 문제가 아니라 진입의 경로가 사적 관계에 의존하도록 방치되어 온 구조의 문제로 보아야 함

▌성공의 선행 조건: 자금보다 관계 자본

○ 지역자원 결합형과 기존 커뮤니티 토대형, 자생적 상권 관계형의 세 유형 모두에서 안착의 결정적 요인은 투입된 재정의 규모가 아니라 주민·시니어·동료 기업과의 연결, 그리고 그 관계를 매개한 사람의 존재였으며 “정착의 제일 큰 요소는 네트워크였다"(A-2)는 진술이 이를 압축함

○ 관계 자본의 원천은 상당 부분 청년단체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진입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조건이었으며, 은퇴·중장년 인문학 커뮤니티가 조성해 둔 문화적 토대 위에 결합한 사례에서 당사자 스스로 그 위에 숟가락을 얹었다고 표현한 대목이 이를 보여줌

○ 관계 자본의 형성을 우연의 영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으며, 정책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은 관계의 내용인 반면 정책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은 관계로 진입하는 경로, 즉 정보와 참여 기회 그리고 이를 중개할 매개자의 존재임

○ 선행 관계 자본이 형성되어 있던 지역은 대체로 오랜 기간에 걸쳐 주민과 외부인을 잇는 활동이 축적되어 온 곳이었으며, 이는 관계 자본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축적을 가능하게 한 시간과 매개자가 먼저 존재하였음을 의미함

○ 관계 자본이 부족한 경우 인적 관계망의 결핍으로 3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해 소액의 동아리 지원마저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관계 자본이 축적된 지역에는 정책이 얹힐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정책이 진입할 발판조차 없다는 비대칭을

드러냄

○ 이러한 비대칭에 대한 대응은 지원의 양을 차등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원의 방식과 내용을 달리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관계 자본이 축적된 지역에는 주체적 기획의 확장을 지원하고 취약한 지역에는 관계 형성의 기회와 기본 생활 기반의 확보를 먼저 배치하는 순서가 요구됨

○ 청년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매개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과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 그리고 귀향한 청년을 구분하지 않은 채 관계 자본을 논하면 요구되는 지원의 성격이 흐려지며, 사례 서술에서 청년 유형을 병기하여 이 차이를 드러낼 필요가 있음

○ 일자리와 자본, 문화 인프라의 상대적 열위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전북의 여건을 고려하면 관계는 전북 청년정책이 기댈 수 있는 상대적 강점에 해당하며, 정책의 우선순위 또한 인프라의 확충보다 관계가 형성될 시간과 장을 확보하는 데 두어질 필요가 있음

▌연계 단절: 새로운 사업 추가가 아닌 세 층위의 구조적 해결이 우선

○ 제도·행정 층위에서 확인된 단년도 회계주의와 1~3월 공백기, 청년에게만 유독 가혹하게 적용되는 정산 증빙, 초기 소모임에까지 법인격을 요구하는 진입 장벽은 개별 사업의 운영상 미비가 아니라 지방재정 운용 원칙과 행정 편의에서 파생된 구조적 조건임

○ 연계 구조 층위에서 확인된 선정 이후 성장 촉진 예산의 부재, 대형 보조금 종료 시점의 데스밸리, 하드웨어 재원과 소프트웨어 재원의 원천적 분리, 광역-기초 간 역할 분담 부재로 인한 전달체계 파편화 역시 특정 사업의 설계 오류가 아니라 재원 성격과 행정 층위 간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임

○ 정주 기반 층위에서 확인된 주거 공급 절벽은 통계상 빈집이 존재함에도 원주민의 재산권 처분 기피로 시장에 공급되지 않는 구조적 차단에서 비롯되며, 이는 청년정책 소관 부서의 사업 설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임

○ 세 층위 가운데 정주 기반 층위에서 확인된 주거 공급의 절벽은 청년이 지역과 관계를 맺은 이후에도 그 관계가 거주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병목으로 작동하며, 관계를 맺은 청년의 상당수가 정주로 넘어가지 못한 채 왕래에 머무는 원인이 개별 사업의 성패가 아니라 이 층위에 있음을 보여줌

○ 반대로 전환이 실제로 일어난 사례에서는 활동을 이어갈 공간과 거처가 사업 종료 이전에 확보되어 있었다는 조건이 공통적으로 관찰되므로, 관계인구가 정주인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거의 선확보 여부가 촉진 요인으로 작동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됨

○ 본 연구는 동일 대상을 시차를 두고 관찰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검증된 전환 기제가 아니라 사례에 기반한 가설로 제시하며, 그 검증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김

▌청년정책의 본질: '목표 부재'가 아닌 '결정 주체의 부재'

○ 현장에서는 청년사업이 명확한 목표의식 없이 타 시도 우수사례를 복제하다 매번 축제·플리마켓만 반복하는 보조사업으로 전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청년들의 사업들은 대부분 '너네들 여기서 뭔가 해봐요'로 끝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최종적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EA-2)라는 진술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줌

○ 이러한 문제는 목표 설정 권한을 청년에게 위임한 결과가 아니라 행정도 청년도 목표를 정하지 않은 채 사업이 집행된 결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성과 요구는 정주율·생활인구·공간 조성 등 행정이 사후적으로 부과하는 지표로 나타나면서 청년 조직의 방향성이 외부에서 규정되는 역설이 발생함

○ 실제로 행안부 멘토 교체에 따라 "목공을 하지 마라"에서 "왜 목공을 안 하냐"로 요구가 뒤집힌 사례(A-2)는, 청년 조직의 활동 방향이 자기 기획이 아니라 지원 체계 내 개별 행위자의 성향에 좌우되는 구조를 드러냄

○ 청년정책의 과제는 청년에게 목표를 부과하거나 반대로 목표 없이 방치하는 양극단이 아니라, 청년이 자기 활동의 목표를 스스로 규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 지원을 조합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데 있음을 시사함

○ 목표를 청년이 정한다는 것과 목표가 아예 없다는 것을 행정적으로 구별하는 기준은 목표 설정의 주체와 시점이 사전에 명시되어 있는가에 있으며, 청년이 일정 기간 안에 활동 목표를 수립하여 중간지원조직과 합의하는 절차 자체를 사업의 이행 단계로 규정하면 목표 설정권은 청년에게 남기면서도 예산 집행의 책무성은 함께 확보됨

○ 행정이 사전에 확정해야 할 대상을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에서 어떤 과정을 이행할 것인가로 옮기는 것이 관건이며, 이는 목표의 부과와 방치라는 양자택일을 벗어나는 실무적 경로라고 할 수 있음

▌행정 독립성의 재정의: '재정 의존도'에서 '기획 주도성'으로

○ 이 연구에서는 청년단체를 자체 매출 비중에 따라 생존주체·과도기형 주체·한계주체로 구분하였으나, 사례를 대입하면 재정 의존도와 활동의 자율성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됨

○ 보조금을 거부하고 행정 현물지원(MOU)만으로 비즈니스 자율성을 확보한 사례(A-9)에서는 재정 독립이 곧 기획 독립으로 이어졌으나, 청년창업농에서 출발해 귀농창업자금·농식품 가공 육성지원·사회적농업을 거쳐 청년마을로 정책자금을 층층이 쌓아 올린 사례(A-8)에서는 재정 의존도가 높음에도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일관되게 주체가 결정하고, 적절히 활용한 경험을 보여주고 있음

○ 반면, 보조금이 본업 매출을 감소시키는 구축 효과를 겪은 사례(A-2)에서는 재정 관계가 기획을 침식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바, 이는 재정 의존도만으로는 청년단체의 자율성을 판별할 수 없음을 보여줌

○ 청년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얼마나 보조금에 의존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활동의 내용을 결정하는가'에 두어야 하며, 재정 의존과 기획 종속을 등치시키는 관점은 A-8과 같은 주체적 정책 활용 사례를 의존적 조직으로 오 분류할 위험이 있음

○ 생존주체와 과도기형 주체, 한계주체라는 구분은 조사 시점의 상태를 기술한 잠정적 분류로서, 청년단체의 위치는 사업의 선정과 종료, 인력의 이동, 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직에 고정적으로 부여되는 속성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됨

○ 유형에 따라 지원의 내용을 배정하는 방식보다 조직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가에 따라 지원의 방식을 조정하는 접근이 요구되며, 이는 성장 경로를 단계와 이동으로 파악한 앞 절의 분석과 맥을 같이 함

▌청년정책의 새로운 지향점: 개인의 성장을 넘어 지역의 변화로

○ 청년단체의 성패를 가른 조건 대부분은 청년 자신의 역량 바깥에 있었으며, 선행 관계 자본의 유무, 주거 공급 여부, 재정 운용 방식, 담당자·멘토의 성향은 모두 청년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였음

○ 현행 정책은 성과 미달의 책임을 청년 조직의 역량 부족으로 귀속시키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구조적 조건을 개인의 노력 문제로 치환하는 결과를 낳음

○ 청년정책의 성공을 평가하는 관점의 전환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왜 자꾸 청년에게만 애쓰고 맞추라고 하는가?, 품을 내주는 것은 이미 가진 쪽이어야 한다”(EA-3)는 진술이며, 이는 청년정책이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인 동시에 본질적으로는 지역이 청년에게 자리를 내어주도록 지역 자신을 변화시키는 정책임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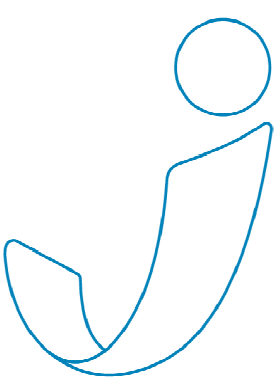
○ 앞에서 언급된 접근의 보장과 관계 자본, 구조적 층위, 결정 주체, 분석틀의 재설계라는 진단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청년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정책에서 청년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지역의 조건을 바꾸는 정책으로의 이동임

○ 이 시점에서의 주체성은 개인에게 홀로서기를 요구하는 자조의 논리가 아니라 청년이 주체가 될 수 없게 만든 구조적 조건을 걷어내는 일로 정의되어야 하며, 이 연구의 제언은 책임을 청년 개인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고, 구조에 대한 개선을 중시함

제5장

결론: 전북형 청년 정착 경로와 정책 제언

1. 전북형 청년지원 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
2. 전략별 대표사업과 실행 기반



제5장 결론: 전북형 청년 정착 경로와 정책 제언

1. 전북형 청년지원 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

○ 이 장에서는 제4장의 실증 결과를 받아 전북이 나아가야 할 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먼저 제시하고, 그 전략을 이루는 정책 방향과 이를 실행 단위로 옮긴 대표사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제도 기반을 차례로 서술함

○ 연구에서 살펴본 청년정책의 과제는 개별 사업의 확대가 아니라 사업과 사업, 청년과 지역을 잇는 연계의 재설계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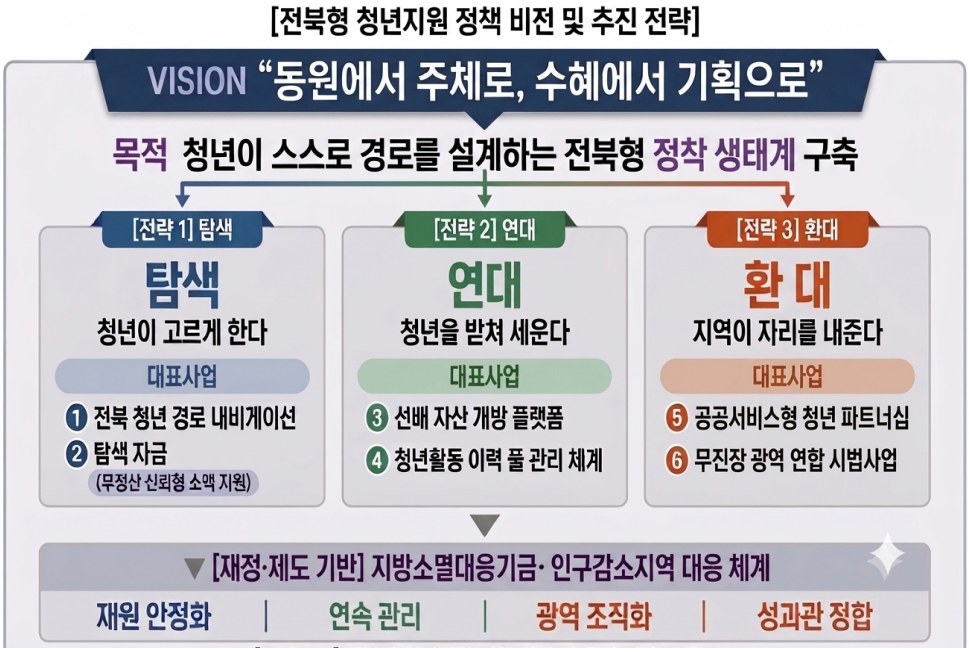
○ 청년단체의 성장이 행정의 설계를 따른 결과가 아니라 청년이 스스로 사업을 탐색하고 이어 붙인 결과였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유기적 연계의 실질적 조건이 행정적 접속의 정교화가 아니라 청년이 주체로 서는 데 있음을 보여줌

○ 이에 근거하여 정책의 방향을 하나의 비전과 세 갈래 전략으로 정리하고, 각 전략에 해당하는 정책 방향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인구감소지역 대응 체계라는 재정·제도 기반 위에 정렬함. 제언 전반을 관통하는 원칙은 하나로서, 청년정책의 과제는 개별 사업의 확대가 아니라 사업과 사업, 청년과 지역을 잇는 연계의 재설계에 있음

1) 정책 비전과 목적

○ 이 연구를 통해 청년단체의 성장이 행정의 설계를 따른 결과가 아니라 청년이 스스로 사업을 탐색하고 이어 붙인 결과였고, 이는 유기적 연계의 실질적 조건이 행정적 접속의 정교화가 아니라 청년이 주체로 서는 데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앞에서 제시한 일곱 갈래 제언을 하나의 비전과 세 갈래 전략으로 재구성하고, 각 전략별 대표사업을 제시하며, 이를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인구감소지역 대응 체계라는 재정·제도 기반 위에 정렬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1] 전북형 청년지원 정책 비전 및 추진 전략 체계도

▌비전 — 동원에서 주체로, 수혜에서 기획으로

○ 청년 활동 정책의 비전은 청년을 지역소멸 대응의 수단으로 동원하거나 지원의 수혜자로 규정해 온 관점에서 벗어나, 청년이 자기 활동의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 정책 자원을 조합하는 기획자로 서게 하는 데 있음

- 심층면접 분석에서 보여진 것처럼, 청년단체가 이미 행정의 설계와 무관하게 스스로 경로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에 근거하며, 정책의 과제는 없던 주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작동하는 주체성이 소수의 역량과 인맥에 의존하지 않도록 조건을 갖추는 데 있음

- 청년정책의 성패가 청년의 노력이 아니라 선행 관계 자본·주거·재정 운용 방식 등 청년이 통제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갈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변화의 대상은 청년이 아니라 지역 자신임

▌목적 — 청년이 스스로 경로를 설계하는 전북형 정착 생태계 구축

○ 전북이 지향해야 하는 정착 생태계는 청년을 정해진 단계 라인에 태워 이동시키는 체계가 아니라, 청년이 자신의 조건과 지향에 맞는 경로를 선택하고 조합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이 실패로 규정되지 않는 환경임

- 산업적 자립, 사회연대경제로의 전환, 지역 내 역할 수행, 관계인구로의 이행은 상하 관계에 있는 단계가 아니라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병렬적 도착지로 인정되어야 함

2) 전략 1. 탐색: 청년이 고르게 한다

가) 지원사업의 유기적 재구성 — 전북자치도를 넘어 전체 사업을 하나의 지도로

○ 지원의 유기성을 전북도 사업을 넘어 중앙부처·시군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차원에서 재구성하여야 함

- 현장의 청년단체는 전북도가 상정한 공동체활성화 → 생생아이디어 → 전북형 청년마을 → 행정안전부 청년마을이라는 단일 라인을 따라 성장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앙부처·도·시군·민간 재원을 스스로 접촉하며 자기 조건에 맞는 사업을 이어 붙였고, 그 연계의 비설계성이 곧 성장의 실제였음

- 문제는 이러한 라인들이 서로 다른 트랙으로 병존하면서 청년은 매번 유사한 신청서를 반복해 작성하고 행정은 부서별로 중복설계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점임

○ 새로운 사업을 더하기보다 이미 축적된 부처·시군의 기존 정책사업(농업·창업·소상공인·문화 등)과 청년활동을 연결하는 연계 지도를 그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예산을 절감하고 기존 사업의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다수의 부서에서 기 수행되고 있는 유사 사업을 다시 설계하는 중복을 제거하는 효과

- 청년이 지금 자신의 단계에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부처·도·시군 사업을 통합한 경로 안내와 후속 사업 매칭을 중간지원조직이 제공하여야 함

- 청년이 사업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 목표를 향해 사업을 도구로 활용하게 만드는 데

있으며, 이는 심층면접 과정에서 확인한 주체적 정책 활용 사례를 정책적으로 일반화하는 작업에 해당함

○ 연계 지도는 청년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선로가 아니라 지금의 단계에서 다음으로 갈 아탈 수 있는 선택지의 목록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연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경로를 결정할 권한은 청년에게 남겨 두는 환승 구조가 이 제언의 요체임

○ 연계의 대상은 청년정책에 한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성장한 사례들이 농업과 창업, 소상공인, 문화 등 기존 정책사업을 가로질러 이동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부처와 시군의 기존 사업을 청년단체의 활동 단계별로 대응시킨 매칭표를 함께 마련함

○ 지원의 트랙은 저변 확대와 성장 지원의 두 갈래로 나누어, 저변 트랙은 소액을 여러 주체에게 길게 이어 경험의 축적 자체를 성과로 삼고 성장 트랙은 중앙부처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단계적 육성을 목표로 삼음

○ 두 트랙을 분리하면 접근성의 보장과 성장 경로의 설계라는 서로 다른 요구를 하나의 사업 안에서 절충하지 않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 설계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청년의 저변을 넓히는 일과 대표 주체를 길러내는 일이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져 온 현행 구조의 한계 해소를 기대할 수 있음

○ 경로 안내는 중간지원조직의 중개와 청년의 직접 탐색을 함께 두되, 추천의 기준을 사업의 선정 가능성이 아니라 청년이 설정한 목표와의 정합성에 두어야 하며, 정보 접근에 취약한 청년에게는 스스로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 나서는 발굴 활동이 병행되어야 함

나) 지원의 크기가 아닌 방식의 재설계 — 단계별 차등·무정산 신뢰형·정산 간소화

○ 지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크기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말고, “어떻게 주고 어떻게 정산하느냐”라는 방식을 손질하여야 함

- 현장에서 반복 확인된 세 가지 어긋남 — 규모의 역설, 정산의 경직성, 신뢰의 부재 — 은 모두 집행 방식의 문제이며, 이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개선 가능

▌규모의 역설을 고려한 단계별 차등 설계

○ 같은 연 2억원이라는 지원 금액이라도 이미 인프라를 갖춘 안정기 주체에게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 반면, 인프라가 없는 신생팀에게는 감당하기 벅찬 무게로 작용함

- 초기에 큰 규모를 받은 팀이 오히려 지역 내 시기·질투 등의 부작용에 시달린다는 증언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지원 규모가 관계 자본을 훼손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지원금액의 확대에 치중하기보다는 성장 단계에 맞춰 규모를 차등화하고, 초기에는 작은 사업을 많이 그리고 길게 잇는 편이 유효함

○ 차등의 기준은 조직의 유형이 아니라 활동의 단계와 지원의 규모에 두어야 하며, 청년단체의 위치는 사업의 선정과 종료에 따라 한 해 사이에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유형으로 분류된 조직에 특정한 지원을 배정하기보다 조직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에 따라 지원의 방식을 조정하는 편이 현실에 부합함

▌초기 세팅 단계의 무정산 신뢰형 소액 지원

○ 정산이 필요 없이 소액을 지원하고 성과만 보고받는 방식은 청년에게 공적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책임감을 높인 것으로 회고됨

-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전면 대체는 불가하나, 관계 형성·실험 단계에서는 과도한 증빙 부담 없이 가능성을 탐색할 시간을 확보해 주는 효과를 지님

- 특히, 경로당 등 고령층 대상 지원이 대부분 무정산으로 집행되는 것과 대비하여 청년에게만 가혹한 증빙이 요구된다는 현장의 신뢰 결핍을 완화하는 의미를 지님

▌규모 확대 단계의 정산 간소화

○ 규모가 커지는 단계의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접근하여야 함

- 형식상 용역인 청년마을 사업비가 보조금처럼 엄격하게 정산되고, 1~3월 인건비 공백이나 구성원만 교체하여 중복 수령하는 구조가 자생력 의지를 함께 잠식하고 있음

- 정산을 없애면 위험이 담당 공무원에게 전가되므로 폐지는 불가하나, 정산 단계를 간소화하는 표준 매뉴얼과 AI기반 정산 지원 플랫폼을 마련하면 청년과 공무원 양측의 부

담·리스크를 함께 낮출 수 있음

- 다만 현장에서는 정산을 오히려 엄격히 하여야 보조금 의존과 도덕적 해이가 줄어든다는 상반된 제언도 제기된 바, 무정산과 정산 강화는 대립이 아니라 지원 단계·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함

○ 무정산과 정산 강화라는 양자택일 바깥에 제3의 선택지가 존재할 수도 있으며, 활동비의 사용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결제 수단을 지급하면 청년은 별도의 정산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도 행정은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어 양측의 부담이 함께 줄어드니, 이런 방식에 대한 고려도 필요

○ 처음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정산은 행정과 회계의 체계를 익히는 과정이기도 하므로, 무정산 트랙을 운영하더라도 정산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교육을 함께 제공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할 때의 부담을 미리 낮춤

○ 무정산 방식은 정산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에게 옮겨 가는 구조를 낳으므로, 적용 대상 사업과 지원 한도, 사후 확인의 방식, 담당자의 면책 근거를 포함한 내부 통제 기준의 마련이 사업 설계에 선행되어야 하며, 이 기준 없이 무정산을 확대하는 것은 위험을 현장에 떠넘기는 결과가 됨

3) 전략 2. 연대: 청년을 받쳐 세운다

가) 사회연대경제로의 진입 지원 — 교육과 지역 인정 단체의 영역 확대

○ 현재 행정안전부 및 다수의 중앙부처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하여 강조하는 사회연대경제의 가능성에 전북의 청년단체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경로를 열어야 함

-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복지·생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면 그 서비스를 운영할 지역 내 주체(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가 반드시 필요함

- 실제로는 현장의 청년단체 다수는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법인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 자체가 부족하여 사회연대경제로의 전환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음

○ 단기적으로는 청년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회연대경제 교육(협동조합·사회적기업 설립,

법인격 전환, 사회적 가치 측정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사회적경제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전북형 사회연대경제의 범주와 정의를 마련하되, 그 사이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행안부 청년마을·전북형 청년마을 등 지역 인정 단체가 사회연대경제의 파트너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하여야 함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심사에서 이들 지역 인정 단체를 사회연대경제 파트너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하면, 별도의 대규모 제도 신설 없이도 참여 유인을 형성할 수 있음

- 초기 소모임에까지 법인격을 요구하는 현행 진입 장벽을 함께 완화하지 않으면, 사회연대경제 전환 지원이 이미 법인격을 갖춘 소수 단체에만 편중될 우려가 있음

나) 청년을 받치는 매개 시스템 제도화 — 후속 연결·담당자 전문성·성장단계 보호

○ 지원의 초점을 청년 개인에서 그들을 받쳐주는 매개 시스템으로 옮겨야 함

- 성공의 공통분모가 자금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 자본과 그것을 매개한 사람이었던 만큼, 청년을 둘러싼 연결·전문성·보호 장치를 제도로 세우는 것이 지속가능성의 관건임

▌선정 이후를 잇는 후속 연결

○ 연계가 가장 크게 끊기는 지점은 선정까지가 아니라 선정 이후 지원이 끝나는 시점임

- 선정 심사는 촘촘하게 진행되나 종료 후 성장 촉진(컨설팅·협력) 예산이 없고, 대형 공모 종료 후의 데스밸리 구간을 받쳐주는 장치가 거의 없어 단체가 보조금과 함께 와해되고 있음

- 성과공유회를 각자의 성과 발표로 종료하지 말고 자금·판로·커뮤니티로 잇는 실질적 후속 연결을 설계하며, 거쳐간 팀을 지속 관리·연계하는 사후관리(풀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함

▌담당자의 연속성과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 같은 지원제도라도 지역마다 혹은 단체마다 결과가 갈리는 만큼, 청년 활동 생태계가 담당 공무원 한 명과 핵심 인물 한 명에 과도하게 좌우되는 취약성을 줄여야 함

- 행정 체계 안에서 청년정책 담당자가 2년가량 배워 안목이 트이면 인사이동으로 떠나 원점으로 돌아가는 구조, 사업 특성에 맞지 않는 멘토가 배정되어 사업의 방향이 왜곡되는 형식적 멘토링은 개선 대상임

- 멘토 교체에 따라 활동 방향이 정반대로 뒤집힌 사례는 청년 조직의 기획 주도성이 지원 체계 내 개별 행위자의 성향에 종속되는 구조를 드러내는바, 담당자 전문성의 축적을 뒷받침하는 인사 설계와 사업 유형별 전문 멘토단 구성이 요구됨

▌성장 단계의 공적 방패막이 (중장기 검토 과제)

○ 청년 창업이 정책자금을 넘어 민간 투자·융자 단계로 진입할 때 정보 우위를 악용하는 이른바 '블랙엔젤'이나 컨설턴트를 가장한 브로커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청년 창업 관련한 블랙엔젤 관련 부분은 아직 연구조차 드문 사각지대로서, 중장기 검토 과제로서 공적자금 매칭투자 구조를 통해 청년이 이러한 위험을 검증받고 완충할 수 있는 방패막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북이 지역성장펀드를 운영한 경험은 이 설계의 토대가 될 수 있으나, 제도 설계의 난도가 높은 만큼 신중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함

○ 매개 시스템의 강화는 중간지원조직의 역량과 처우가 전제되지 않으면 청년을 받치는 장치가 아니라 또 하나의 행정 창구를 만드는 결과로 귀결되므로, 인력의 고용 안정과 전문성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운영 구조의 정비가 기능의 확대에 선행되어야 함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행정의 보조금 관리와 위탁 사업을 대행하는 데 두지 않고, 청년의 활동을 행정의 언어로 옮겨 주는 완충 지대이자 청년을 각 분야의 전문 자원과 연결하는 중개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시군별 청년 인구의 규모와 센터의 운영 역량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므로 모든 시군에 동일한 기능을 요구하기보다, 광역이 담당할 기능과 기초가 담당할 기능을 구분하여 배치하고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광역이 직접 보완하는 방식을 병행함

○ 관계 자본과 관련하여 정책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은 관계의 내용이고 정책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은 관계로 진입하는 경로이므로, 매개 시스템의 과제는 관계를 만들어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형성될 시간과 장을 확보하고 그 진입을 중개할 사람을 두는 데 있음

○ 매개자를 배치하는 방식은 특정 개인에 대한 의존을 낳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축적된 것이 함께 사라지고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된다는 한계를 지니므로, 개인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과 함께 인맥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적 절차로 진입 경로를 보장하는 방향이 병행되어야 함

○ 선행 주체의 자산을 후발 주체에 개방하는 방식은 먼저 자리 잡은 쪽이 시혜적으로 자원을 나누어 주는 구도로 읽힐 수 있으므로, 개방의 대가를 공공이 보전하여 대등한 거래로 성립시키고 참여 여부의 결정을 양측 주체에게 맡기는 설계가 전제되어야 함

4) 전략 3. 환대: 지역이 자리를 내준다

가) 청년사업 목표의 확장 — 비즈니스 성공을 넘어 공공서비스형 연대로

○ 청년사업의 목표를 로컬 비즈니스의 성공과 정주라는 단일 경로에 가두지 말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여야 함

- 창업·매출로 자립하는 경로가 하나의 길이라면,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으로 가는 경로와 시군이 채우지 못하는 공공영역의 서비스를 청년이 대신 제공하는 경로 또한 정당한 목표로 인정되어야 함

○ 인구감소지역일수록 행정이 감당하지 못하는 돌봄·문화·생활서비스의 공백이 크고, 청년공동체가 이를 메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지원의 문법 자체가 달라져야 함

- 언젠가 보조금을 끊어 자립시킨다는 전제로 접근하면 공공서비스형 청년공동체는 수익모델의 부재 속에 소진되어 소멸하게 됨

- 대신 청년들이 자신의 활동 중 일정 부분은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자기 사업을 하는 지역의 항구적 파트너로 보고, 일정 정도의 지속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

와 청년 간의 연대·협력 관계를 구성하는 편이 지역서비스 활성화에 유리함

-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프라에서 그 인프라를 운영할 사람으로 무게를 옮겨가는 최근의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맞물림

○ 목표를 청년이 정한다는 것과 목표가 아예 없다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청년이 일정 기간 안에 활동 목표를 수립하여 중간지원조직과 합의하는 절차 자체를 사업의 이행 단계로 규정함으로써 목표의 다변화를 허용하면서도 예산 집행의 책무성을 함께 확보함

나) 정주를 넘어선 지역 경험 설계 — 실험하고 떠나도 좋은 기억이 되도록

○ 청년정책의 목표를 정주 인구의 지속에만 고정하지 말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인구감소지역 대응의 법정 목표조차 인구 유입이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과 활력 증진이며, 청년은 생애주기상 이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주만을 성과로 삼으면 대부분의 사업이 실패로 기록되는 결과를 낳음

- 인구감소지역에서 체류인구가 지역 소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이르는 만큼, 정주하지 않더라도 지역과 관계를 맺는 청년(관계·체류 인구)의 기여는 결코 작지 않음

○ 전북은 청년이 이곳에서 실험하고 떠나더라도 전북을 고향처럼 좋게 기억하고 자랑하게 만드는 지역이 되기를 지향하여야 함

- 기업의 고객 경험 설계에 빗댄 지역 경험 설계로서, 청년이 지역을 만나는 순간순간(첫 방문·활동·관계 형성·떠남)을 세밀하게 설계하는 작업을 의미함

- 좋은 경험을 남기고 떠난 청년은 관계인구로 남아 다시 찾고 지역을 알리며 때로 돌아오는바, 이탈을 실패로 규정하는 관점 자체가 재검토되어야 함

○ 성과지표는 정주율과 참여자 수 같은 기존의 정량 지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한 위에 경험과 서사의 축적을 확인하는 정성 지표를 함께 두는 방식으로 개편하며,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버리는 순간 정책의 책무성도 함께 흔들린다는 점에서 전환이 아니라 병행이 전제되어야 함

○ 정착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의 이전과 지속 거주라는 물리적 안착만이 아니라 지역과 관계를 맺고 왕래하는 생활인구와 관계인구의 지속성까지 넓은 의미의 정착에 포함함

○ 인구감소지역 대응 체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의 유입이 아니라 정주여건의 개선과 생활인구의 활력 증진을 법정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과 정합적이며, 기금의 활용 취지에 맞는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생활인구를 중심에 둔 지표 체계가 요구됨

○ 정성 지표가 성과 부진을 가리는 근거로 오용되지 않도록, 축적된 경험이 재참여와 로컬 창업, 정주 시도와 같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전환 지표를 함께 두고, 정성 지표는 언제나 정량 지표와 나란히 공개하여 부진이 가려지지 않도록 함

○ 서사가 풍부하게 축적되었음에도 어떠한 행동으로도 이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을 방어하는 근거가 아니라 정책이 실패하였다는 증거로 읽혀야 하며, 이 원칙을 지표 체계에 명시함으로써 정성 지표의 도입에 대한 재정당국과 의회의 우려에 대응할 수 있음

○ 생활인구 성과를 확인하는 정성 지표로는 지역 활동의 지속 여부와 후속 사업 참여율, 재참여율, 지역 내 관계망의 형성과 유지 정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정량 지표와의 가중치 배분은 별도의 지표 개발 과정을 통해 확정함

다) 지역민과 청년의 협업 관계 재정립 — 베풀 존재가 아니라 활력을 부르는 존재로

○ 청년과 지역민의 관계를 다시 설계하여,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방안이 아닌 서로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함

-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갈등은 지역사회가 청년을 향해 정부 돈을 받았으니 지역에 무언가를 베풀어야 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끊임없이 기여를 요구하는 데서 비롯됨
- 청년은 사업자로 진입한 것이지 봉사하러 온 것이 아님에도, 이 기대의 어긋남이 텃세·임대료 인상·비협조로 이어져 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전문가 역시 청년을 지원했으니 지역에 기여하라는 강요형 접근을 지양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음

- 청년은 지역에 빚진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시도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생산의 고리를 잇는 존재이며, 고령층만 남은 지역은 지속성이 없고 청년이 진입하여야 다음 세대로 이어짐

- 지역민과 지방정부는 청년을 협업의 동반자로 대하고 그 협업의 토대인 소통에 힘써야 하며, 마을은 이장을 통해 소통된다는 현장의 깨달음이나 주민 부녀회와 함께 만든 주먹밥이 대회의 정체성이 된 사례는 청년이 지역민을 존중하고 지역민이 청년을 환대할 때 비로소 관계 자본이 축적됨을 보여줌

○ 다만 이러한 협업은 공공이 강요하여 만들어지지 않고, 공공은 기본 인프라와 만남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뿐, 청년과 지역민이 공유하는 가치를 세우고 갈등을 조율하는 것은 지역 내 주체들의 몫일 수 밖에 없음

- 공공이 수행할 역할은 그 긴장을 환상 없이 이해하고, 청년을 향한 지역사회의 시선을 베풂의 요구에서 활력의 환대로 옮겨가도록 지역민 대상의 인식 개선과 소통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임

○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과 소통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청년정책이 청년을 바꾸는 동시에 지역을 바꾸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이 자리를 내어주도록 하는 일은 지역민의 인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거의 공급과 공간의 개방처럼 소관 부서가 다른 영역의 결정이 함께 움직여야 하므로 청년정책 부서 단독의 사업 설계를 넘어 통합적인 설계와 사업수행이 요청됨

2. 전략별 대표사업과 실행 기반

1) 전략별 대표사업

○ 제1절에서 제시한 세 전략을 실행 단위로 옮기기 위하여 각 전략마다 두 개씩 모두 여섯 개의 대표사업을 설계함

○ 각 대표사업은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와 그에 대한 해법, 실행에 앞서 갖추어야 할 조건과 기대되는 효과를 함께 제시하되, 문제에 대한 상세한 진단은 제1절의 해당 전략 부분을 따름

○ 대표사업 ①부터 ⑤까지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설계이고, 대표사업 ⑥은 생활권 단위 연합의 실행 가능성을 먼저 검증하여 전북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성격을 지님

▌[전략 1] 탐색 — 청년이 고르게 한다

○ 청년이 자기 목표에 따라 정책 자원을 선택·조합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보이게 하고 선택의 비용을 낮추는 것을 첫 번째 전략으로 삼음

- 전북자치도 사업 안에서만 유기성을 찾지 말고 중앙부처·시군·민간 재원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차원에서 연계 지도를 구성하되, 이는 청년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선로가 아니라 청년이 골라 쓰는 선택지의 목록으로 설계되어야 함
- 아울러 지원의 크기가 아니라 방식을 손질하여, 성장 단계에 맞춘 규모 차등과 정산 방식의 이원화를 통해 탐색의 비용을 낮춤

○ 이 전략은 지원사업 전체를 하나의 지도로 재구성하는 과제와 지원의 크기가 아니라 방식을 재설계하는 과제로 이루어지며, 두 과제는 선택지를 넓히는 일과 선택의 문턱을 낮추는 일로서 서로를 전제함

[표 5-1] 대표사업 ①: 전북 청년 경로 내비게이션

◆ 대표사업 ① **전북 청년 경로 내비게이션**
AI 기반 지원사업 추천 및 경로 탐색 시스템

[문제] 청년단체는 이미 스스로 사업을 탐색하고 접속해 왔으나, 그 탐색은 대표자 개인의 정보력과 기획서 작성 역량에 의존하였음

- 오랜 활동으로 구성원 다수가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 조직이 있는 반면, 인적 관계망이 없어 3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 사업의 존재를 알지 못한 청년이 병존함
- 중앙부처·도·시군·민간의 사업이 서로 다른 트랙으로 병존하여 청년은 자신의 단계에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음

[해법] 청년이 자신의 사업 구상·활동 단계·조직 조건을 입력하면 활용 가능한 지원사업·프로그램·컨설팅을 제안받는 AI 기반 경로 탐색 시스템을 구축함

- 탐색 범위는 청년정책에 한정하지 않고 농업·창업·소상공인·문화 등 기존 정책사업과 중앙부처·시군·민간 재원, 민간 컨설팅·교육 자원까지 포괄함
- 중간지원조직의 경로 안내와 배타적이지 않으나, 매개자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청년이 직접 탐색·판단한다는 점에서 주체성의 관점에서 구별되는 의의를 지님

[조건] 이 사업은 1단계(사업 정보 표준화·경로 데이터 축적)와 2단계(추천 알고리즘 구현)로 분리 추진하며, 1단계는 대표사업 ④ 청년활동 이력 풀(pool) 관리 체계와 동시 착수가 가능함

- 단기적으로는 사업 정보의 표준화와 경로·성과·중단 사유 데이터의 축적을, 중장기적으로는 추천 시스템의 구현을 단계적으로 추진함
- 추천의 기준을 사업 선정 가능성이 아니라 청년이 설정한 목표와의 정합성에 두어야 하며, 이 원칙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본 시스템은 자기 구상에 맞는 사업을 찾는 도구가 아니라 공고에 맞추어 구상을 조정하는 도구로 변질되어 이른바 보조사업 헌터 현상을 자동화·가속화할 위험이 있음

[효과] 소수에게 편중된 탐색 역량을 보편적 접근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미 작동하고 있는 청년의 주체적 정책 활용이 개인의 정보력과 인맥에 좌우되지 않도록 함

[표 5-2] 대표사업 ②: 탐색 자금

◆ 대표사업 ② **탐색 자금**
무정산 신뢰형 소액 지원

[문제] 경직된 정산 증빙이 영세 청년 기획자의 행정력을 소진시키고, 초기 관계 형성 단계의 실험을 위축시키고 있음

- 고령층 대상 지원의 상당수가 무정산으로 집행되는 것과 대비하여 청년에게만 유독 가혹한 증빙이 요구된다는 현장의 신뢰 결핍이 심각한 수준임
- 행정이 인큐베이팅 역량이 부재한 상태에서 관리 편의를 위해 초기 소모임에까지 법인격을 요구하여 진입 자체를 차단하고 있음

[해법] 초기 세팅·실험 단계에 한하여 정산 증빙 없이 소액을 지원하고 활동 결과만 보고받는 무정산 신뢰형 트랙을 별도로 설계함

- 법인격을 요구하지 않는 소규모 단위(3인 미만 포함)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인적 관계망이 부재한 인구감소지역 청년의 진입 장벽을 완화함
- 공적 자금의 교부를 통해 청년에게 공적 신뢰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책임감을 높이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현장의 회고에 근거함

[조건]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전면 대체는 불가하며, 규모가 확대되는 성장 단계에서는 정산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 매뉴얼과 정산 지원 플랫폼을 통한 간소화로 전환함

- 정산을 오히려 엄격히 하여야 보조금 의존과 도덕적 해이가 줄어든다는 상반된 현장 제언을 고려할 때, 무정산과 정산 강화는 대립 관계가 아니라 지원 단계·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함
- 구성원 일부만 교체하여 중복 수령하는 구조적 결함의 보완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무정산 확대가 중복 수혜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음

[효과] 당장의 생계 걱정 없이 가능성을 탐색할 시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청년이 사업 공고에 맞추어 활동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구상을 먼저 세울 수 있는 여지를 형성함

▌[전략 2] 연대 — 청년을 받쳐 세운다

○ 성공의 공통분모가 자금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 자본과 그것을 매개한 사람이었던 만큼, 지원의 초점을 청년 개인에서 청년을 받쳐주는 매개 시스템으로 옮기는 것을 두 번째 전략으로 삼음

- 담당 공무원 한 명과 핵심 인물 한 명에 생태계가 좌우되는 취약성을 줄이기 위하여 담당자 전문성의 축적을 뒷받침하는 인사 설계와 사업 유형별 전문 멘토단 구성을 추진함

-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복지·생활서비스를 공급할 지역 내 주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청년단체의 사회연대경제 진입을 단기적으로는 교육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전북형 범주 마련과 지역 인정 단체의 파트너 인정으로 지원함

○ 이 전략은 청년단체가 지역서비스의 공급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로의 진입 경로를 여는 과제와, 청년을 둘러싼 연결과 전문성과 보호 장치를 제도로 세우는 과제로 이루어짐

[표 5-3] 대표사업 ③: 선배 자산 개방 플랫폼

◆ 대표사업 ③	**선배 자산 개방 플랫폼** 선행 주체의 인프라·경험을 신생팀에 개방하는 바우처 체계

[문제] 청년단체의 안착을 가른 관계 자본은 대부분 진입 이전에 이미 축적되어 있던 선행 조건으로서, 그것이 없는 지역·주체에는 정책이 진입할 발판조차 없음

- 선행 사회적 자본 위에 결합한 주체가 스스로 "무주공산에서는 형성되지 않는다", "이미 쌓인 기반에 숟가락 하나 얹은 것"이라고 진술할 만큼, 성공 모델의 복제·이식 가능성에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함

- 반면 다년간 활동한 선배 팀은 장비·공간·수주 경험·행정 대응 노하우 등 실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 자산은 개별 조직 내부에 머물러 신생팀으로 이전되지 않음

[해법] 선배 청년단체가 보유한 유형·무형 자산을 신생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그 대가를 공공이 바우처로 보전하는 플랫폼을 구축함

- 개방 대상은 장비·공간 등 유형 자산에 한정하지 않고, 공동 입찰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수주 경험의 전수, 행정 대응 노하우, 지역 관계망의 소개까지 포괄함

- 이는 관계 자본이 부재한 주체에게 비빌 언덕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시도로서, 우연에 의존해 온 조건을 부분적으로나마 정책이 대신하려는 접근임

[조건] 자산 개방이 선배 팀의 부담이나 시혜적 관계로 귀결되지 않도록 정당한 대가 보전과 상호 호혜의 원칙이 전제되어야 함

- 행정이 장비·공간 지원을 사유화 프레임으로 인식하여 개방을 제약하는 관행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정비가 요구됨

- 관계 자본을 정책으로 이전할 수 있는가는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하며, 이 사업은 그 실효성을 검증하는 시범적 성격을 지님

[효과] 개별 조직에 갇힌 실전 역량을 지역 자산으로 전환하고, 신생팀의 안착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진입 단계의 격차를 완화함

[표 5-4] 대표사업 ④: 청년활동 이력 풀(pool) 관리 체계

◆ 대표사업 ④	**청년활동 이력 풀(pool) 관리 체계** 거쳐간 팀의 경로·성과·중단 사유를 축적하는 사후관리 체계

[문제] 공모 단계의 심사는 촘촘하나 선정 이후에는 정산 외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형 공모가 종료되는 순간 조직이 데스밸리 구간에 무방비로 방치됨

- 성장 촉진 예산의 부재로 사업 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한 것 외에 조직의 성장이 없어, 결국 유사한 단계의 사업을 반복해 찾아다니게 되는 구조가 형성됨

- 당해 연도 사업대상자 관리에 그쳐, 거쳐간 팀이 어떤 경로를 밟았는지, 무엇 때문에 중단하였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으며, 이는 성공 사례만 회자되고 중단 사례는 사라지는 편향을 낳음

[해법] 당해 연도 사업대상자 관리를 넘어, 거쳐간 팀의 경로·성과·중단 사유를 지속 축적·연계하는 사후관리(풀 관리) 체계를 구축함

- 성과공유회를 각자의 성과 발표로 종료하지 말고 자금·판로·커뮤니티로 잇는 실질적

후속 연결의 장으로 재설계함

- 데스밸리 구간의 성장 촉진(컨설팅·경영 자문) 예산을 별도로 배치하되, 초기에는 공익적 커뮤니티 활동을, 후반에는 자생적 매출 증빙을 요구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지원을 지양함

[조건] 데이터 축적이 청년단체의 추가 보고 부담이나 행정의 관리 업무 가중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최소 항목 원칙과 기존 정산·성과보고 자료의 재활용이 전제되어야 함

- 중단·이탈한 팀의 데이터가 낙인이나 불이익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활용 범위와 익명 처리 원칙이 사전에 확립되어야 함

[효과] 선정 이후의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지역 차원의 학습 자산을 형성함

▌[전략 3] 환대 — 지역이 자리를 내준다

○ 청년정책의 본령이 청년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청년에게 자리를 내어주도록 지역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있음을 세 번째 전략의 원칙으로 삼음

- 청년이 실험하고 떠나더라도 전북을 좋게 기억하고 자랑하게 만드는 지역 경험 설계를 지향하며, 이탈을 실패로 규정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성과지표를 정주율·참여자 수에서 경험과 서사의 축적으로 전환함

- 청년을 정부 지원을 받았으니 지역에 기여해야 하는 존재로 규정하는 시선을 활력을 불러오는 동반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역민 대상의 인식 개선과 소통 프로그램을 병행하되, 협업 자체는 공공이 강요하여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공공의 역할은 기본 인프라와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데 있음

○ 이 전략은 청년사업의 목표를 산업적 성공 바깥으로 넓히는 과제와 정주만을 성과로 삼지 않는 지역 경험 설계의 과제, 그리고 청년을 향한 지역사회의 시선을 베풂의 요구에서 활력의 환대로 옮기는 과제로 이루어짐

[표 5-5] 대표사업 ⑤: 공공서비스형 청년 파트너십

◆ 대표사업 ⑤ **공공서비스형 청년 파트너십**
자립 압박이 아닌 지속 계약으로 전환하는 별도 트랙

[문제] 청년사업의 목표가 로컬 비즈니스의 성공과 정주라는 단일 경로에 고정되어, 수익모델을 갖기 어려운 활동은 자립 실패로 규정됨

- 인구감소지역일수록 행정이 감당하지 못하는 돌봄·문화·생활서비스의 공백이 크고 청년공동체가 이를 메우고 있으나, 언젠가 보조금을 끊어 자립시킨다는 전제로 접근하면 이들은 소진되어 소멸함
- 기금으로 의료·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여도 이를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서비스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프라 중심 집행의 한계가 확인됨

[해법] 지역서비스를 공급하는 청년공동체를 자립 이행 대상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항구적 파트너로 규정하고, 지속 지원을 전제로 한 별도 트랙을 설계함

- 반은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고 반은 자기 사업을 하는 혼합형 모델을 정당한 유형으로 인정하며, 창업·매출 중심의 성과 요구를 적용하지 않음
- 사회연대경제 진입 교육과 결합하여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법인격 전환을 지원하되, 전환 자체를 목표가 아니라 선택지로 제시함

[조건] 지속 지원이 관행적 보조금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서비스 공급 실적에 근거한 계약 관계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는 시혜가 아니라 대가 지급의 성격을 지님

- 기금 가이드가 일반 운영비 보전을 제한하므로, 청년 활동을 프로그램·사업으로 구조화하여 전담인력 인건비와 운영 경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함

[효과] 행정이 감당하지 못하는 서비스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산업적 성공만을 유일한 도착지로 상정해 온 청년정책의 목표를 실질적으로 확장함

[표 5-6] 대표사업 ⑥: 무진장 광역 연합 시범사업

◆ 대표사업 ⑥ **무진장 광역 연합 시범사업**
생활권 단위 청년 활동 연합의 제도적 안착

[시범] 본 사업은 대표사업 ①~⑤의 도 전역 제도와 달리, 생활권 단위 연합의 실행 가능성을 선도적으로 검증하여 전북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시범 성격을 지님

[문제] 개별 시군에 분산된 청년단체가 고립된 점으로 존재하여 규모의 한계를 넘지 못하며, 광역과 기초 간 역할 분담 부재로 유사 공모사업이 난립함

- 인접한 청년 주체가 이미 자발적으로 교차 협업을 시작하였으나, 이러한 흐름을 지원 설계가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 체류 인구를 유입시키는 데 성공하여도 주거 부족으로 정주 전환이 차단되는 구조가 개별 시군의 역량으로는 해소되지 않음

[해법] 무주·진안·장수를 잇는 무진장 광역 구상을 시범사업으로 제도화하여, 지향이 다르나 자원이 상호 보완적인 인접 주체 간 교환·협업을 별도의 지원 항목으로 설계함

- 경쟁형 이벤트가 만든 체류 인구를 향유형 콘텐츠가 정주로 연장하고, 향유형이 축적한 숙박·로컬푸드 기반을 이벤트가 활용하는 상호 보완을 지원 설계에 담음
- 청년단체가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국립 산림치유원·지역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빈 자리를 메우는 방식을 병행함
- 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하되, 인구감소지역 간 연계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거점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인구감소지역을 함께 묶는 생활권 구조로 확장함

[조건] 광역 연합이 담당자의 의지에 좌우되지 않고 지속되려면 웰니스 관광 활성화 조례 등 제도적 기반과 결합되어야 함

- 이 사업은 탁상의 구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미 움트고 있는 흐름을 추인·확장하는 성격을 지니며, 도청에서 세 시군 관련 부서가 1차 회의를 개최한 단계에 있음
- 연합의 성과가 특정 시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자원 배분과 성과 귀속의 원칙이 사전에 합의되어야 함

[효과] 개별 공동체의 규모 한계를 보완하고 광역 단위의 비빌 언덕을 형성하며, 시군 경계를 넘는 청년 활동의 연합 모델을 전북 전역으로 확장하는 선례를 마련함

2) 재정·제도 기반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축으로

○ 세 전략과 그에 따른 여섯개의 대표사업을 실행 가능한 경로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인구감소지역 대응 체계를 재정·제도적 축으로 하는 네 가지 실천 방안을 제안함

○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프라 중심에서 그 인프라를 운영할 사람 중심으로 무게를 옮기고 사회연대경제 주체의 활성화에 주목하는 최근의 운용 기조와 정합적임

▌(재원 안정화) 프로그램 재원 구조화를 통해 활동 절벽 완화

○ 지방소멸대응기금 가이드가 기관의 일반 운영비·임직원 인건비 보전은 제한하되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필요한 인건비(전담인력·강사)와 경상비는 허용함에 따라, 청년공동체의 상근 인건비를 직접 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 활동을 프로그램·사업으로 구조화하여 그 전담인력·강사 인건비와 운영 경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함

○ 이를 통해 지원 종료와 동시에 활동이 단절되는 구조를 완화하되, 지원의 지속성은 개별 인건비 보전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다년도 연속 편성으로 확보하며, 이는 대표사업 ⑤ 공공서비스형 청년 파트너십의 재원 기반이 됨

▌(연속 관리) 실험-성장-안착 단계를 회계연도 단절 없이 관리

○ 다년도 투자계획 전환과 사업 계획 대비 집행률 관리 기준을 근거로, 단년도 예산 주기에 종속되지 않는 다년 지원 트랙을 마련함

○ 실험-성장-안착의 단계별 목표와 지원 강도를 사전 설계하되, 전략 1의 규모 차등 원칙에 따라 초기에는 대표사업 ②의 무정산 신뢰형으로, 성장 국면에서는 규모 확대와 정산 간소화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구성함

- 이때의 단계 설계는 청년이 반드시 통과하여야 할 선로가 아니라 청년이 자기 조건에 따라 선택·조합할 수 있는 선택지로 제시되어야 하며, 이는 대표사업 ①의 경로 탐색 지원과 결합될 때 실효를 지님

▌(광역 조직화) 시군 경계를 넘는 전북 차원의 청년 네트워크 조직

○ 연계·협력 사업 발굴로 확대된 광역지원계정 기능을 근거로, 개별 시군에 분산·고립된 청년 활동을 전북 광역 단위의 네트워크·중간지원 플랫폼으로 연결하며, 이는 대표사업 ③ 선배 자산 개방 플랫폼과 ⑥ 무진장 광역 연합 시범사업의 제도적 그릇으로 작동함

○ 14개 시군 청년센터의 완비와 도 단위 허브의 HR·데이터 조정 기능 확립을 통해 광역과 기초의 역할 분담 체계를 정립함

▌(성과관 정합) 경험·서사의 축적을 포착하는 평가 틀 설계

○ 정주율 등 단기 정량지표가 아니라 청년의 경험·관계 자산 축적을 성과로 측정하는 평가 틀을 전북이 먼저 마련하며, 이는 대표사업 ④ 청년활동 이력 풀(pool) 관리 체계가 축적하는 이력 데이터를 근거로 함

○ 이러한 시스템 마련으로 기금 배분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동시에, 본 연구가 제기한 성과관 전환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기반이 됨

- 다만 측정 가능한 지표를 측정 곤란한 것으로 대체하는 데 따르는 책무성 약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성적 가치를 관찰 가능한 형태로 구조화하고 지역 유형(산업·일자리형/소비·관광형)에 따라 지표를 차등 설계하는 후속 작업이 병행되어야 함

3)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과제

○ 이 연구는 조사 대상을 청년마을 사업 수행 단체로 집중함으로써 여러 정책을 거쳐온 성장 과정 전반을 추적할 수 있었으나, 동시에 다음의 한계를 지님

- 청년마을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이미 일정 수준의 기획 역량과 관계 자본을 갖춘 주체이므로, 지원사업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청년이나 활동을 중단하고 지역을 떠난 청년의 경험은 충분히 포착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성공 사례 편향의 가능성을 남김

- 관계 자본이 부재한 이른바 무주공산 지역에 대한 정책적 처방은 본 연구가 답하지 못한 과제로 남으며, 대표사업 ③ 선배 자산 개방 플랫폼은 그 한계를 우회하려는 시범적 시도일 뿐 근본적 해답은 아님

○ 이 연구에서 제기한 성과관 전환과 정책 설계 방향을 실행 가능한 제도로 옮기기 위하여, 다음의 과제가 후속 연구로 필요함

▌경험·서사의 축적을 포착하는 평가틀의 구체적 설계

○ 성과지표를 정주율·참여자 수에서 경험과 서사의 축적으로 전환하는 방향은 본 연구가 제시하였으나, 그 구체적 설계와 정성적 가치의 측정 방법론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섬

- 측정 가능한 지표를 측정 곤란한 것으로 대체하는 데 따르는 책무성 약화 우려를 해소하려면, 정성적 가치를 관찰 가능한 형태로 구조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아울러 지역 유형(산업·일자리형/소비·관광형)에 따라 지표를 차등 설계하는 후속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표사업 ④가 축적하는 이력 데이터를 근거로 삼을 수 있음

▌관계 자본의 정책적 이전 가능성 검증

○ 청년단체의 안착을 가른 관계 자본이 대부분 진입 이전에 이미 축적된 선행 조건이었다는 이 연구의 진단은, 그렇다면 그것을 정책이 대신 만들어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남김

- 대표사업 ③ 선배 자산 개방 플랫폼은 이 질문에 대한 시범적 응답으로서, 그 실효성에 대한 후속 평가가 요구됨

- 특히, 유형 자산(장비·공간)의 개방과 무형 자산(수주 경험·행정 대응 노하우·지역 관계망)의 이전은 성격이 상이하므로, 각각의 이전 가능성과 조건을 구분하여 검증하여야 함

▌포착되지 못한 경험의 추적

○ 지원사업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과 중단·이탈한 청년의 경험은 본 연구가 다루지 못하였으나, 정책 설계에는 성공 사례보다 오히려 결정적인 정보일 수 있음

- 대표사업 ④ 청년활동 이력 풀 관리 체계가 중단 사유 데이터를 축적하기 시작하면, 이를 기반으로 한 후속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4) 나가며

○ 확인한 것은 청년단체의 성패를 가른 조건 대부분이 청년 자신의 역량 바깥에 있었다는 사실이며, 선행 관계 자본의 유무, 주거 공급 여부, 재정 운용 방식, 담당자와 멘토의 성향은 모두 청년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였음

○ 현행 정책이 성과 미달의 책임을 청년 조직의 역량 부족으로 귀속시켜 온 경향을 고려할 때, 청년정책의 본령은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을 이해하고 청년에게 자리를 내어주도록 지역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있음

○ 탐색·연대·환대의 세 전략과 여섯 대표사업이 지향하는 종착점은 결국 하나로 모이는 바, 청년을 더 애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청년에게 자리를 내어주도록 스스로를 바꾸는 것이며, 청년이 통제할 수 없는 조건이 성패를 갈랐다는 이 연구의 실증에 비추어 볼 때, 품을 내어주는 일은 이미 가진 쪽의 몫임

참 고 문 헌
REFERENCE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사회와 대학의 상생발전 방안 연구. 대구광역시.

공장공장. 2020. 괜찮아, 어차피 인생 반짝이야. ㈜공장공장.

관계부처합동. 2026. 국가창업시대 도약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발표 보도자료(26. 1. 30)

교육부. 2025.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전략(개정). 교육부 인재정책실.

김병국 외. 2020.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역공동체 주도 프로젝트 추진방안 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무조정실. 2025.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발표 보도자료(25. 12. 26.)

권수현. 2024. 지역 청년여성 페미니스트들의 비혼 결심과 공동체 형성의 의미: '경상도 비혼여성 공동체 WIT" 연구. 문화와 정치, 제8권2호.

김동영 외. 2024.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인구 유입 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https://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390

김상봉·나경태. 2022.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탐색 연구: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사회, 제13권2호.

김성하·황선아. 2023. 사라지는 지방, 지역 활력에서 답을 찾다! GRI 이슈 & 진단. 경기연구원.

김세연·김민석·김동일. 2022.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관적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13권3호.

김정숙·강영배. 2017.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혜진. 2021.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 도시청년들의 서천 정착기. 국토, 7월호.

박재민. 2025. '리틀파머' 공동체 브랜드 경험이 이주 청년 지역 정착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한 충남 서천군 청보리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31권4호.

박정선. 2019. 인구 감소지역에 청년 공동체 형성해 정착기반 마련. 행정안전부.

삶기술학교. 2021. 한산, 청년의 삶이 무르익는 마을: 2020 삶기술학교 결과보고집. 행정안전부.

성지은 외. 2022. 지역의 위기와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전환적 지역혁신정책' 연구. 과학기술정책

연구원(STEPI).
안수지 외. 2022.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분석. 국가예산정책처
우한수·남상민·신인철. 2023.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기초 연구. 통계청 통계개발원.
유럽연합(EU). 2019. *Youth for a Just Transition*. European Union.
이수행·이외희·김제선. 2015. 경기도 농촌공동체 발전 사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이웅규·김춘광. 2025. 협동조합 모델 기반 지방대학 혁신 방안 연구: 스페인 몬드라곤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제40권 제4호.
장지은·허경진. 2024. 청년 예술가들의 공동체 커머닝 실천: 대구 '팔현습지를 지키는 예술행동' 사례 연구. 문학과 환경, 제24권1호.
전북청년허브센터. 2025. 한눈에 보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2025 Guide Book
전북특별자치도. 2024. 2025-2029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계획서. 전북특별자치도.
정병순·김태욱·이봉조. 2016. 청년활동지원사업 운영모델 구축방안. 서울연구원.
조은정. 2026.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청주시.
주효진 외. 202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대한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의 정책분석평가. 지방정부연구, 제28권 제1호.
중소벤처기업부. 2025.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최예술·박미선·정소이. 2023.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 증진을 위한 청년 로컬창업 지원방안. 국토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2024. 해외 청년고용정책 실태 분석 및 정책 제언.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정치학회. 2023. 청년의 로컬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한국정치학회.
행정안전부. 2022. 청년마을 성과 분석을 통한 청년정착 및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25. 2025 청년마을 만들기 사례집 청춘의 꿈, 마을에 체크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26.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기본계획과 투자계획 설명회.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희망제작소·전주시. 2023. 전주시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2023~2027년) 최종보고서. 전주시.

정책연구 2026-15

청년 지원정책의 유기적 연계 실태와 전북형 정착 경로 지원 방안 연구

발 행 인 | 최 백 렬

발 행 일 | 2026년 7월 31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649-1 95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2026년도 주요 연구과제

기초연구

농촌 식품사막 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전북자치도 농촌지역 마을소멸 분석 및 대응 전략: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관세탄력성 분석 : 대미수출을 중심으로
2026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실태조사
전북형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기획연구

전북자치도 맞춤형 메디컬 푸드 산업 육성 방안 연구
전북 Physical AI 기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전략 연구
전북형 기본사회 추진전략 연구

정책연구

기후변화 및 변화의 시대 농업분야 대응 방안
전북형 수산업 특화 발전방안 연구
전북 지역균형발전 권역 협의체 구성 및 공동사무 발굴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성과관리 방안 연구
노화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방향 연구
전북사랑도민증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농촌주민 역량 강화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교육과정 체계화 방안
청년 정주형 지역사회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북형 농촌특화마을 클러스터 구축 연구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의 전략적 대응 방향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미식관광 활성화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실태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환경영향평가 협의모델 개발
전북 삼천리길 추진상황 점검 및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자치도 산불 예방 대책 및 대응체계 개선
제5차 섬발전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전북도 대응 방안 연구
익산미륵사지휴게소 고속도로 환승시설(EX-HUB) 타당성 검토
전북자치도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기초 연구
전북자치도 신중년 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육성사업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전북형 수출 지원 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전북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연구
전북형 지역거점 창업도시 모델 개발
전북과학기술원 기본방향 설정 연구
피지컬AI 기반 첨단 모빌리티 산업 전환을 위한 전북형 모델 마련 방안
전북형 재생에너지 기반 소득모델 마련 방안
전북자치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기본방향 연구
스마트농업 혁신 AX 거점 육성 전략 연구
동물헬스케어 산업 발전 방안
곤충산업의 그린바이오산업화 연계 발전방안 및 육성전략
자치단체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지원 방안 연구
전북사랑도민증 성과 분석 및 발전전략 수립 연구

현안연구

새만금 RE100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여건 기초조사
통합돌봄 시행 대비 전북형 통합돌봄 지원 실행계획 수립
전북체육역사기념관 설치 적합성 검토 연구
새만금국제공항 사회적·경제적 효과 분석
광역행정통합 특별법 연계 전북특별법 특례 추진방안 연구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jthink 전북연구원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95330
9 788966 126497
ISBN 978-89-6612-649-1 (PDF)